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4-01

연구보고 10-R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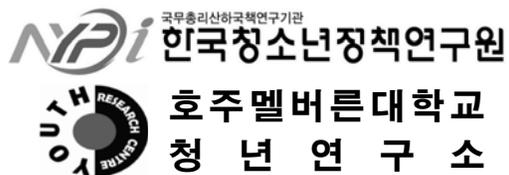
##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총괄보고서

책임연구원 : 안선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Hernan Cuervo(호주멜버른대학교·연구원)

Johanna Wyn (호주멜버른대학교·교수)

연구보조원 : 김지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0-34-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호주 멜버른대학교 청년연구소
10-34-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안선영 부연구위원 (총괄책임자)	
협력 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선임연구위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연구위원 성재민 책임연구위원
	호주 멜버른대학교 청년연구소	Hernan Cuervo 연구위원	Johanna Wyn 교수



# 연구 요약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성인기 과업은 일반적으로 학교교육 종결 후 취업, 경제적 독립, 부모로부터 분가,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형성 등을 가리킨다.
- 성인기 이행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방식 전반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인기 이행 양상의 변화 중에서도 성인기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가 지체 되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다.
- 성인기 이행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고등교육 확대, 청년노동시장의 변화, 여성의 교육 및 사회참여확대 등을 들 수 있다.
- 성인기 이행방식의 선택은 이후 개인의 삶의 모습과 그들이 살아갈 환경으로서의 사회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청년실업 문제의 심화와 출산율 저하와 같이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현상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논의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인기 이행 실태와 관련 요인들을 고찰하고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내용

- 성인기 이행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맥락적 요인
-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양상
- 외국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양상

- 성인기 이행 지원 정책

### 3. 연구결과

- 고학력화와 이로 인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불일치 현상은 취업, 결혼, 분가, 출산 등의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를 지연시키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의 저하 및 관찮은 일자리의 부족,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기업의 비정규직 및 경력직 선호 경향 등의 요인으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악화됨으로 인해 성인기 이행 시기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상황과 일과 가족을 양립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입장에 놓이는 여성들이 많고, 이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높은 주거비는 청년 세대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학과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높은 주거 비용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년 세대에게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진다.
- 일본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경로의 비선형화가 목격되고 있다. 청년세대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의존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대상이 30대 후반까지 확대되고 있다.
- 영국에서도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시기가 늦춰지고 교육 연한이 길어졌으나 청년의 고용 상태는 교육 수준에 상응하지 않고 있으며, 성

인기로의 이행 과정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성인기 이행 시기의 지연 현상과 경로의 비선형화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성인기 이행에 대한 사회계층간 격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캐나다의 성인기 이행 양상도 비선형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성인기 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성인기로의 진입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양극화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요인과 개인화 경향으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 출산, 육아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유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출생율 감소와 노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 호주의 사례연구를 통해 발견한 성인기 이행양상에 대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성인기 이행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형적 이행 양상을 가정한 정책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셋째, 사회경제적 배경 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지역에 따라 성인기 이행 양상이 다르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인기 이행 지원 정책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 목 차

I.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9
1) 1차년도 연구내용	9
2) 2011년 연구내용	10
3. 연구의 방법	11
1) 1차년도 연구방법	11
2) 2차년도 연구방법	12
II. 이론적 배경	15
1. 고등교육 확대	15
1) 고등교육 기회 확대 과정	16
2) 고등교육 보편화로 인한 성인기 이행의 지연	21
2. 청년 고용상황 관련 요인	23
1)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의 저하	23
2)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24
3) 기업의 비정규직 및 경력직 선호	24
3. 여성의 성인기 이행과정 변화	25
1) 여성의 교육 및 노동시장 참여 양상의 변화	26
2) 한국여성의 성인기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36
4. 청년층의 주거환경	44
1) 주거형태의 인구학적 분석	46
2) 불안정한 주거환경이 청년세대에게 주는 파급효과	52
III. 외국의 성인기 이행	59
1. 일본	59
1) 직업세계로의 이행	62
2) 결혼과 출산	67
3) 부모로부터의 자립 및 독립(분가)	70

4) 성인기 이행 지연의 원인 .....	73
5) 요약 .....	76
2. 영국 .....	79
1) 직업세계로의 이행 .....	81
2)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	92
3) 분가 .....	94
4) 청년의 이행시기 지연의 원인과 결과 .....	97
5) 요약 .....	99
3. 캐나다 .....	101
1) 직업세계로의 이행 .....	102
2) 결혼 및 출산 .....	109
3) 분가 .....	113
4) 성인기 이행 지연의 원인 .....	115
5) 요약 .....	118
<b>IV. 외국 사례 연구: 호주의 성인기 이행 .....</b>	<b>123</b>
1. 산업화 사회에서의 성인기 이행 .....	129
1) 중등교육의 대중화(mass secondary education)와 취업으로의 조기 이행 .....	130
2) 전일제 노동시장의 감소 및 교육의 사회통합 기능 ...	134
3) 사회공학에서 경제적 구조조정으로의 전환 .....	138
4) 요약 .....	148
2. 성인기 이행의 현대적 양상 .....	149
1)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	149
2) 교육정책 및 고등교육 확대 .....	153
3) 경로(pathways)라는 은유의 의미 .....	159
4) 새로운 정체성의 구축: 개인의 책임 전가 .....	162
5) 요약 .....	164
3.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 .....	165
1) 연구대상 .....	165
2) 연구방법 .....	166
3) 주요 개념 .....	168

4) 요약 .....	179
4. 젠더(gender)와 호주의 성인기 이행 .....	180
1) 교육 및 취업에서의 새로운 젠더 패턴 .....	182
2) 성인기 이행 경로(pathways)의 다양화 .....	189
3) 성인기 이행에서의 성별 간 불평등 .....	194
4) 요약 .....	196
5. 농촌 성인기 이행의 다양성 .....	198
1) 농촌에 남아있는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	199
2) 농촌지역의 변화 .....	201
3) 농촌 지역에서의 경제활동 .....	203
4) 농촌지역에서의 심화교육의 중요성 .....	208
5) 농촌의 청년 인재 유출 .....	211
6) 농촌 청년들의 고등교육 비용부담 .....	213
7) 요약 .....	216
6. 성인기 이행의 교차점 .....	217
1) 일(work)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	218
2) 희망과 현실 사이의 격차 .....	220
3) 결혼과 출산(parenthood)의 연기 .....	222
4) 삶의 균형 유지 .....	224
5) 건강과 웰빙의 중요성 .....	229
6) 요약 .....	231
7. 소결 .....	232
<b>V. 요약, 결론 및 정책제언 .....</b>	<b>239</b>
1. 요약 및 결론 .....	239
1) 요약 .....	239
2) 결론 .....	246
2. 정책제언 .....	248
1) 청년고용정책 .....	249
2) 일가정 양립정책 .....	250
3) 청년주거지원 정책 .....	250
<b>참고문헌 .....</b>	<b>252</b>

## 표 목차

<표 II-1>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한 한국의 연령별 취학률	16
<표 II-2> 연도별 고등교육 기관 발전 추이	18
<표 II-3> 연도별 정책 변화에 따른 기회 확대의 특징	19
<표 II-4> 학교급별 진학률	27
<표 II-5> 전공분야별 대학생 분포(2009년)	28
<표 II-6>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률	30
<표 II-7> 교육정도별·성별 임금격차	31
<표 II-8> 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인구	33
<표 II-9> 평균 초혼연령	37
<표 II-10> 수도권 지역의 주택 자가거주율의 인구 및 비율 요인 분해	47
<표 II-11> 수도권 지역의 주택 전세거주율의 인구 및 비율 요인 분해	48
<표 III-1> 일본에서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시대별 구분	61
<표 III-2> 대학 진학률의 추이	63
<표 III-3> 고졸자 및 대졸자 취업률 추이	64
<표 III-4> 일본 청년 실업률의 추이	65
<표 III-5> 일본 프리터의 추이	66
<표 III-6> 일본 니트(청년무업자)의 추이	67
<표 III-7> 연령별 미혼율의 추이	68
<표 III-8> 미혼자 가운데 결혼 희망자 비율의 추이	69
<표 III-9> 미혼여성 및 남성의 부모 동거 비율	71
<표 III-10> 미혼 여성의 취업상황	72
<표 III-11> 일본 저소득(연소득 250만엔) 청년 노동자의 비율	72
<표 III-12> 대학 또는 성인계속교육 재학생 수 1970~ 2006	84
<표 III-13> 16~34세 대학졸업(전문대, 직업교육 포함) 이상 인구비:	85
<표 III-14> 18-24세 실업률	87
<표 III-15> 16~29세 취업 현황: 1998년과 2008년 비교	89
<표 III-16> 18세 청년 근로자/학생 인구 비율 (2009년, 잉글랜드 지역)	90

<표 III-17>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출산율 추이 .....	93
<표 III-18> 자녀가 있는 청년층 비율 .....	94
<표 III-19>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비율 .....	97
<표 III-20> 18-34세 인구 특성 .....	103
<표 III-21> 15-29세 인구 교육 참여율 .....	106
<표 III-22> 15-29세 취업 인구별 교육 수준 .....	106
<표 III-23> 20-29세 결혼 또는 동거 커플 비율 .....	110
<표 III-24> 여성 1,000명당 출산율 .....	111
<표 IV-1> 1966년, 1975년 및 1984년 전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거나 실업 상태에 있거나 전일제 교육을 받는 15-19세의 비율 (%) .....	135
<표 IV-2> 성별 15-19세의 시간제 취업 비율(1966-1978년) ...	137
<표 IV-3> 15-19세의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1988-1998년) ...	152
<표 IV-4> 다음 진술은 '직업' 에 대한 나의 생각과 매우 가깝다 ...	174
<표 IV-5> 현재 일자리와 직업 사이의 관계(1996-2004) .....	175
<표 IV-6> 성별 및 학력별 개인적으로 중시한 영역 .....	185
<표 IV-7> 28세 성별, 부모학력별 교육 성취도(2002년, 28세)기준 .....	188
<표 IV-8> 1998년, 24세 당시 또는 가장 최근의 일자리 .....	189
<표 IV- 9> 2004년 30세일 때 고등교육 이수 상태에 따른 현재 또는 가장 최근의 일자리 (ANZSCO) .....	192
<표 IV-10> 2009년 36세 시 자녀유무에 따른 고용 상태 .....	195
<표 IV-11> 2009년 36세 시 결혼 상태에 따른 고용 상황 .....	195
<표 IV-12> 2006-2007 호주의 산업 .....	202
<표 IV-13> 2007-2008년 성별 사회경제지위별 지역별 선호하는 교육기관 .....	209
<표 IV-14> 2005, 2007-2008년 코호트 2 표본의 거주지역(n=942) .....	212
<표 IV-15> 성별 · 연령별 실제 시간사용과 희망하는 시간사용 비교 .....	220
<표 IV-16> 2002년 28세 및 2009년 35세일 때 성별에 따른 코호트 2의 가족관계상태 .....	224

<표 IV-17> 2007년 교육 기관에 따른 코호트 2 참여자의 근무상태 .... 227  
<표 IV-18> 2002-2009년 성별에 따른 코호트 1의 건강상태 비교  
..... 229

## 그림 목차

[그림 II-1] 연도별 취학률 추이 .....	17
[그림 II-2]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25세 이상 학생 인구 ..	22
[그림 II-3]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32
[그림 II-4] 연령계층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	34
[그림 II-5] 비정규직 비율 .....	35
[그림 II-6] 여성 월평균 임금 및 임금격차 .....	36
[그림 II-8] 성별 가구주 추이 .....	42
[그림 II-8] 서울시 연령별 거주형태 구성 (1985~2005) .....	50
[그림 II-9] 경기도 연령별 거주형태 구성 (1985~2005) .....	51
[그림 III-1] 20-29세 청년 부모와의 동거 비율 .....	114
[그림 IV-1] 1966-1978년 성별 15-19세의 전일제 취업 .....	136
[그림 IV-2] 1980-1997년 호주의 성별에 따른 15-19세의 실업률 .....	151
[그림 IV-3] 1980-2009년 12학년 학생 유지율 .....	157
[그림 IV-4] 1995-2009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생유지율 비교 .....	158
[그림 IV-5] 1999년 25세 시 성별 및 학력별 근로태도 .....	191
[그림 IV-6] 2007년 지역 별 고등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참여자 .....	199
[그림 IV-7] 2007년 19-20세 시 농촌 지역에 사는 코호트 2 참여자의 주요 고용 부문 .....	203
[그림 IV-8] 2007, 2008년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코호트 2 참여자 .....	226
[그림 IV-9] 2008년 20세 기준, 활동 별 시간활애에 대한 이상과 현실 의 비교 .....	227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한민국 민법은 만 19세를 성년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성인” 이라고 하면 단순히 일정 연령을 넘은 사람을 가리키기 보다는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즉 학교교육을 마친 뒤 안정된 직업을 갖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 중 어느 한 역할이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불완전한(defective)” 성인으로 여겨지고 주위의 “격정거리” 가 되기 쉽다 그러나 위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사람만을 성인으로 인정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30대 초반까지의 사람 중 “성인” 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그리고 그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성인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보통 학교교육 종결 후 취업, 경제적 독립, 부모로부터 분가,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형성 등을 가리킨다(Gauthier, 2007; Fussell, Gauthier & Evans, 2007; Smith, 2004).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은 성인이 수행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성인기 이행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학문적 관심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인기 이행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와, 성인기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와 방식 전반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성인기 이행에 대한 논의는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실업 문제의 심화와 출산율 저하와 같이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현상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논의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성인기 이행 양상의 변화 중에서도 성인기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가 지체되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다. 성인기로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요인은 다양하다. 먼저 고등교육 진학률의 증가로 인한 교육기간

의 연장이 많은 국가에서 성인기 이행 시기 지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Furstenberg, 2008).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중등교육만으로는 “괜찮은(decent)” 직장을 얻기가 어려워지게 되었고(Bell, Burtless, Gornick & Smeeding, 2007), 이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는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진학률은 2009년 현재 81.9%이며, 고등학교 졸업 직후 취업을 한 졸업자는 4.9%에 그쳤다. 1970년의 고등학교 졸업자 중 26.9%, 2000년에는 68.0%가(교육통계연보, 각 해당연도) 대학에 진학한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취업 시기를 지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경제적 독립 시기의 지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학교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취업 시기의 지연뿐 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심화된 것과(우석훈, 2007; Bell et al., 2007; Newman & Aptekar, 2007; Smith, 2005) 이전 세대에 비해 약화된 청년들의 경제적 입지가 성인기 이행 시기를 지체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Danziger & Rouse, 2007). 우리나라의 고용율 변화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힘들어졌음을 잘 보여준다.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고용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경제활동인구조사, 각해당연도). 그러나 연령대별로 고용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대에 취업을 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4세 이전 청년의 고용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경제적 자립 시기의 지연과 함께 결혼과 출산의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1990년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의 경우 27.79세, 여성의 경우 24.78세였던데 비해, 2008년의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1.38세, 여성은 28.32세로 나타나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각 해당연도).

---

1) 20-29세의 고용율은 2009년 현재 58.2%로 2000년의 60.1%에 비해 2% 가까이 감소하였다. 20-24세 인구의 고용율은 2009년 현재 44.6%로 2000년도의 52%에 비해 7.4% 감소한 수치이다. 이에 비해 25-29세 인구의 고용율은 2000년의 66.1%에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여 2009년에는 67.5%로 나타났다(경제활동인구조사, 각해당연도).

이와 더불어 출산 연령대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총인구조사 데이터에 의하면 10대와 20대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데 비해 30대와 40대의 출산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각 해당연도). 결혼시기의 지연은 출산 시기의 지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Wu & Li, 2005).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혼외 출산이 매우 적기 때문에 결혼시기와 출산시기의 지연은 출산율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승권, 2004; 은기수, 2001).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이는 사회 발전의 위협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은기수, 2005).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성인기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시기가 늦춰지고 있으며, 분가한 뒤 다시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합치는 현상(boomerang phenomenon)도 증가하고 있다(Fussell & Furstenberg, 2005; Yelowitz, 2007). 분가의 지연에 대해서도 다양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청년들의 분가 지연 현상을 고찰한 Molgat(2002)의 연구는 노동시장의 상황과 청년실업률이 분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Newman과 Aptekar(2007)와 Chiteji (2007)의 연구는 주택가격과 생활비, 공공주택 공급 정책, 고등교육 진학에 따른 학자금 대출 상환의 부담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분가가 지연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는데, 두 연구 결과 모두 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 크기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 분가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Hill & Holzer(2007)의 연구 결과는 노동시장 여건보다는 고등학교 재학 시 학업 성적, 일 경험, 독립적인 행동과 태도가 분가 여부와 시기에 더 중요한 요인을 작용함을 보여준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대학 진학과 노동시장 참여 비율이 증가한 것도 성인기 이행과정의 변화에 주요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Furstenberg, Rumbaut & Settersten, 2005). 여성들이 가정보다는 일을 통한 성취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의 변화가(정태연, 2006) 우리나라를 비롯

한 많은 나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결혼이나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손승영, 2005; 장혜경, 2004). 이에 반해 여성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경제력을 가질 때 희망 자녀수가 증가하며(공선영, 2006), 자녀 양육관련 인프라 개선과 성별간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여성의 고용안정이 출산력 증가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연구결과도(장지연, 2005) 있다. 이성용(2006)의 연구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남성의 경제력이 결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안정화”가 결혼과 출산 촉진에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성인기 이행 시기의 전반적인 지연 현상과 더불어 성인기 이행 순서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교육 종결, 취업, 분가, 결혼, 출산 순으로 이루어져 왔던 성인기 이행 순서가 더 이상 “당연하고” “표준화된” 순서가 아님이 여러 외국 연구에서 밝혀졌다(Osgood, Ruth, Eccles, Jacobs & Barber, 2005; Xenos, Achmad, Lin, Luis, Podhisita, Raymondo & Thapa, 2006). 예를 들어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진입 연령도 다양해지고 있다(Fitzpatrick & Turner, 2007). 또한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sup>2)</sup>

사회구조적, 맥락적 변화에 따른 성인기 이행과정의 전체적 변화뿐만 아니라(Fussell et al., 2007) 한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 성인기 이행방식의 차이도 학문적, 정책적 관심 영역이다. 특히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성인기 이행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Guldi, Page & Stevens, 2007; Osgood et al., 2005; Sandefur, Eggerling-Boeck & Park, 2005).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choeni & Ross, 2005).

---

2)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혼인 외 출생이 1981년의 경우 전체 출생의 1.12% 였던데 비해 2008년에는 1.80%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비율이 1960년에 5%였던데 비해 2005년에는 37%로 급증한(Danziger & Rouse, 2007) 미국과 비교해서는 그 정도가 미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을 예로 들어보자. 학력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의 영향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취업에 있어 학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학력 간 임금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은 교육을 매개로 성인이 이행에 점차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정배경은 가치관을 통하여 자녀의 성인이 이행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인이 이행 방식의 선택은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가치관과 연관이 있다.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청년들일수록 성인이 이행 시의 선택이 가져오는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Osgood et al., 2005). Furnsterberg(2008)는 성인이 이행 시 “바람직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자원에 있어 계층간 차이가 있으며, 이 시기의 결정은 누적적으로 이후의 삶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자녀들은 계획적인 출산을 할 확률이 낮고, 교육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조기에 학교교육을 종결하고 불안정한 직업을 얻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은 이후 불안정한 가정생활과 취약한 경제적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Aronson, 2008; Staff & Mortimer, 2008). Meier와 Allen(2008)도 낮은 계층의 청년들은 이른 시기에 동거나 성관계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경제적, 교육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성인이 이행에까지 연결된다고 보았다. Cocoran & Matsudaira(2005)의 연구도 부모가 부유할 경우 자녀가 높은 경제적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결과를 통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성인이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sup>3)</sup>

성인이 이행방식 선택은 이후 개인의 삶의 모습과 그들이 살아갈 환경으로서의 사회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결혼과 출산은 흔히 성인이 이행에서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데 (Fussell, Gauthier & Evans, 2007), 특히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현상

---

3)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배경의 자녀들이 가난을 벗어날 확률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ocoran & Matsudaira, 2005).

은 성인기 이행 양상이 단순히 개인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한정되지 않고 미래 사회의 모습과 긴밀히 연결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김승권(2004)은 만혼, 결혼기피 및 출산기피가 저출산의 주요인이며, 이 세 현상의 원인으로 경기침체 및 직장불안정, 결혼가치관 변화, 자녀양육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한 자녀 양육비 부담 증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여성의 자아육구 및 사회참여 증대, 자녀효용가치 감소, 이혼 및 가족해체 증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가 지속될 경우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며 이는 경제규모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여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김승권, 2004; 신인철, 2009) 또한 노동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부양능력이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노후보장에 대한 국가 재정 사용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안은진, 2008). 이렇게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방식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역할 수행 시기와 방식의 변화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방식으로 성인기 이행을 하는데 제약이 있어 불가피하게 과거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와 같이 그 원인이 비자발적인 데 있다면 희망하는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성인기 이행 시기의 지연과 방식의 변화가 개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며, 규범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삶의 방식의 출현으로 보아야 한다면 기존의 성인기 이행과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수정해야 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과 충돌하는 제도나 정책을 파악하여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로서 1차년도인 2010년에는 센서스데이터와 패널데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살피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성인기 이행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성인기 이행 실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양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대 사회의 불안정성이 청년들이 성

인기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방식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 1) 1차년도 연구내용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추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10년 연구에는 주관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외에 1개의 국내 협동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과 1개의 국외협동연구기관(호주멜버른대학교 청년연구소)이 참여하였다. 1차년도의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성인기 이행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맥락적 요인

성인기 이행 양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회맥락적 요인인 고등교육 확대, 청년노동시장의 여건 변화, 여성의 교육 및 사회 참여, 청년 주거환경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 (2) 외국의 성인기 이행 양상

우리나라에 비해 일찍 성인기 이행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온 일본, 영국, 캐나다의 성인기 이행을 선행연구 고찰과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세 국가의 성인기 이행과정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 형성, 분가, 성인기 이행 지연의 원인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 (3)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실증 분석

성인기 이행 유형,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실태,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 형성, 분가결정에 대하여 다양한 통계자료를 사용한 실증 분석을 하였다.

#### (4) 외국 사례 분석

호주 멜버른대학 청년연구소(Youth Research Centre)가 협동연구기관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여 호주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심층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사회경제적 맥락이 변화함에 따라 코호트별로 성인기 이행 양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여성과 농촌지역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과 그들이 당면하는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 사회 내에서도 성인기 이행 양상이 하위 집단별로 상이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밝혔다.

## 2) 2011년 연구내용

### (1) “성인됨(being an adult)”에 대한 주관적 의미

1차년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성인기 이행방식은 짧은 기간동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사회맥락적 요인에 기인한 이러한 이행방식의 변화는 관련 규범에 대한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청년세대가 “성인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전통적인 성인기 과업수행 여부와 “성인됨”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 짓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성장 세대들의 향후 성인기 이행 양상을 예측하고 정책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 (2) 성인기 이행에 대한 준비도

성인기 이행에 대한 심리적 준비도와 교육, 취업, 결혼, 출산, 주거마련 계획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들이 성인 이행의 과업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떤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구의 방법

#### 1) 1차년도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지연과 다양화 현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맥락적 요인, 주요 선진국의 성인기 이행 실태에 대해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 (2) 통계자료 분석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경로 분석, 학교-노동시장 이행 과정, 결혼과 출산 이행 양상, 분가의 패턴과 결정요인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구센서스, 노동패널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데이터 등을 분석하였다.

##### (3) 해외 사례 연구

호주멜버른대학교 청년연구소는 “라이프패턴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호주의 성인기 이행에 관련한 데이터를 20년 가까이 축적해왔다. 혼합방법론을 사용하여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를 모두 수집함으로써 호주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뢰할 만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고 평가 받는다. 이 기관의 연구진을 본 연구에 참여시킴으로써 호주의 성인기 이행 방식의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라이프패턴 프로젝트에 상응하는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일대일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나, 호주의 성인기 이행 변화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포함한 광범위한 측면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 2) 2차년도 연구방법

### (1) 청년세대 코호트별 포커스 그룹 인터뷰

우리나라의 청년세대를 코호트별로 나누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오늘날의 한국 청년들이 “성인됨(being an adult)”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교육, 취업, 결혼, 출산, 주거마련계획 등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 (2) 설문조사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식과 성인기 이행 준비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1. 고등교육 확대
2. 청년 노동시장의 약화
3. 여성의 성인기 이행 양상 변화
4. 청년의 주거환경



## II. 이론적 배경

성인기 이행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시기 지연과 이행 양상의 다양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맥락 요인인 고등교육의 확대, 청년노동시장 변화, 여성 성인기 이행 양상 변화, 청년층의 주거 환경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고등교육 확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만큼 대학교육이 보편화되었다.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균형 문제가 198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교육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전통적인 사회적 인식과 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투자재로서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재로서의 성격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김주섭, 2005) 고등교육 진학률이 낮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이 대부분의 사람의 삶의 여정에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대학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기간을 몇 년 더 연장한다는데 그 의미가 한정되지 않는다.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세계 이행으로 이행하는 시기를 지연시켜할 뿐만 아니라 학비와 제반 비용을 보호자에게 의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적 자립 시기의 지연은 다른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의 지연과 직결된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회 확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부의 대학정원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고찰한다. 또한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가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고등교육 기회 확대 과정

한국의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표 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제 비교에서도 3세-4세의 취원율과 30세 이상의 학교 재학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으나, 학령인구에 해당하는 15세-19세 그리고 20세-29세 연령 집단의 취학률은 OECD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15세-19세 연령 집단의 대부분이 학교에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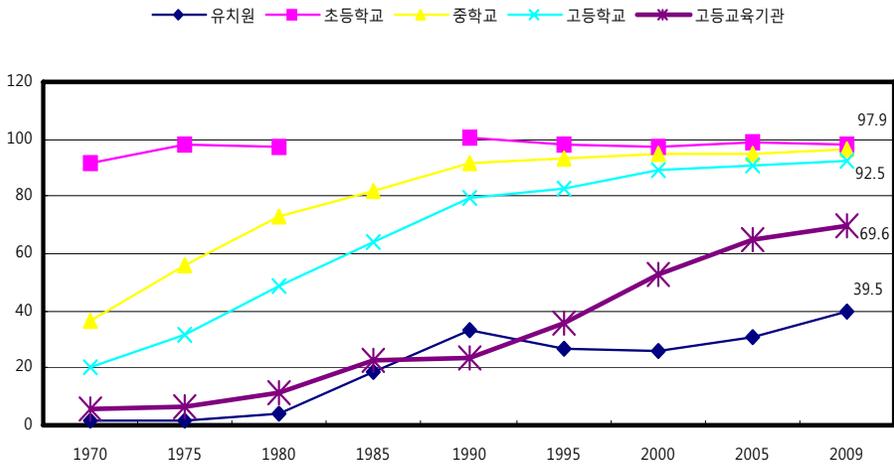
<표 II-1>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한 한국의 연령별 취학률

구분	3-4세 취원율	5-14세 취학률	15-19세 취학률	20-29세 취학률	30-39세 취학률	40세 이상 취학률
한국	27.3%	95.7%	86.8%	27.8%	2.1%	0.5%
OECD평균	71.2%	98.6%	81.5%	24.9%	5.9%	1.5%

출처: OECD(2009)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으로 이미 오래전에 완전 취학률에 달하고 있으며<sup>4)</sup>, 고등학교 취학률도 92.5%로 나타나 거의 의무교육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등교육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9년 현재 해당연령 인구 대비 취학률은 4년제 대학의 경우 46.7%, 전문대학의 경우 20.3%이며, 전체 고등교육 기관 합계 취학률은 69.6%에 달해 명실 공히 고등교육의 보편화(universal)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9년 현재 초등학교의 취학률 97.9%, 중학교 취학률은 96.2%이다.



- 주: 1. 취학률=(해당 연령에 속하는 재적학생수/취학적령 인구) X 100  
 2. 고등교육기관 취학적령인구는 만 18~21세임.  
 3. 합계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내대학 및 대학원이 포함됨  
 4. 재적 학생수는 취학 적령에 해당하는 재적학생수임

[그림 II-1] 연도별 취학률 추이

고등교육 기관 현황으로 보면, 1970년대에는 전문대학, 1980년대 이후에는 4년제 대학,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학과 교육대학, 전문대학 이외에 산업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등,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기관의 등장으로 급속하게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4년제 일반대학을 보면, 1985년 85개에서 1990년 107개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도 107개에서 161개로 급증하였다. 2009년 현재 4년제 대학의 수는 219개이다. 전문대학은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65개에서 128개로 거의 2배로 급증하였으며,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117개에서 159개로 10년 동안 무려 42개 기관이 신설되었다. 2009년 현재 전문대학의 수는 146개이다.

<표 II-2> 연도별 고등교육 기관 발전 추이

연도	대학 합계	4년제 대학								전문대 학
		대학	교육 대학	산업 대학	기술 대학	방송 통신 대학	각종 학교	원격 대학	사내 대학	
1970	103 (73)	71 (57)	16 (0)	-	-	-	16 (16)	-	-	65 (39)
1980	109 (78)	85 (66)	11 (0)	-	-	1 (0)	12 (12)	-	-	128 (92)
1990	148 (110)	107 (84)	11 (0)	6 (3)	-	1 (0)	23 (23)	-	-	117 (101)
2000	196 (152)	161 (137)	11 (0)	19 (11)	1 (1)	1 (0)	3 (3)	-	-	159 (142)
2005	224 (170)	173 (149)	11 (0)	18 (10)	1 (1)	1 (0)	4 (4)	15 (15)	1 (1)	158 (144)
2006	221 (180)	175 (152)	11 (0)	14 (8)	1 (1)	1 (0)	3 (3)	15 (15)	1 (1)	152 (139)
2007	220 (179)	175 (152)	11 (0)	14 (8)	1 (1)	1 (0)	2 (2)	15 (15)	1 (1)	148 (137)
2008	216 (178)	174 (151)	10 (0)	13 (8)	1 (1)	1 (0)	2 (2)	15 (15)	1 (1)	147 (137)
2009	219 (177)	177 (151)	10 (0)	12 (7)	1 (1)	1 (0)	1 (1)	16 (16)	1 (1)	146 (136)

주: 1. 전문대학과정에는 원격대학, 사내대학, 각종학교는 포함하지 않음.

2. 분교 수는 제외함.

3. ( )안의 수치는 사립의 수치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8; 2009),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자료집

이처럼 급속하게 고등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산업구조, 직업구조의 고도화 혹은 기술 혁신으로 인한 지식과 기술, 기능의 고도화 등과 같은 pool 요인과 가계 수입의 증대, 교육열의 상승으로 인한 교육 수요의 증가 등의 push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주도의 교육 정책이 기회 확대에 영향을 끼친 점이다(강무섭, 1986; 강순원, 1994; 이혜영, 1998; 윤정일 외, 2008).

고등교육의 폭발적인 성장과 확대를 촉진한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원정책이다. 정원 정책은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 수요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정원 규모를 정하고 정원 규모 내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 정책, 대학 교육 과정, 대학 내부의 행·재정 운영은 물론 사교육, 학교 정상화에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고등교육 확대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추이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손준중, 1994; 송광영, 1988; 오욱환, 1986).

각 시기별 고등교육 관련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 3>와 같다. 이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근대 학제가 성립되기 시작한 1960년대까지는 자유방임으로 일관하다가 1960년대 이후 경제 발전에 따라 산업계의 고등교육 수요에 따라 대학이나 전문대학, 혹은 특정 학과의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정원을 억제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정원의 확대로 고등교육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 1995년 이후에는 학령인구의 감소, 국제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더욱 촉진하는 대학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3> 연도별 정책 변화에 따른 기회 확대의 특징

시기 (연도)	주요정책	주요 특징	입시
자유방 임기 1945- 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서울대학교법 (1946)</li> <li>◦대학설치기준령 (1946)</li> <li>◦재학생징집연기령 (1950)</li> <li>◦전시학생정원제 (1953)</li> <li>◦국립학교설치령 (195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립대학 창설</li> <li>◦각도 지방국립대학 창설</li> <li>◦대학 자율 정원 확대</li> <li>◦대학교육의 질 문제 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별 모집단위, 모집정원 자율(1945-1954)</li> <li>◦국가연합고사(1954)</li> <li>◦대학별 본고사(1954)</li> <li>◦내신의 도입(1954)</li> </ul>
정원억 제기 1961- 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설치기준령 (1961)</li> <li>◦대학학생정원령 (1963)</li> <li>◦대학입학예비고사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학교 무시험제(1969)</li> <li>◦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중견산업인력을 위한 전문대학 확대</li> <li>◦과학기술계 인력공급을 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고사만으로 전형 (1962)</li> <li>◦국가고사, 본고사 병행 (1963)</li> <li>◦대학별 자율운영</li> </ul>

	(1969)	한 이공계 확대 ◦예비고사 실시 (1980년까지)	(1964-1968) ◦예비고사 -초기에는 전국합격선 적용 -후기에는 지역별합격선 적용
정원확대기 1973-1987	◦고등교육에 대한 장기 종합계획안(1972) ◦7.30 교육개혁안(1980) ◦교육개혁종합구상보고서(1987)	◦실험대학의 운영 -계열별 정원제 ◦대학특성화 -지역사업과 연계한 전공 특성화 ◦고등 직업교육의 전문대학으로 통합	◦예비고사(1981까지) ◦대학별 본고사 폐지(1981) ◦내신 성적 30%이상 반영(1982-1985) ◦선지원 후시험제 도입 실시(1986-1987)
정원자율기 1988-2007	◦5.31교육개혁안(1997:4차)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1998) ◦교육발전5개년계획(1999) ◦국립대학발전계획(2000) ◦1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1) ◦대학경쟁력강화방안(2003) ◦대학구조개혁방안(2004) ◦대학특성화추진방안(2005)	◦대학설립준칙주의 -신규대학 및 학부 신설 자유 ◦대학원 중심대학 및 지역중심대학 육성 ◦유사학과 통폐합 및 학부제 ◦평가와 연동한 정원 자율화 ◦행·재정지원과 연계한 대학평가 ◦국립대학 회계제도 도입 등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사립대학 구조개혁 추진 ◦대학 질의 관리	◦학력고사 폐지(1994) ◦대학수능시험 도입(1993) ◦국공립대학 대학별고사 실시 불가(1997-2001) ◦지필고사 금지(2002-2004) ◦전형방법의 다양화(대학별 특별전형 확대) ◦논술고사 및 실기고사의 자율화(2002-2004) ◦정시와 수시의 이원화(1997-2004) ◦수능 소수점 배점 및 총점 폐지(9등급제)(2008)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 개편(2005) ◦대학별 수능 반영 영역 수 자율화(2005-2007)
대학자율기 2008-	◦정보공시제(2008) ◦로스쿨(2009) ◦교육역량강화방안(2009)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사립대학 구조개혁 ◦대학평가의 강화 ◦경쟁적 재정지원 방식의 도입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 강화(2008) ◦입학사정관제 본격 실시(2009-)

우리나라 고등교육 확대는 정권 교체기마다 추진된 고등교육 확대 정책에 따라 이루어졌다.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재학생 징집연

기령, 국립학교 설치령 등을 통해 국립은 물론 사립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를 촉진하였으며,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정원이 억제되었던 1970년대에는 중견기술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대학을 확대하고 이공계 중심의 정원 확대를 꾀하였다. 1981년 7.30교육 개혁 조치로 졸업정원제가 실시되면서 고등교육기회가 급격하게 팽창하였고,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학설립준칙주의로 대학 설립이 자유로운 대학 자율화가 추진되면서 이러한 확대 경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재정이 악화되면서 포화상태에 이른 고등교육의 자율적 정원 감축이 추진되고 있다.

## 2) 고등교육 보편화로 인한 성인기 이행의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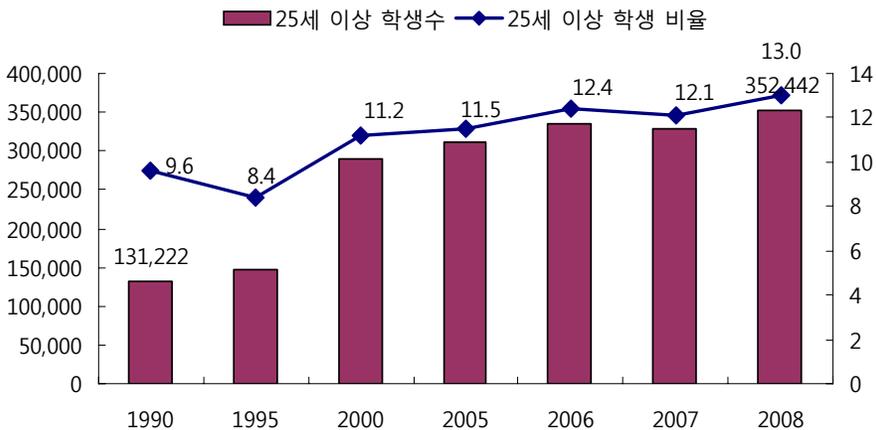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급격하게 확대됨으로 인한 부작용도 없지 않다.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다는 것은 나라 전체의 인적자본 수준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직업이 요구하는 교육수준의 증가 없이 고등교육의 진학률만 높아지는 것은 사람들이 하향취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김홍균·김지혜, 2008). 또한 고등교육인력의 양산으로 인한 전문직 분야가 상대적으로 과잉 공급되어 국가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그보다 낮은 수준 혹은 저숙련 노동자를 밀어내는 효과를 초래하는 등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김주섭, 2005).

고등교육 진학률 증가 및 재학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성인기 이행의 지연도 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대학의 25세 이상 성인 학생 수의 추이를 보더라도 대학과 전문대학에 풀타임으로 재적하고 있는 25세 이상 성인 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131,200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이 9.6%였으나 2008년에는 전체학생의 13.0%에 해당하는 352,442명에 이르고 있다(교육통계, 각 해당연도).

대학진학률의 증가와 재학기간의 연장 그 자체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기대하는 직업지위도 높아지게 되므로, 고등교육에 걸 맞는 일자리 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교육 수준은 제한된 수의 일자리에 대한 심각한 경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보다 나은 취업을 위한 대학생들의 ‘과도한 스펙’ 쌓기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 어학연수를 받거나 일자리 경험을 쌓기 위한 휴학이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는 재학 기간을 연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노동시장에서의 학력과잉 현상은 대중교육을 지향하는 국가에선 흔히 목격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가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인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나 이론적인 준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김주섭,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학력화와 이로 인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불일치 현상은 취업, 결혼, 분가, 출산 등의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를 지연시키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림 II-2]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25세 이상 학생 인구

## 2. 청년 고용상황 관련 요인

청년들의 취업난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들의 학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높지만, 청년들이 처한 노동시장의 현실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세부과제 보고서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최근 더 열악해진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청년층의 고용상황에 악화 원인에 대한 의견은 매우 다양한데 이는 크게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의 저하 및 팬텀은 일자리의 부족,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기업의 비정규직 및 경력직 선호 경향 등으로 나눌 수 있다(김용성, 2008).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의 저하

경기가 나빠지면 고용기회는 감소되게 마련이다. 청년층 노동시장이 전체 노동시장에 비해 경기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전체 노동시장에 비해 청년층 노동시장이 더 심하게 악화된 바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그 규모를 축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병희(2004)는 경제의 성장 둔화와 함께 고용흡수력의 저하가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청년층 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감소하여 왔으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용의 감소를 시사한다고 보았다.

또한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경제의 낮은 고용창출력은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0년 이후 제조업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국내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형 경영으로 인해 신규고용과 인력삭감이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추구 관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력을 적게 쓰는 고부가 사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고 있으며, 해외투자 증가로 인해 고용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현재의 여건에서(강우란, 2004) 청년층의 고용전망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2)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괴양

우리나라에서 고학력화에 대해서는 앞절에서 살펴본 바 있다.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괴양과 노동시장의 불균형문제는 대학의 정원자율화 정책이 추진된 198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되었다(김주섭, 2005). 노동수요가 고학력 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에 비추어볼 때, 청년층의 고학력화는 일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학력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고학력화 현상이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면 고학력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험사리 개선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고학력 청년층은 하향취업을 하거나, 지속적인 실업상태를 경험하거나, 아예 취업준비 등 비경제활동으로 편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김용성, 2008).

## 3) 기업의 비정규직 및 경력직 선호

기업의 채용패턴이 과거의 대규모 공채 위주에서 점차적으로 수시채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채용대상도 신규채용에서 경력직 위주의 채용으로 변화고 있다. 기업들은 양성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드는 신규인력 대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경력직 인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유연성을 강화해야 하며, 인력 조정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논리 하에 비정규직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강우란, 2004). 윤석천(2004)은 청년층에서 늘어난 비정규직은 결국 고용지속기간의 단축을 초래하여 실업률 증가의 원인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근로자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은 신규고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노동시장 경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층 실업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 3. 여성의 성인기 이행과정 변화

성인기 이행 과정은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규범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성인기 이행은 취업과 함께 결혼이나 첫 출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한국사회에서 결혼과 첫 출산의 간격이 비교적 짧고 결혼 후 자녀 출산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 성인기 이행을 ‘결혼’으로의 이행으로 보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여성의 성인기 이행 즉 한국여성의 결혼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서구의 생애과정 연구들(life course studies) 가운데 성인기로의 이행을 다룬 연구들은 20여 년 전부터 생애사건의 연속들(sequences of life events)이 정돈된 삶(the orderly life course)인지 아니면 흐트러진 삶(the disorderly life course)인지에 대한 논의를 주요하게 다루었다(Rindfuss, Rosenfeld, & Swicegood, 1987; Rindfuss, 1991). 여기서 생애사건의 연속은 주로 교육, 군복무, 취업 및 실업 등의 경제활동상태가 여러 해에 걸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은기수, 1995).

사회마다 그 사회가 사회성원들에게 기대하는 생애사건의 배열순서와 내용이 있는데 그 것은 젠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남녀에게 기대하는 교육수준과 결혼연령, 취업활동 등이 시기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실제로 남녀의 교육연한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적 규범이 내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주관적 기대교육수준도 성별로 다르다. 또한 성인기 이행의 주요 지표가 되는 결혼에 있어서도 ‘결혼 적령기’ 라는 사회적 압력기제가 성별로 다르게 작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녀가 결혼하는 데 취업이 지니는 의미도 시기에 따르게 다르게 나타나며 결혼에 대한 태도 역시 성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한국여성의 성인기 이행과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성의 교육과 노동시장 참여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를 통해서 본 여성의 지위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국여성의 성인기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여성의 교육 및 노동시장 참여 양상의 변화

### (1) 여성의 교육 관련 현황

2008년 현재 교육정도별 학생 본인의 기대교육수준을 보면 대학 재학생인 남성의 기대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교인 경우가 52.7%인 데 비해 여성은 46.3%로 조금 낮다. 그러나 대학재학생의 기대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는 남성이 41.4%인데 비해 여성은 45.7%로 더 높다. 또한 2009년 현재 대학(교) 진학률은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앞섰다. 여성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률이 82.4%인 데 비해 남성의 진학률은 81.6%였다. 한편 대학원 이상 진학률은 남성이 7.7%인 데 비해 여성의 진학률은 5.9%였다.

〈표 II-4〉 학교급별 진학률

(단위 : %)

연도	초등학교 →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985	99.1	99.4	88.2	93.1
1990	99.8	99.8	95.0	96.3
1995	99.9	99.9	98.4	98.6
2000	99.9	99.9	99.6	99.5
2005	99.9	99.9	99.8	99.7
2006	99.9	99.9	99.8	99.7
2007	99.9	99.9	99.7	99.6
2008	99.9	99.9	99.7	99.6
2009	99.9	99.9	99.7	99.6
연도	고등학교 → 대학(교)1)		대학 → 대학원 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985	34.1	38.3	6.7	12.1
1990	32.4	33.9	6.4	8.8
1995	49.8	52.8	6.2	9.2
2000	65.4	70.4	6.9	11.1
2005	80.8	83.3	7.5	9.0
2006	81.1	82.9	6.6	8.0
2007	82.2	83.3	5.6	7.6
2008	83.5	84.0	5.5	7.3
2009	82.4	81.6	5.9	7.7

주 : 1) 대학, 4년제 일반대학교, 교육대학 등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내부자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우리보다 빨리 이루어진 선진국들(미국 83%, 스웨덴 82%, 호주 72%, 영국 60%, 프랑스 56%, 일본 55%)보다도 높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그런 가운데에서 2009년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섰다는 점은 그야말로 한국여성

의 고학력화가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여성 고학력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했다는 점이 반드시 성별 교육격차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는 측면이 있다.

전공분야별 대학교 학생 분포를 나타낸 것이 <표 II-5>이다. 2009년 현재 여성의 경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전공 분야가 사회계로 전체 여성의 30.6%가 이에 해당하고 그 다음으로 인문계(19.5%), 예체능계(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남성의 경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전공 분야가 공학계로 전체 남성의 36.4%가 이에 해당하고 그 다음으로 사회계(30.0%), 자연계(10.9%)이다. 이와 같은 분포는 2000년의 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남성의 경우 공학계 비율이 조금 줄고 사회계 비율이 늘어난 대신 여성의 경우 인문계, 자연계 비율이 조금 줄고 사회계, 의약계 비율이 늘어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성별 전공분야 분포는 학교 졸업후 취업과의 연계성, 취업에 대한 태도, 대학교육에 대해서 갖는 기대 효과 등에서 성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II-5> 전공분야별 대학생 분포(2009년)

(단위: %)

성별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여성	19.5	30.6	6.6	9.4	13.9	5.4	14.5
남성	9.3	30.0	2.9	36.4	10.9	2.6	8.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내부자료.

여성의 교육정도별 취업률을 살펴보다도 여성의 고학력화가 갖는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해석된다. 전문대 및 대졸 여성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표 II-6>과 같다. 2009년 여성 취업률은 전문대 85.0%, 대학 65.9%, 대학원 76.8%이다. 먼저 전문대졸 여성의 취업률을 살펴보자. 2009년 전문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85.6%로 2005년과 비교하여 3.0%p 상승하였다. 전문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1985년 64.5%를 기록한 이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한편 남성의 경우도 2000년 이래 증가하여 2009년 85.8%의 취

업률을 보인다. 전문대졸 남녀의 취업률 차이를 보면, 1985년 20.1%p로 남성이 매우 높았으나, 1990년 10.7%p, 2000년 2.8%p로 낮아졌고, 2009년은 0.2%p로 거의 남녀차이가 없어졌다.

다음으로 대졸 여성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2009년 65.3%로 2005년과 비교하여 3.0%p 상승하였다. 대졸 여성의 취업률도 1985년, 41.5%에서 꾸준히 상승하였다. 대졸 남성의 취업률은 2000년 58.6%로 최저치를 보였고, 이후 상승하여 2008년 70.7%까지 점차 상승하였으나, 2009년은 69.5%로 소폭 하락했다. 대졸자의 성별 취업률 차이는 1985년 37.6%p로 매우 컸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09년 현재 4.2%p로 남녀차이가 크게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09년 대학원졸 여성의 취업률은 74.4%로 전년대비 2.4%p 하락했다. 대학원 여성 취업률은 1985년, 77.1%를 보인 이래 증가하여 1995년 82.6%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증감을 거듭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여, 2009년 현재 74.4%로 1995년과 비교하여 12.2%p 낮게 나타났다. 대학원졸업자의 성별 취업률 차이는 1990년 20.1%p를 보인 이후 감소 추이를 보였지만,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여 2009년 11.25%p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고학력 여성들 내부에서 볼 때 전문대졸업자보다는 대졸자들 간에, 대졸자보다는 대학원졸업자들 간에 성별 취업률 격차가 더 커지고 성별 격차 완화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II-6〉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률

연도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여성	남성	남녀 차	여성	남성	남녀차	여성	남성	남녀 차
1985	64.5	84.6	20.1	41.5	79.1	37.6	77.1	96.9	19.8
1990	75.5	86.2	10.7	47.3	70.5	23.2	75.0	95.1	20.1
1995	78.2	84.9	6.7	59.3	77.2	17.9	82.6	95.8	13.2
2000	78.2	81.0	2.8	53.4	58.6	5.2	73.4	86.4	13.0
2005	82.6	84.6	2.0	62.3	67.7	5.4	78.6	87.3	8.7
2008	85.0	85.4	0.4	65.9	70.7	4.8	76.8	88.0	11.2
2009	85.6	85.8	0.2	65.3	69.5	4.2	74.4	85.6	11.2

주 : 취업률 = 취업자 졸업자 - 진학자 - 군입대자 × 100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표 II-7〉는 여성고졸임금을 100으로 하여 교육정도별 성별 임금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2008년 들어 처음으로 대졸 여성의 임금수준이 고졸 남성의 임금수준보다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전문대졸업자의 성별 임금격차에 비해 대학교졸업자의 성별 임금격차가 월등히 높다.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경우 학력수준이 임금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 교육수준구간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교육이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좋은 일자리를 얻는 데 있다고 할 때, 한국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에 비해 그 경제적 보상은 충분하지 못함이 분명하다.

〈표 II-7〉 교육정도별·성별 임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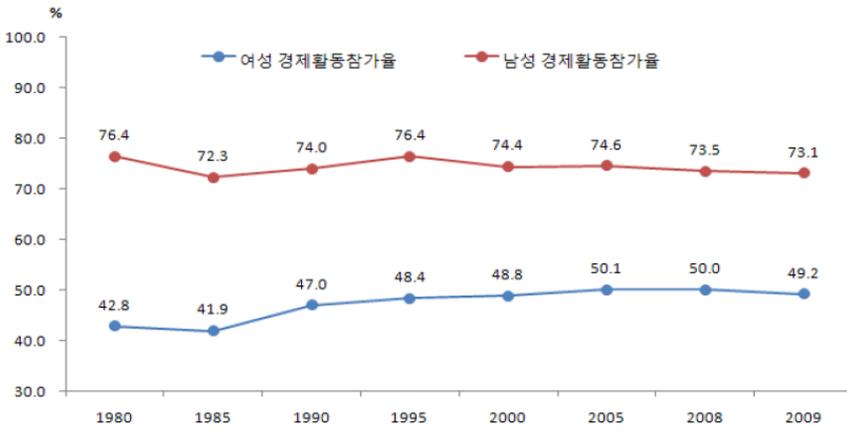
연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학졸		대학교졸 이상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985	76.3	147.0	100.0	179.8	158.9	210.8	259.3	356.8
1990	81.4	146.5	100.0	164.2	124.0	179.9	184.3	270.8
1995	82.2	146.5	100.0	158.4	114.6	166.2	161.3	225.0
2000	80.8	137.1	100.0	150.1	109.1	156.5	160.8	225.3
2005	80.2	131.0	100.0	148.8	109.4	154.4	152.8	226.9
2008	78.0	135.0	100.0	152.0	111.5	159.1	148.6	230.9

주: 여성고졸임금을 기준으로 함.

자료: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3]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2%로 전년대비 0.8%p 하락하였으며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3.1%인 데 비하여 현저히 낮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2.8%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경제활동의 성별차이는 여전히 매우 커서, 2009년 경제활동인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4,243천명 적고, 참가율은 23.9%p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그림 II-3]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표 II-12>에 나타난 2009년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기혼여성 49.0%, 미혼여성 49.6%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5년 이래 점차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미혼여성은 1985년 44.7%에 증감을 거듭하지만, 2005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2009년은 전년대비 1.0%p 하락해서 49.6%로 나타났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를 보면, 미혼과 기혼 모두 전년대비 남녀 차이가 커짐을 알 수 있다. 미혼의 경우 2000년 이전까지는 여성이 높지만, 이후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을 추월해 2009년 여성 49.6%, 남성 50.9%로 남성이 1.3%p 높았다. 기혼의 경우는 남녀 차이가 감소 추이를 보이지만 여전히 매우 크게 나타났다. 1985년 기혼인구의 남녀차이는 45.8%p에서 2009년은 34.2%로 성별 차이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 상당수가 결혼 이후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특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 II-8> 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인구

(단위: %)

연도	여성		남성		남녀차이(남-여)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1985	41.0	44.7	86.8	43.5	45.8	-1.2
1990	46.8	45.6	88.2	43.2	41.4	-2.4
1995	47.6	50.4	88.8	49.6	41.2	-0.8
2000	48.7	47.0	84.3	50.2	35.6	3.2
2005	49.0	53.6	83.8	53.6	34.8	0.0
2007	49.9	51.3	84.1	52.2	34.2	0.9
2008	49.8	50.6	83.8	51.4	34.0	0.8
2009	49.0	49.6	83.2	50.9	34.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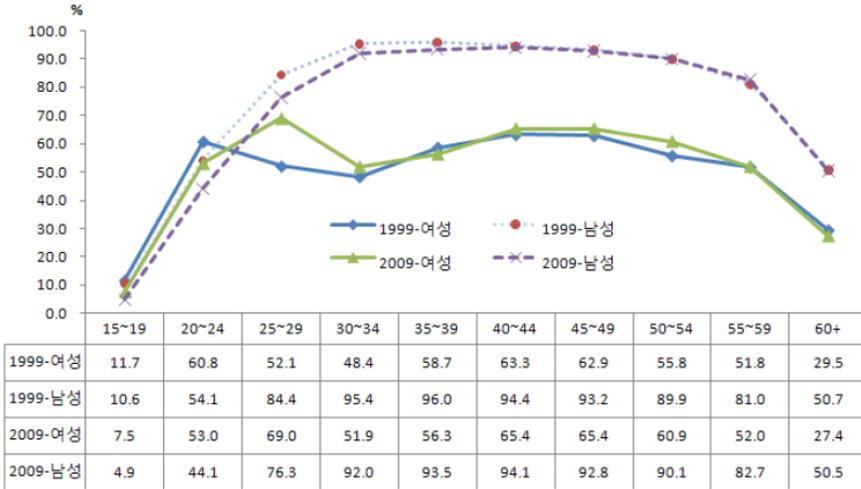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출산과 육아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여성의 연령층이 1985년 25세~29세에서 2009년 30세~34세로 이동했을 뿐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져도 출산과 육아로 인한 퇴장 현상은 그대로임을 알 수 있다([그림 II-5] 참조).

2009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세~29세 연령집단의 여성이 69.0%로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지만 30세~34세에 51.9%로 크게 하락하고,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성이 증가하다(40~44세 65.4%, 45~49세 65.4%), 다시 하락하는 전형적인 M자형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증감형태는 1985년과 비교하여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여성의 만혼화로 인한 출산과 육아의 시기가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으로 옮겨졌을 뿐이다.

이에 비해 남성의 경우 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계층인 25세~29세부터 여성보다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며, 30세~54세 연령층에서 90% 이상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 후 퇴직과 더불어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 15세~19세와 20세~24세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4.9%와 44.1%로 여성보다 낮으나,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25세~29세부터는 급격히 상승하여 30대 이후 90%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정년을 즈음한 55세 이하 80%대로 떨어지는 고원형 패턴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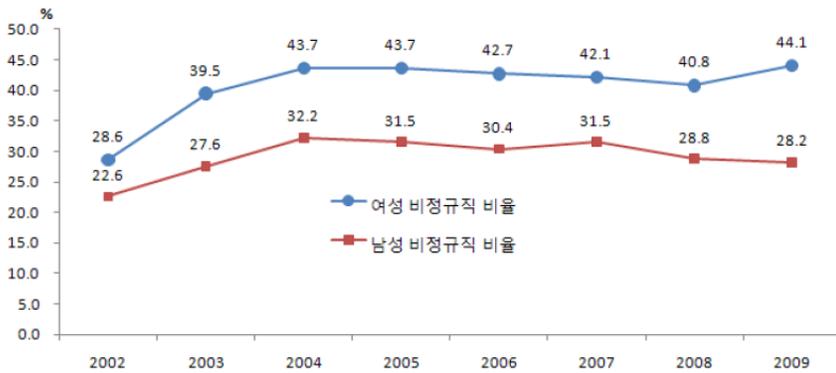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그림 II-4] 연령계층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2009년 여성 임금근로자 중 44.1%는 비정규직이다.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서 2008년 비정규직은 감소하지만 2009년에는 다시 대폭 증가하여 2009년 비정규직 여성 임금근로자는 3,073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27천명 증가한 상태이다. 반면 비정규직 남성은 2005년까지 증가추이를 보이지만 2007년, 2,907천명 이후 감소하여 2008년 2,699천명, 2009년은 2,681천명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의 경우 2009년 여성이 남성보다 16.0%p 높게 나타났다. 2009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여성의 경우 44.1%로 전년대비 3.3%p 높아진 데 비해, 남성의 경우 28.2%로 전년대비 0.6%p 낮아졌다([그림 II-5] 참조).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오래전부터 발견되던 현상이었으나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경제위기시 우선 해고대상이 되기 쉬운 여성노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실제 한국 여성근로자들은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여성의 비정규직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비정규 여성근로자가 겪는 차별적인 현상은 높은 고용불안정성, 모성정책의 사각지대, 열악한 임금수준 등 다양한 지표에 의해서 확인된다.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SIS DB.

[그림 II-5] 비정규직 비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여성들에게 어떤 경제적 지위를 부여하는지는 성별 임금 수준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2008년 남성의 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은 65.2%로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높다. [그림 II-6]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여성의 평균 임금은 1,776천원으로 남성 2,544천원 보다 768천원 낮다. 여성의 고용형태가 남성보다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당수의 여성들은 남성정규근로자의 40%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위인 것이다.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

[그림 II-6] 여성 월평균 임금 및 임금격차

## 2) 한국여성의 성인기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최근 들어 성인기로의 이행 즉 청년들의 결혼 또는 첫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한 데에는 연일 기록을 갱신하는 ‘초저출산’ 국가로의 진입 사실이 상당 부분 관련된다. 출산억제정책의 성공모델이었던 한국사회가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맞이하여 저출산대책을 국가의 핵심과제로 삼기에 이르렀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많은 연구들은 저출산 현상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지연 또는 포기 현상을 들고 있다. 2008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8.3세로 점차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9>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 28.3세, 남성 31.4세로 여성이 3.1세 적으며, 10년 전인 1998년인 평균 초혼연령에 비해 여성은 2.3세, 남성 2.6세 높아졌다. 이와 연동하여 첫 출산 연령도 상

승 일로에 있다.

<표 II-9> 평균 초혼연령

(단위: 세)

연 도	평균 초혼연령		
	여 성	남 성	성차(-)
1988	24.7	27.6	2.9
1995	25.3	28.4	3.1
1998	26.0	28.8	2.8
2005	27.7	30.9	3.2
2006	27.8	31.0	3.2
2007	28.1	31.1	3.0
2008	28.3	31.4	3.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이와 같이 남녀 모두 성인기로의 이행 즉 결혼과 첫 출산으로의 이행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남녀 청년들에게 공통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어느 정도 성에 따라 구별되는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를 사안별로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녀 청년 모두에게 성인기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공통된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의 고착화와 그로 인한 청년실업의 장기화 현상을 들 수 있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이 대량화·장기화되면서 이 문제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2008년 말부터 일기 시작한 글로벌금융위기는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사회의 학교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12개월이다. 또한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인 청년들의 ‘2년 직장유지율’은 50%대에 불과하며 청년층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은 20개월 내외로 알려져 있다. 하향취업률도 외국의 9%에 비해 높은 24%에 달하는데 하향취업자는 상향이동의 가능성이 낮고 잦은 노동이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이후 한국사회

에서 청년들의 노동이동 빈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전병유·채창균·장지연·박성재, 2009). 또한 노동시장진입연령도 OECD 국가에 비해 1-2세 높은 편이다. 2009년 한국사회의 15세-29세 청년층 980만명 중 무려 400만명이 고용의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로 ‘배제된 청년층(youth left behind)’ 과 부실하게 통합된 신규취업자 (poorly-integrated new entrants) ‘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자가 약 160만명, 후자가 약 240만 명에 이르고 있다(전병유, 2010).

여기에 더하여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 중에서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나, 전체 일자리에서 대졸자가 희망하는 일자리 비중은 그보다 훨씬 적다는 점이다. 양성평등 고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졸 여성의 취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의 세계 경제 위기는 대졸 여성 청년층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졸 청년층의 취업난이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로 심각해졌으나,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그 이전부터 문제의 소지를 축적하고 있었다(신선미·정경아·구정화, 2009).

한편 한국사회가 경험한 두 차례의 경제위기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 및 평생직장 개념의 와해는 사회에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경제호황기와 긴밀하게 연결된 중산층 가족개념까지도 균열을 가져왔다. 근대적인 공·사영역의 구분은 정치 및 경제 영역으로 대표되는 공적 영역과 가족으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을 구분하며 남성생계부양모델에 입각한 성별분업적 가족체제를 정상가족모델로 표방해 왔다. 이러한 가족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남성가정의 외별이만으로도 부인과 자녀가 중산층 생활을 누리며 결혼과 동시에 여성은 ‘전업주부’로서의 역할만 수행해도 가족생활이 영위되게끔 했던 ‘경제호황’ 이었다. 한국사회에서도 1980년대 이후 한국가족의 계층적 분화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의미에서의 중산층 핵가족이 부상하였다(장경섭, 2009). 전업주부가 중산층 핵가족의 핵심에 놓이게 되면서, 여성의 가족형성기 노동시장 퇴장은 소극적인 노동시장 퇴장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사생활’ 의 영역을 관리하고 자녀의 양육

과 교육을 책임지는 근대적이고 전문적인 전업주부화라는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 이후 늘어난 고학력 여성들이 직면한 노동시장의 강고한 성별위계와 취업기회의 부족 등은 이러한 ‘전업주부 이데올로기’가 타협책이 되도록 하는 구조적 조건이 되었다(조정아, 2000).

그러나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공적 영역의 불확실성 증대는 곧바로 사적 영역 즉 가족의 불확실성으로 연결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벌써 20여 년 전부터 부동산 거품붕괴와 연이은 경제 악재로 경제불황이 장기화되고 여기에 이혼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가족의 불안정성 증대가 오랫동안 예견되어 왔다(야마다, 2010).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이제 더 이상 한 번 구성되면 영원히 지속되는 안식처가 아니다.

이와 같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불확실성 증대는 남녀 청년들에게 다소 상이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성인기 이행의 연기라는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먼저 남성의 경우를 살펴보자. ‘남성=생계부양자, 여성=전업주부 또는 생계보조자’라는 등식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강한 규범으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성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남성들은 안정된 직장을 얻기까지 결혼과 같은 가족형성 계획을 연기하고 그 대신 자신에게 투자하는 방식 즉 정규교육의 연한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은 리스크 회피 전략은 우리보다 일찍 청년장기실업을 경험한 남부유럽 등을 중심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박수미,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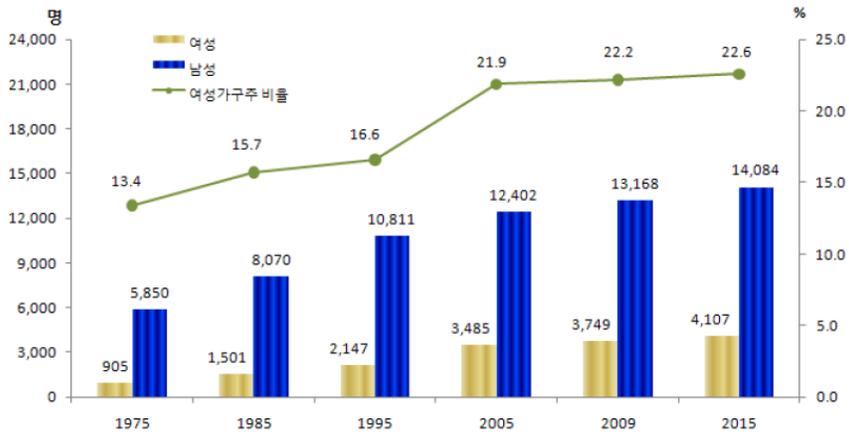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결혼 시 남성이 주거비용을 담당하는 결혼문화 역시 남성의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한 서베이 결과에서도 한국사회 남성의 평균 결혼 비용이 1억 600만원으로 나타났다(인터넷한국일보, 2010년 6월 2일). 이와 같은 과도한 결혼 비용은 청년들에게 바늘구멍 같은 취업관문을 통과한 후에도 여전히 결혼으로의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청년층 실업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고착화되는 상황 속에서 20대의 평생소득 전망이 암울해지면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들의 노력은 자의반

타의반에 따라 독신자의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성별분업적 가부장제 문화의 피해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이에 해당한다.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수행 자원을 사회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많은 청년남성들은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개인적 수준에서 대안적 삶을 설계하는 등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에서 이전 세대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제 한국여성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경제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청년 남성들의 성인기 이행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가족규범과 성역할 규범에도 일정한 변화가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맞벌이 가족에 대한 선호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에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선결되어야 하는 사회적 압력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전반적인 공적 영역의 불확실성과 사적 영역의 불확실성은 여성에게도 예외없이 삶을 기획하는 태도에 변화를 요구한다. 개별 여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구조 속에서 동원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여 행위적 선택을 하게 되는 이른바 생애전망을 지닌다(배은경, 2009). 그 동안 여성들은 근대적 젠더보상체계 안에서 전업주부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자원 활용의 효율화를 꾀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이 와해되고 서서히 2인 소득자 모델로 변화하는 와중에 한국여성들은 근대적 젠더보상체계 밖에서 자신의 생애전망을 추구하기에 이르렀다(배은경, 2009). 이제 여성들도 결혼하기 위해서 또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편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 즉 가족생활의 불안정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들도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맞벌이 가족이 증가한 것은 1970년대에 발생한 경제성장의 정체와 법 개정으로 인해 이혼이 용이하게 된 점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되었다(야마다, 2009). 야마다는(2009) 일본에서도 남편의 실업과 이혼에 대비한 보험으로 여성이 취업전선으로 나섰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사회의 가족 구성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단독가구의 증가,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현상이다. 이 가운데 여성가구주 가구의 실태를 살펴보면 [그림 II-7]와 같다. 2009년 여성가구주는 22.2%로 1995년 대비 5.6%p 상승하였다.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주는 1995년 2,147천명에서 2009년 3,749천명으로 1,602천명, 74.6%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가구주는 1995년 10,811천명에서 2009년 13,168천명으로 2,357천명, 21.8% 증가한 데 그쳤다. 여성가구주 가구뿐만 아니라 여성단독가구의 증가, 그 중에서도 특히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여성단독가구의 급증은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 일생 동안 혼자 사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바로 자신의 생계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생계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가족상황에 따라 함께 사는 자신의 가족들, 자녀이든 부모이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주체가 바로 여성 자신이다(박수미·정진주·박선영, 2005). 그렇다면 이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노동정책이나 가족정책, 복지정책의 시행은 그야말로 어떤 한 집단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제 여성도 남성도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생활 영위에 있어서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지니는 개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주 :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가구수임.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II-8] 성별 가구주 추이

지금까지 한국사회 여성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생애과정 변화의 측면에서 그리고 가족상황의 요구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으로 주로 묘사했다. 그러나 노동시장 참여는 모든 사회성원들의 권리와 생계유지를 위한 최우선적인 필수 요건이다. 세계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우수한 인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여성들이 학교졸업 후 맞이하는 사회, 좀 더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현실은 그들이 꿈꿔왔던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혼란은 시작된다.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양성평등과 노동의 권리에 대해서 배워 오다가 첫 발을 내딛은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상황과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단절되는 커리어, 그 이후 자의반 타의반 재진입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은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은 선택, 직장은 필수!’라는 태도를 취하게 한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정규직을 보이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임금근로자의 61.8%가 비정규 근로자라는 사실은 남성임금근로자의 비정규 비중 37.7%와 비교해 볼 때 여성노동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여성들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을 갖추고도 비정

규직 불안정노동에 취업하며, 20대를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 지위 획득을 위해 보낸 후, 30대 초입에 이르러서야 결혼하고 출산을 할 수 있게 된다(배은경, 2009). 그러나 이와 같은 패턴의 앞날은 더욱 암울하다. 왜냐하면 학교졸업 후 첫 직장이 이후 직업경력에 주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정서가 공유되면서 더욱더 많은 청년들은, 청년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첫 직장 진입을 ‘괜찮은 일자리’로 시작하기 위해 결혼 연기 또는 포기를 망설이지 않게 된다. 물론 여성들 가운데 최근 일자리가 부족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취직’을 주된 생애전략으로 택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상대 파트너인 청년남성들 역시 구직과 불안정 취업의 탓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또한 결코 손쉬운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 남녀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어렵게 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역행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충분히 대비하고 교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며, 또 어떤 것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발맞춰가지 못하는 사회규범의 지체 현상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들도 있다. 평생직장 개념의 와해 등 노동유연화 과정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조류라면 이와 같은 노동수요-공급유형에 적합한 남녀 파트너십, 가족내 역할 분담 원칙 등이 대안 원리로 등장할 수 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2인 돌봄+2인 부양체제’는 생애주기별로 변화하는 여성의 노동공급모형이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일해야 하는 남성공급모형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이는 생애방식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가족의 불안정성이 증대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곧 우리 사회성원들의 가족 회구에 대한 바람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가족형성, 함께 하기의 형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산업구조가 바뀌고 노동시장의 작동원리가 바뀐다면 가족을 둘러싼 규범도 바뀌고 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도 바뀔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다양한 영역들의 유기적인 상호 변화가 정합성을 지니려면 과거의 사회구조에서 작용했던 원리들, 이를테면 성별분업이데올로기나 가부장적 권위주의들을 버

리고 대신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사회구성원, 가족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젠더평등적 이념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정책, 사회공동체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4. 청년층의 주거환경

자녀들이 부모로부터의 독립하여 분가를 하는 시기와 방식은 그 사회의 문화와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외국의 연구들은 대부분 분가를 성인기 이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분가에 대한 관심이 취업이나 결혼 그리고 출산에 대한 관심에 비해 훨씬 낮았다. 그러나 청년들이 독립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부분적으로는 청년들의 실업이나 고용의 질이 저하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결과임과 동시에 성인기 이행의 다른 측면, 즉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원인으로서 작용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주거비는 다른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에 비해 훨씬 빠르게 상승하였다. 서울의 소비자물가가 1963년에 비해 2007년 43배, 실질소득이 15배 상승한 것에 비해, 땅값은 무려 1176배 올랐다(손낙구, 2008). 현재의 높은 부동산 가격은 실질 수요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 우선 가구당 주택수를 뜻하는 수도권 주택보급율은 1985년 55.3%에서 2005년 89.7%로 증가했으며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은 바 있다. 그렇지만 주택소유율은 1980년 41%에서 2005년 45%로 아주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주택보급율이 인구학적 공급 및 수요의 균형을 보여준다면 소유율은 이 내부의 정치, 경제학적 기반이 다른 형식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와 같은 주택소유율 통계는 주택의 소유가 불균등한

분포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자치부의 2003년 가구별 주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16.5%가 전체 주택의 60%를 점유하고 있음에 비해, 무주택 가구는 50.3%에 다다르고 있다(손낙구, 2008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자산소유의 불평등은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현상이다. 한국 사회와 같이 전·월세가의 지속적인 폭등이 일어나고, 임대계약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주택자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사회 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고보다 가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는 점이다(장경섭, 2009). 생계부양의 의무가 사회가 아닌 가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상태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은 가구의 형태 및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동산 가격 형성을 두고 원인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왔다. 한 편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예측하려는 경제학적 시도들이 있어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인구수요에 기반하여 예측하려는 연구(Mankiew & Weil, 1989; 홍종문과 이주형, 2007)로부터, 각종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주택가격의 버블 혹은 형성을 예측하려는 시도(박희석 2010; 한용석·이주형 2010)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 형성이 실제 생활과 연관되는 분석에는 충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한 편에서는 주거빈곤가구 및 영구임대주택가구와 같은 주거 약자에 관한 접근이 있어왔다(강명구·김용순, 2007; 남영우, 2010). 강명구·김용순(2007)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양극화가 주거 빈곤가구를 늘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남영우(2010)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실태에 집중함으로써 열악한 주거실태를 점검하고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한바 있다. 또한 손낙구(2008)는 전체 인구를 부동산 계급에 따라 구분하여 각 계급별로 서로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이상의 접근들은 주거 약자에 집중함으로써 세대 효과를 놓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발전주의에 기반한 시민권(Developmental

Citizenship, 장경섭, 2007)은 이와 같은 세대 효과를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이 된다. 1997년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형성 및 물질적 성과가 전국민에게 돌아감에 따라 복지제도가 충분하지 않아도 개인적인 자기 투자에 의하여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1997년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비정규직이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게 되었으며, 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은 부동산 투기를 불러왔다. 이는 결국 현재 청년세대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 1) 주거형태의 인구학적 분석

김란우(2010)의 연구는 인구학적 접근, 그 중에서도 자가거주가구 혹은 전세거주가구의 요인분해 방법론을 사용하여 주거형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요인분해는 절대적 증감률을 인구 증가에 따른 결과인지 비율 변화에 따른 결과인지를 구분해줌으로써 변화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주택과 같이 연령구조 변동에 따른 자본 축적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된 대상일수록 인구변수를 통제하고 분석해야 실질적인 변화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인 주거지의 확보는 가구 구성 및 자녀 출산과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연령구조에 따른 비율 분석이 필수적이다.

〈표 II-10〉 수도권 지역의 주택 자가거주율의 인구 및 비율 요인 분해  
(1985-2005)

전체	서울		경기도	
	인구요인 Dp=D/F	비율요인 Ep=E/F	인구요인 Dp=D/F	비율요인 Ep=E/F
15세 미만	-0.64	-0.36	-0.67	-0.33
15~24세	-0.49	-0.51	0.34	-0.66
25~29세	-0.70	-0.30	0.36	-0.64
30~34세	0.08	-0.92	0.82	-0.18
35~39세	0.39	-0.61	0.94	-0.06
40~44세	0.52	-0.48	0.91	-0.09
45~49세	0.73	-0.27	0.88	-0.12
50~54세	0.94	-0.06	0.88	-0.12
55~59세	0.89	0.11	0.95	-0.05
60세 이상	0.92	0.08	0.90	-0.10
계	0.88	-0.12	0.89	-0.11

출처: 김란우(2010)에서 재인용 및 재구성

원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1985년 및 2005년)

〈표 II-10〉은 서울과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지역의 자가거주율을 요인분해 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55세 이상 가구주를 제외한 서울 및 경기도의 전 연령층에서 자가거주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주택보급율이 양 지역 모두에서 20년 동안 약 2배 증가한 것에 비해 자가거주율은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이는 소유의 편중이 심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서울의 사례에서 인상적인 발견은 서울 30대 미만의 가구주의 경우 비율요인 및 인구요인 모두가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현상은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주거비 부담의 증가가 결혼의 시기를 점차 늦추고 있음에 따라 30대 이하의 가구주가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30대 가구주의 비율요인 악화를 통해 추론 가능하다. 30대 자가거주가구 감소의 92%는 자가거주율 감소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1985년에 비해 열악해진 주거 환경이 가구 형성 및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역시 크게 다른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보다 심각성은 덜하지만 20대 및 30대 젊은 가구주의 자가거주율이 악화됨에 따라 자가거주가구수를 감소시키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자가소유에 대한 필요와 집착은 사회복지제도의 부재와 연관된다. Kemeny(2005)는 자가거주율이 높을수록 복지 제도가 없는 사회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면 노후에 들어가는 주거비가 부담스러우며, 따라서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주거비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제도가 취약하다면 노후 연금에서 나가는 거주비용이 큰 비용을 차지할 수 있다(Kemeny, 2005).

〈표 II-11〉 수도권 지역의 주택 전세거주율의 인구 및 비율 요인 분해 (1985-2005)

전체	서울		경기도	
	인구요인 Dp=D/F	비율요인 Ep=E/F	인구요인 Dp=D/F	비율요인 Ep=E/F
15세 미만	-0.91	-0.09	-0.85	0.15
15~24세	-0.29	-0.71	0.74	-0.26
25~29세	-0.64	-0.36	0.64	0.36
30~34세	0.18	0.82	0.68	0.32
35~39세	0.35	0.65	0.69	0.31
40~44세	0.48	0.52	0.66	0.34
45~49세	0.72	0.28	0.64	0.36
50~54세	0.91	-0.09	0.68	0.32
55~59세	0.76	-0.24	0.83	0.17
60세 이상	0.80	-0.20	0.69	0.31
계	1.00	0.00	0.68	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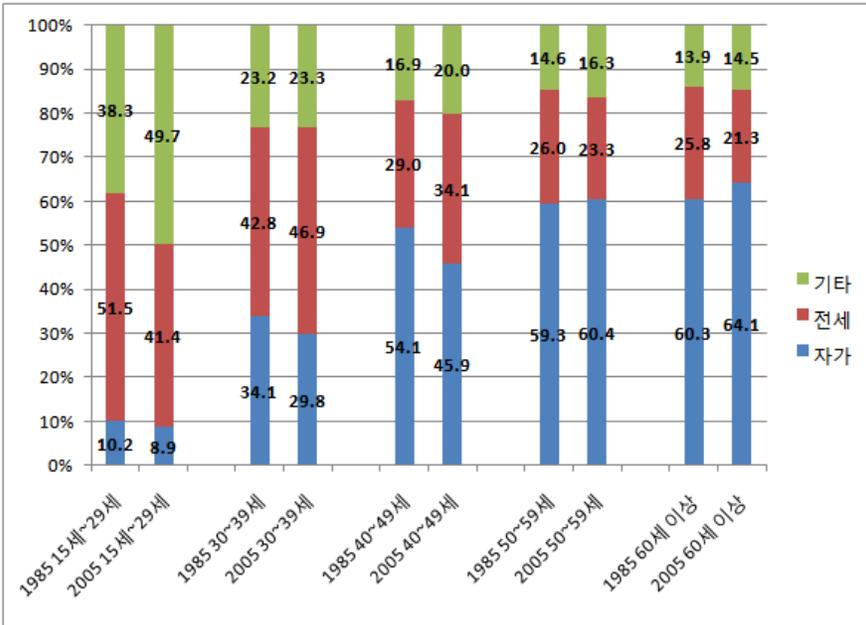
원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1985년 및 2005년)

주: 요인분해의 구체적 과정은 부록으로 첨부

〈표 II-11〉는 〈표 II-10〉와 달리 자가거주가가 아닌 주택 전세거주율을 요인분해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세율 분석은 자가거주율 분석에 이어 젊은 가구주의 열악해진 주거환경을 다시 한 번 잘 보여주고 있다. 자가거주율이 주택의 소유 및 투자와 둘러싼 정치경제적 조건들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점에 비하여, 전세율의 분석은 한국 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마지노선이라 볼 수 있다. 서울시 30대 전세거주가구주의 수는 1985년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이 중 82%는 전세거주율이 높아짐에 따른 결과임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30세 이하 가구주는 자가거주율에 비하여 전세거주율도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세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서울시보다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전세가격은 주택가격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였다.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986년에 비해 2008년 125% 증가하였지만, 전세가격은 무려 263% 증가하였다. 서울시 아파트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매매가격은 358% 증가한 점에 반하여 전세가격은 457% 증가하였다.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세가격으로 인하여 그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가 전세 외에 다른 안정적인 주거형태를 모색할 수 없는 현실에서 급격한 전세가격의 증가는 더욱 젊은 세대의 가구분화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에 거주하는 젊은 가구주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의 36%는 전세 거주비율이 감소한 현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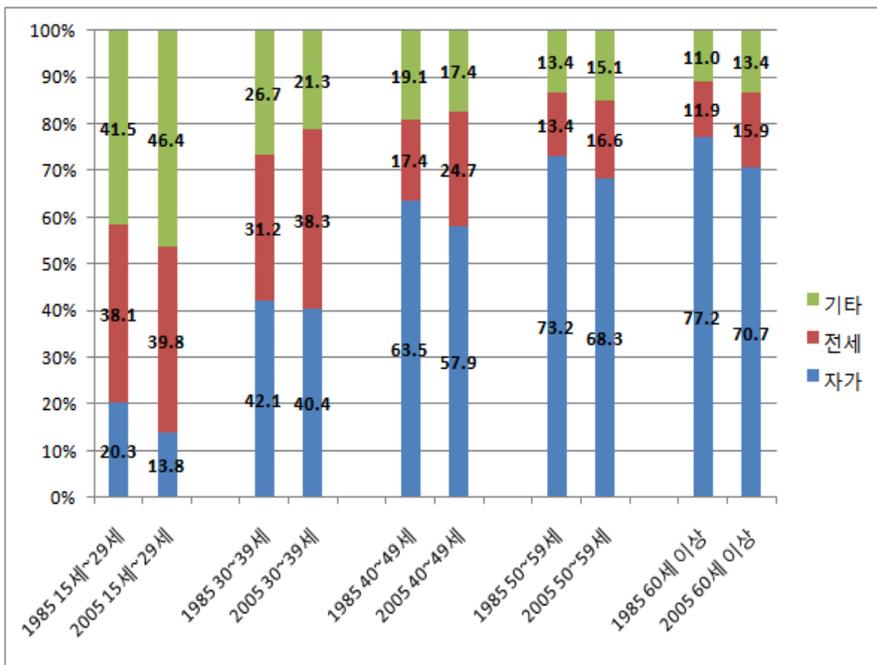
원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1985년 및 2005년)

[그림 II-8] 서울시 연령별 거주형태 구성 (1985~2005)

<표 II-14> 및 <표 II-15>에서 분석한 20-30대 가구주의 악화된 주거 안정성을 [그림 II-9]에서 나타난 각 연령대별 주거형태의 변화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9]은 서울시의 1985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령대별 거주형태 구성을 막대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요인분해를 통한 분석이 인구요인과 비율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였다면, 본 그래프는 비율요인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30세 미만 가구주의 경우 주거형태가 점차 불안정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가구주 중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주는 10.2%에서 8.9%로 감소하였으며, 전세에 거주하는 가구주는 51.5%에서 41.4%로 약 10%가 감소하였다. 이 감소분은 대신 보증부월세 및 사글세와 같은 불안정한 주택 거주방식을 증가시켰다. 기타<sup>5)</sup>의 거주형태는 2005년 11.4% 증가

하였다.

월세와 같은 불안정한 주거형태의 증가는 잦은 이사를 초래한다. 한국의 이사 횟수는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인다(손낙구, 2008). 잦은 이사는 미래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가구분화, 출산과 같은 중대한 결정들을 미루게 하는 이유가 된다. 자녀의 교육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거지 확보가 가장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1985년 및 2005년)

[그림 II-9] 경기도 연령별 거주형태 구성 (1985~2005)

5) 2005년 통계의 주거형태 구분이 세분화됨에 따라 2005년 통계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주택을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1985년 통계의 경우 보증금월세, 월세(사글세), 무상주택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림 II-10]은 수도권 지역의 연령별 거주형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수치의 차이가 있지만 젊은 가구주의 거주형태 변화는 서울과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30세 미만의 가구주의 경우 기타의 거주형태가 증가하였다. 이에 비하여 30대 가구주의 경우 감소한 자가거주율(1.7%)에 비하여 전세거주율이 더 증가하였다(7.1%). 따라서 기타의 거주형태 역시 같이 감소하고 있다. 40대 이상 가구주는 일괄적으로 자가거주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전세거주율은 소폭 증가하였다. 기타의 거주형태 역시 소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에서 젊은 가구주의 기타 주거형태의 증가는 통계표에서 보이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를 지닌다. 한겨레21은 한국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심층 취재함으로써 한국 빈곤계층의 대물림 현상을 지적하였다. 이들의 삶의 의지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실직과 임대 아파트의 관리비 및 임대료였다.

특히 젊은 세대가 현재 도시에서 적은 비용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고시원, 단칸방을 전전해야하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보증금 대출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열악한 주거형태를 찾는 경우가 늘어났다. 1980~90년대 고시생과 소외계층이 주로 거주하였던 고시원의 형태가 현재는 직장인과 학생에게 애용되고 있다(경향신문, 2010b). 이와 같은 변화는 과거의 소외계층이 현재는 세대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현재의 주거문제가 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회 문제임을 뜻한다.

## 2) 불안정한 주거환경이 청년세대에게 주는 파급효과

불안정한 주거환경이 청년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첫째, 청년 세대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소득대비 주거비부담을 고려해볼 때, '88만원 세대'로 상징되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주거비는

증가함에 따라 청년 세대의 주거비부담은 특히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장경섭(2007)은 이를 한국사회에서 존재하였던 개발을 통한 시민권(Developmental Citizenship)이 1997년 IMF 체제가 끝나면서 그 수명을 달리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이라 지적하고 있다. 장경섭(2007)은 개발을 통한 시민권을 Marshall(1964)이 주장했던 유럽에서의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1997년까지 한국사회의 급격한 경제발전은 국민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업률을 낮춤으로써, 전 국민에게 포괄적인 사회적 시스템이 아닌 개인적인 자원동원을 통하여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해주었다(장경섭, 2007). 그러나 사회가 아닌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와 같은 레짐은 1997년 IMF를 거치며 문제에 부딪혔다. 더 이상 젊은 세대의 경제수준을 일정한 속도로 증가시킬 수 없어졌으며 양질의 일자리 역시 감소함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이들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게 되었다.

개발을 통한 시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사회적 시민권은 부재함에 따라 청년층은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였다. 주거비 상승은 결혼비용의 증가를 가져왔고 따라서 청년층은 결혼시기를 늦추기 시작하였다. 결혼시기가 늦어지면서 출산률 역시 낮아지고 있다. 출산 역시 교육과 보육의 책임이 가구에게 대부분 전가됨에 따라 그 부담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숫자 역시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정성은 이들이 갖는 시기적 특성에 의해 더욱 그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 가구분화가 이루어지는 주요한 시기에 있는 이들의 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인구 구성 및 문화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기혼자 중 약 20%가 주택비용으로 인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40대는 20.7%에 머물렀던 점에 반하여 30대는 29.7%, 29세 이하는 36.8%가 주택비용으로 인하여 출산을 포기하였다고 대답하여 주택비용이 젊은 세대에게 주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서울에서의 높은 주거비는 청년 세대에게 미래의 소득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한국은 모든 도시의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가진다. 우선 고등교육기관의 일방적인 집중이다. 흔히 명문대학이라 불리는 학교의 80%가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은 서울로 이주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높은 주거비는 학생들의 삶의 질에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기숙사가 모든 학생에게 제공될 수 없음에 따라 옥탑방 혹은 반지하방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등록금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다. 한국에서 자식 세대의 독립이 대학졸업 이후로 이뤄지면서 이와 같은 대학 진학을 위한 전반적인 비용 부담은 부모 세대에게 돌아간다. 교육비뿐만 아니라 이 같은 비용에 여유가 있지 않다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학벌 구조가 위계적인 한국 사회 내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없이는 양질의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지방대 출신의 학생들이 정규직 직장을 구하기가 특히 더 어려운 현실은 젊은 세대들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이유로 작용한다.

대학뿐만 아니라 현재 안정적인 양질의 직장으로 분류되는 공무원과 대기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83.6%, 100대 기업 본사의 9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상태이다. 특징적인 점은 지식에 기초한(knowledge-based) 양질의 일자리일수록 수도권 집중률이 높다는 점이다. 2002년 수도권의 제조업집중률은 56.4%에 그쳤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은 72.9%, 벤처기업은 77.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청년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빨리 얻는 것은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병희는 그의 연구(2002)를 통하여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불안정성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는 첫 일자리에 정착하는 기간이 길수록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봤을 때, 첫 직장은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며 이에 따라 앞으로의 추이가 양극화되는 위험이 있는데,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용은 경제적 능력

이 부족한 청년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앞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진다.

셋째, 높은 주거비용은 자녀세대가 독립할 나이가 되어서도 부모 세대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함으로써 이들 간의 내부적인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사회적 이슈를 가져왔던 우석훈의 '88만원 세대론'에 따르면 현재의 청년 세대는 윗 세대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으며, 이와 같은 경제적 약자의 지위가 청년세대의 자율적인 삶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우석훈, 2007). 경제적 지위가 미약하면 부모 세대의 경제적 기반에 의지하게 되며 이는 결국 한 개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삶을 살기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우석훈(2007)은 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이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청년 세대의 성인기 이행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대신 그 부담을 가구에게 전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접근은 독립을 할 나이가 된 자녀 세대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 세대를 통제하려는 부모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사회적 현상을 간과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젊은 세대의 주거상황이 지난 20년 동안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더 이상 급속한 경제성장의 수혜가 국민들에게 돌아감으로서 문제시 되지 않았던 기본적인 권리들이 '고용 없는 성장'이 본격화된 1997년 이후의 시기에서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변화의 길목에 서있는 젊은 세대에게 이 변화의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렇지만 모든 경제적 및 사회적 부담을 가구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 충격은 개인에게 어떤 보호막도 없이 흡수되었다. 인간이 필수적으로 누려야할 의식주의 영역에서의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과 동일한 속도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사회적 시민권을 확보해주는 정책적 시도가 요구된다.



### Ⅲ. 외국의 성인기 이행

1. 일본
2. 영국
3. 캐나다



### III. 외국의 성인기 이행

성인기 이행의 지연과 이행 양상의 다양화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비록 그 정도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다양화되는 현상은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목격되어 왔다(Fussell et al., 2007). 이 장에서는 성인기 이행 양상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일본, 영국, 캐나다의 관련 연구와 통계자료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 1. 일본

일본에서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의 장기화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고용문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대학진학률은 30% 수준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청년 노동시장은 고졸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청년실업률(15-29세)도 4% 초반대로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처럼 안정적이던 성인기로의 이행은 199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耳塚他(2000)는 1990년대 이후에 성인기의 이행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들로 고졸자 노동시장의 쇠퇴, 청년문화의 변화, 교육이념 및 진도지도의 변화 그리고 가정환경의 변화 등을 들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부터 시작된 ‘잃어버린 10년’의 경기 침체 과정에서 청년들과 사회, 학교와 기업 간의 유기적 관계는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 전후를 ‘취업빙하기’<sup>6)</sup> 그리고 이 무렵에 대학을 졸업한 이들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른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30대 중반에 접어든 현재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분으로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sup>7)</sup> 이와 같이 청년

6) 일반적으로 1971년생에서 1981년생 사이를 취업빙하기세대라고 일컫는다.

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청년들에 대한 취업지원도 30대 후반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宮本(2006)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청년의 성인기로의 이행을 전후 부흥기, 고도성장기, 이행기 그리고 구조적 전환기와 같이 크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표 III-1을 참조), 이와 관련하여 耳塚(1996)는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서열화, 전문계 고등학교 비율의 축소 및 직업교육의 약화, 그리고 고등학생의 학교추천제에 의한 취업 등과 같은 특징들이 구축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宮本(2006)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荻谷他 1997, 玄田·曲沼 2004, 小杉 2003, 本田 2005)은 1990년대 이후부터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있어 구조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견해는 이러한 이행상의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이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1990년 초반까지는 소위 말하는 학교와 기업 간의 실적관계(merit system)가 효과적으로 작용한 탓에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은 매우 순조로웠지만, 1990년대 이후 고졸자 노동시장의 축소 그리고 청년 고용인력의 감소 등과 같은 노동시장내의 변화들이 성인기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학자들(荻谷他 1997, 宮本 2004, 本田 2005)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 구조에 있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

7)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점, 특히 청년층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표 III-1> 일본에서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시대별 구분

구분	성인기 이행 모델	교육제도	노동시장	가족
전후부흥기 (-1945년)	전통적인 이행 모델	억압된 경쟁기 (중전-1959년) 계층간 교육격차가 큼	잠재적 실업자의 정체(停滯)	부부가족제도의 이념 탄생
고도성장기 (1955년-1973년)	현대적 모델의 형성(전후형 청년기모델)	열린 경쟁기 (1960년-1974년) 일원적 능력주의 경쟁의 도입	· 청년노동시장의 형성 및 도시 지역으로의 이동 · 신규 학교졸업자 고용관행의 탄생	· 세대주 모델에 기초한 결혼 가족 · <교육하는 가족>의 탄생
이행기 (1974년-1989년)	현대적 이행 모델의 성숙(후기 청년기의 등장)	단한 경쟁기 (1975년-1989년) 일원적 능력주의 경쟁의 격화	· 신규 학교졸업자 고용관행의 정착	·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의 장기화 ·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증가 · <교육하는 가족>의 가속화
구조전환기 (1990년 이후)	이행 모델의 붕괴(후기청년기의 변용)	· 경쟁의 이완과 붕괴 · 고등교육 진학률의 상승 · 학교교육의 자유화, 다양화 · 학교와 고용간의 연계선이 불명확 · 고교 중퇴자 및 부등교자의 급격한 증가	· 일본형 고용의 붕괴 및 재편 · 청년노동시장의 축소 · 정규고용의 축소 · 청년실업률의 급증 · 신규학교졸업자 취직의 붕괴	· 결혼시기의 고연령화 및 출생률의 저하 · 부모의 정리해고, 임금 삭감

출처: 宮本(2006), p. 118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

## 1) 직업세계로의 이행

일본에서 청년들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지연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배경에는 고졸자 노동시장의 위축 그리고 대학 진학의 선발기능의 약화 그리고 청년들의 학교 졸업 후 진로의 다양화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고졸자의 구인수가 150만 명을 넘었지만 2002년에는 24만 명으로 약 1/6 수준으로 그리고 구인배율도 1992년 3.32배이던 것이 2003년에는 0.90배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文部科学省(2002)의 「学校基本調査」의 결과에 따르면, 1991년 대졸자의 취업률은 83%, 대학원 진학률은 7%로, 대학을 졸업하는 거의 모든 청년들이 취업 또는 진학을 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시작된, 소위 ‘잃어버린 10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청년들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2000년대 이후 4년제 대학 졸업자 가운데 진로미결정자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 (1) 학교교육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1990년대 중반이후 교육을 둘러싼 환경에 있어 여러 가지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먼저, 대학 설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완화에 따라 대학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실제로 文部科学省의 「学校基本調査」에 따르면 1990년까지는 대학 진학률이 30%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5년도 이후에는 50%대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진학률의 증가는 젊은 세대의 학습에 대한 욕구가 커진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어 임시방편으로 대학을 선택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직을 하는 이들은 전체 졸업자 가운데 19%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 III-2> 대학 진학률의 추이

(단위: %)

구분	1990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남	35.2	49.4	48.8	49.6	51.1	53.1	53.7	54.9	56.5
여	37.4	48.7	48.5	48.3	48.7	49.8	51.0	52.5	54.1
합계	36.3	49.1	48.6	49.0	49.9	51.5	52.3	53.7	55.3

출처: 文部科學省(2009), 「學校基本調査」

또한 宮本(2004)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학교육이 대중화됨으로 인해 일본사회도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 있어 1980년대 영국을 비롯한 유럽사회가 경험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양상이 바로 대졸자의 실업률 증가의 문제이다. 대졸자에 대한 노동력 수요가 동반되지 못한 대학 진학률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대졸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영국과 같이 청년 실업자를 위한 실업수당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학교 졸업 이후 실업상태에 빠지게 될 경우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빠지거나 또는 네트 카페를 전전하는 등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岩田 2008).

대학진학률의 증가에 따라 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 내용, 특히 직업 및 진로교육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本田(2005)는 대학진학률이 증가함에 따라 취직과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까지 주로 교육사회학자들(金子 1994, 矢野 1999)은 학벌 및 학력(學歷) 등과 같은 학교교육의 외부적 효과에 관심을 가져왔으나, 최근에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 특히 취직과의 관련성에 있어 교육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2)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는 정부의 연구기관(勞働政策·研修機構 1998, 2000, 2001), 교육사회학자(荻谷他 1997, 耳塚 2000, 宮本 2002), 노동경제학자(玄田 2001) 등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주로 실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들이 청년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1990년대 이후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있어 구조적 차원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의 장기화, 불안정화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먼저, 종래에는 학교가 학생에 대한 1차적 선발기능을 담당하고, 기업은 학교의 선발 결과에 기초하여 청년들을 채용하는 유기적 협력관계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장기간에 걸친 학교와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각 학교별로 채용(추천) 인원을 배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양자 사이에서 공공직업안정소가 중개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안정적 관계가 구축되었지만, 이러한 안정적 관계는 1990년대 중반이후 청년 노동력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률(內定率)의 변화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특히 대졸자의 경우 1990년 취업률이 81.0%였으나, 2000년에는 55.8%로 10년 사이에 취업률이 25% 가까이 하락하였다.

<표 III-3> 고졸자 및 대졸자 취업률 추이

(단위: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고졸	35.2	25.6	18.6	16.6	17.4	18.0	18.5	19.0
대졸	81.0	67.1	55.8	56.9	59.7	63.7	67.6	69.9

출처: 文部科學省(2009), 「學校基本調査」

한편, 고졸자의 경우 최근 들어 학교 졸업 후의 진로가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35.2%였으나,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2008년 현재 19.0%로 낮아졌다. 즉, 이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취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았으나 2007년 이후 대학정원이 수험생의 수를 넘어서는 소위 ‘대학전원입학시대(大学全入時代)’로 돌입하면서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荻谷 2009). 이러한 현상에 대해 矢島·耳塚(2005)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玄田(2001)는 청년들의 진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상이 청년 개인에게는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청년들이 선형화된 진로 유형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비선형적 진로)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향후 일본사회가 다원주의적 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한다.

〈표 III-4〉 일본 청년 실업률의 추이

(단위: %)

구분	1990년	1995년	1999년	2000년	2002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5-19세	6.6	8.2	9.0	12.1	12.8	10.2	9.4	8.7	8.0
20-24세	3.7	5.7	6.2	8.6	9.3	8.4	7.7	7.5	7.1
25-29세	2.7	4.3	4.9	6.2	7.1	6.2	6.0	5.7	6.0
전체 실업률	2.1	3.2	3.4	4.7	5.4	4.4	4.1	3.9	4.0

출처: 總務省統計局(2009), 「勞働力調査」.

小杉(2002)는 프리터의 증가에 주목하면서, 프리터를 크게 유예형, 꿈 추구형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프리터로 전락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취직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耳塚(2000)는 청년 문화에 있어 소비문화의 영향 즉, 생산 보다는 소비에 익숙한 청년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이 프리터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잠재적 프리터 집단에 대한 교사의 미온적 대응과 진로교육을 위한 시스템의 부재도 프리터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III-5〉 일본 프리터의 추이

(단위: 만명)

구분	1992년	1997년	2002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5-24세	72	102	117	104	95	89	83
25-34세	29	49	91	97	92	92	87
합계	101	151	208	201	187	181	170

출처: 總務省統計局(2009), 「勞働力調査」.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乾他(2006)은 프리터의 증가를 단순히 청년들의 의식의 문제로 설명하려는 경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청년 개개인들의 안고 있는 미시적 차원의 문제 요인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기 변동과 같은 거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프리터와 니트의 증가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耳塚 2000, 本田 2005)도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전문직,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부모가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 프리터가 될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堀(2007)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접적으로 자녀들의 성인기 이행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학력 요인을 경유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녀들이 프리터가 된 이후에는 학력 요인의 영향이 거의 소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川崎(2008)의 연구에서는 프리터를 포함한 비정규직 청년들이 정규직

청년들에 비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종합적으로 조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문제는 비정규직 청년들이 향후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의 설정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永瀬(2002)는 프리터의 경험이 향후 취업상태뿐만 아니라 결혼 및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표 III-6> 일본 니트(청년무업자)의 추이

(단위: 만명)

구분	1993년	1997년	2002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5-19세	8	9	12	9	10	9	9
20-24세	13	12	17	16	17	16	16
25-29세	10	11	18	20	18	18	18
30-34세	9	10	17	19	18	18	19
합계	40	42	64	64	62	62	64

출처: 總務省統計局(2009), 「勞働力調査」.

總務省(2003)의 「就業構造基本調査」에 따르면, 니트와 학력 간에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중졸 청년 가운데 약 10%가 니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小杉(2005)는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취업을 희망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總務省(2003)의 「就業構造基本調査」에 따르면, 최근 니트의 연령 구성에 있어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이상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 2) 결혼과 출산

<표 III-7>은 2005년 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가 실시한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들의 부모 동거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 결과에서 주

목할 점은 여성들의 경우 저(低)연령대에서는 동거비율이 일부 감소하고 있으나, 고(高)연령대(30-34세)에서는 부모와의 동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山田(2009)는 고용상황의 악화에 따른 소득의 감소, 미혼 여성들의 결혼 조건을 충족하는 남성들의 부족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분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청년들의 부모와의 동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大石他, 2007). 즉, 상당수의 일본 부모들은 자녀들의 분가에 대해 관용적이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III-7〉 연령별 미혼율의 추이

(단위: %)

구분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남	25-29세	34.3	46.1	46.5	55.1	64.4	69.3	71.4
	30-34세	8.0	9.9	11.7	21.5	32.6	42.9	47.1
	50세	1.5	1.3	1.7	2.6	5.6	12.6	15.4
여	25-29세	15.2	21.7	18.1	24.0	40.2	54.0	59.0
	30-34세	5.7	9.4	7.2	9.1	13.9	26.6	32.0
	50세	1.4	1.9	3.3	4.5	4.3	5.8	6.8

출처: 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2006), 國勢調査 「人口統計資料集」

청년들의 결혼의식에 관한 연구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청년들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2005)의 조사에 따르면, 30세-34세 미혼 남성의 28.9%, 그리고 동일 연령대 미혼 여성의 19.4%가 결혼할 의사가 없으며,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內閣府(2003)는 미혼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 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못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大石他(2007)의 연구에서는 미혼 청년들의 경우 결혼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본인이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 그리고 본인의 취업여부, 소득 등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표 III-8〉 미혼자 가운데 결혼 희망자 비율의 추이

(단위: %)

구 분		1982년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2005년
남	18-19세	71.8	75.2	65.6	66.0	59.8	70.1
	20-24세	68.2	68.5	59.7	66.7	72.4	72.0
	25-29세	71.5	69.9	63.5	64.3	70.3	69.0
	30-34세	67.3	71.4	68.0	63.9	72.4	69.9
	18-34세	69.6	70.4	62.8	65.5	69.5	70.3
여	18-19세	83.7	80.1	73.2	70.5	71.6	65.1
	20-24세	84.7	77.6	78.2	73.8	77.0	76.5
	25-29세	79.4	78.9	80.0	79.4	78.5	81.8
	30-34세	64.8	70.0	69.2	72.1	76.1	79.3
	18-34세	82.0	78.0	76.7	74.5	76.4	76.4

출처: 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2006), 「第13回出生動向基本調査」.

또 하나의 견해로는 상당수의 미혼 남성과 여성들은 결혼을 희망하지만 경제적 문제, 직장생활 그리고 출산 및 육아 등에 대한 부담과 같은 이유로 인해 본의 아니게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본인은 결혼을 희망하지만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일본사회에서는 ‘콘카츠(婚活),’ 즉 미혼 남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의 상대자를 찾기 위한 활동이 유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山田(2009)는 사회 일각에서는 미혼 상태의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2006)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전에 비해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 청년들(30-34세)은 줄고 있지 않으며,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 소폭이긴 하지만 결혼을 희망하

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1987년 83.8%, 2005년 84.3%).

마지막으로, 미혼 여성들의 결혼 기피현상을 일본사회의 성역할분업의식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宮本(2005)는 일본과 같이 남녀 간의 성역할분업 의식이 명확한 사회에서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직장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와 동시에 소득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결혼전후에 있어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정도에 큰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 등이 결혼을 기피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 3) 부모로부터의 자립 및 독립(분가)

청년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관한 연구(宮本他 1997, 山田 1999)는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06)의 조사에서도 매년 30세 이상 독신 여성들의 부모와의 동거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혼 청년들의 부모와의 동거율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이 불안정해지고, 동시에 소비를 통한 자기만족에 대한 욕구의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宮本他(1999)는 미혼 청년들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부모의 경제력에 자녀들이 의존하려는 경향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山田(1999)는 이처럼 부모에게 의존한 상태로 결혼 및 분가를 미루는 미혼 청년들을 ‘ parasite・싱글(기생(寄生)독신)’이라고 명명하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山田는 1990년대 ‘기생(寄生)독신’의 증가요인으로 부모의 태도와 성역할분업의식을 꼽고 있다. 그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확보한 부모들이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하는 태도와 대학졸업 시까지의 교육비 부담 그리고 남성의 경제력을 중시하는 성역할분업의식이 기생독신들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현상도 2000년대 이후에는 부모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곤란 그리고 고용상황의 악화에 따른

경제적 자립의 곤란 등과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부모와 동거를 하는 미혼 독신들이 늘어났다.

〈표 III-9〉 미혼여성 및 남성의 부모 동거 비율

(단위: %)

구 분		1982년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2005년
남	18-19세	71.7	75.2	65.6	66.0	59.8	70.1
	20-24세	68.2	68.5	59.7	66.7	72.4	72.0
	25-29세	71.5	69.9	63.5	64.3	70.3	69.0
	30-34세	67.3	71.4	68.0	63.9	72.4	69.9
	18-34세	69.6	70.4	62.8	65.5	69.5	70.3
여	18-19세	83.7	80.1	73.2	70.5	71.6	65.1
	20-24세	84.7	77.6	78.2	73.8	77.0	76.5
	25-29세	79.4	78.9	80.0	79.4	78.5	81.8
	30-34세	64.8	70.0	69.2	72.1	76.1	79.3
	18-34세	82.0	78.0	76.7	74.5	76.4	76.4

출처: 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2006) 「第13回出生動向基本調査」

한편, 미혼 청년들의 부모와의 동거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청년의 의식의 측면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경기 침체,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의 증가 등과 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의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있다. 内閣府(2003)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의 곤란이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어쩔 수 없이 부모와 동거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大石(2004)는 실업과 비정규직의 증가가 청년들의 부모와의 동거 시간을 연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山田(2009)는 이처럼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부모와의 동거가 장기화되는 상황들이 청년들을 더욱 소극적이며, 보수적 성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大石他(2007)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분가에 대해 부모들이 매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분가시점에 있어 아들과 딸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즉, 아들의 경우 대학졸업 또는 취직이후에 분가하기를 바라지만, 딸의 경우 결혼 후 분가를 희망하는 비율이 아들에 비해 5배 정도 높았다.

〈표 III-10〉 미혼 여성의 취업상황

구분	정규직 고용	자영업 등	비정규직	무직 및 가사
1987년	83.2%	3.2%	4.9%	9.0%
2005년	55.6%	2.2%	32.8%	9.3%

출처: 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2006) 「第13回出生動向基本調査」

内閣府(2007)의 「国民生活白書」에 따르면, 1969년 시점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2006년의 조사에서는 부모의 35.9%가 자녀와 따로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는 부모와 자녀 세대의 생활습관의 차이, 상호 사생활의 존중 등과 같은 이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岩上(2003)는 미혼 남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로 소득의 감소, 높은 주거비용 그리고 주거에 필요한 정부차원의 지원시스템의 부재를 들고 있다. 미혼 남녀들의 소득 감소과 관련하여 <표 III-11>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1997년에서 2007년 사이에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소득의 감소가 부모로부터의 분가 또는 결혼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1〉 일본 저소득(연소득 250만엔) 청년 노동자의 비율

구분		1997년(%)	2007년(%)
여	15-24세	74.3	79.1
	25-34세	51.5	57.3
남	15-24세	56.6	67.7
	25-34세	12.5	22.1

출처: 内閣府(2008), 「就業構造基本調査」.

#### 4) 성인기 이행 지연의 원인

##### (1) 사회적 요인

먼저, 宮本(2005)는 1945년 이후 일본의 청년기 모델이 가지는 특징으로 가족과 학교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해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 그리고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청년들의 취업률도 1990년대 이전까지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3자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오히려 공적 직업훈련제도 및 학교 밖 청년지원시설의 부족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堀(2007)과 太郎丸(2006)에 따르면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청년 등과 같은 이들은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며, 청년의 성인기로의 이행을 개인의 문제로 보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2000년대 이전까지 정책적 차원 그리고 학문적 차원에서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小見山(2007)는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의 장기화에 있어 고용환경의 악화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1990년대 중반 이후 소위 일본형 고용제도(중신고용 및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제도)의 붕괴가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을 장기화 및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 経団連(일본경제단체연합)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고용모델<sup>8)</sup>을 제시하게 된다. 이 가운데 고용유연형 모델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의미하며, 경영자측은 이들의 비중을 늘려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고용환경의 변화는 ‘근로자파견법’ 상의 파견근로 범위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는 청년 비정규직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宮本(2005)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중간층 가정의 청년들이 실업

---

8) 3가지 모델, 즉 고도전문능력활용형 모델, 장기축척능력활용형 모델 그리고 고용유연형모델을 제시하였다.

및 빈곤상태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청년의 성인기 이행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사회계층적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石田 2005, 太郎丸 2006)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와 같은 계층적 요인이 자녀들의 진로, 특히 프리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三浦(2005)는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있어 학교성적이나 사회계층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적 요인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後藤(2008), 野村(2008)는 심리학의 영역에서 청년기 연구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 프리터, 니트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橋木(2004)는 청년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자립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으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과 청년들의 (미)자립에 대해 관용적인 사회 전반적 경향에서 찾고자 한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즉, 교육의 목표가 집단에서 개인으로, 학력신장에서 개성의 존중으로 그리고 관리에서 자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 청년들 또한 자신들의 진로 모색에 소극적이었으며, 진로결정을 유예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분가에 대한 의식에 관한 内閣府(2003)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중인 20대 미혼 여성은 생활만족도가 높으나 30대로 접어들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부모와의 동거기간이 장기화 되면 될수록 양자 간의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田中(2006)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분가 전후의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혼 여성들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분가하기 전에 비해 분가한 후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山田(2009)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을 통한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강하며, 조건이 부합될 경우 결혼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다는 것이다.

## (2) 개인적 요인

大石他(2007)은 일본에서 청년들의 사회, 경제적 자립의 지연 등과 같은 문제를 자립심의 결여 등 내면적, 심리적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그 예로, 安達(2004)는 청년들의 직업미결정의 원인으로 청년들이 자신들에게 꼭 맞는 직업이 존재할 것이라는 과잉된 신념,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직업선택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을 꼽고 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먼저, 長峰(2003)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진로미결정 상태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특징으로 부모의 기대를 필요 이상으로 의식하고 있으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부모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安福(2005)의 연구에서도 진로미결정상태에 놓인 청년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田澤(2006)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부재가 청년들의 진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부모의 기대에 대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부모 또한 자녀들이 부모의 견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白井他(2009)는 청년의 성인기 이행과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사이의 영향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에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며, 직업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성인기로의 이행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은 이들은 자신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성인기 이

행과 사회관계자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福島大学 2007, 労働政策·研究機構 2007, 白井 등 2009)에서는 대학시절의 친구관계, 아르바이트 경험, 동아리활동 경험 등과 같은 사회관계자본이 성인기로의 이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 프리터 또는 니트로 전락한 이들의 경우 친구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며, 사회적 관계망도 축소되기 때문에 프리터 및 니트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리고 프리터와 또래집단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新谷 2007, 内田 2005, 竹石 2006)에서는 동질성이 강한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중요한 안식처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반대로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혼 여성들의 결혼 기피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宮本(2005)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들의 경우 소득이 높으며, 부모의 가업 승계 또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매우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타인의 강요가 아닌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독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다. 그리고 大石他(2007)는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청년들의 자립을 지연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분가 및 결혼에 대한 부모의 유보적 태도가 청년들에게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유예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宮本(2005)는 일본사회에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이행에 대한 규범 및 모델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이 분가 및 독립의 시점을 설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5) 요약

1990년대 이후 일본사회에서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행의 경로 또한 비선형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성인기

의 이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용, 주택, 가족생활 등 생활전반이 불안정해짐으로 인해 청년들 본인도 자신들의 인생과 진로를 설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예로 대학졸업자 가운데 20% 정도가 진학, 취업 등 진로가 결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의 문을 나서는 실정이다. 학교 졸업 후 취업이 결정된 이들 가운데에서 상당수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으로 직업세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宮本(2005)는 청년들을 둘러싼 제반환경들이 개인화(individualized)됨으로 인해 청년들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의존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2004년 이후 청년정책의 대상에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과 남성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後藤(2001)는 1960년대에 구축된 일본형 대중사회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복지국가의 이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모델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그 당시의 표준화된 이행 모델의 조건으로는 고졸학력, 학교졸업 후 바로 취직(新卒採用), 장기근속, 대기업 근무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러한 일본의 ‘전후(戰後)형 성인기 이행 모델’은 기본적으로 차별화된 성역할분업의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宮本(2005)는 일본형 대중사회의 붕괴는 청년들을 결혼할 수 있는 이들과 결혼이 어려운 이들로 분리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아울러 당사자인 미혼 남녀들에게 있어 미혼 상태가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인생 전체의 설계가 곤란해지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진행됨으로 인해 학교교육, 대학입학에 있어 선발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의 교육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佐藤(2000)는 선발 시스템의 동맥경화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荻谷(2009)는 1990년대 이후 청년들의 학습시간이 감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계층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부모가 사무직, 자영업 그리고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자녀들의 학습시간이 크게 줄었으며, 이들의 경우 성공에 대한 열망(aspiration)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진학 또는 취업도 하지 않는 니트(무업자들)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시간제 취업자라고 할 수 있는 프리터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의 경우 20대 초반 니트 또는 프리터로 전락할 경우 30대 이후까지도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청년 고용 및 자립지원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게 된다. 나아가 이들에게 있어 일본의 전통적 고용관행, 즉 졸업예정자를 채용의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상황 하에서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부모에 대한 의존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결국 이들의 불안정한 청년기는 장기화 및 고착화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1990년대 이전까지 양호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와 더불어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 모델에 관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했다. 최근 청년들의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자녀들의 분가, 결혼 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宮本(2005)는 이러한 현상을 영국은 이미 20년에 경험했으며, 현재 일본이 영국이 경험했던 문제양상들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 장기화의 원인 및 배경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본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모로부터의 자립시기 등을 포함한 일본형 이행 모델에 대한 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 2. 영국

많은 서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는 최근 수십 년간 경제 및 사회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 유형과 시점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특히,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시기가 늦춰지고 교육 연한이 길어졌으나 청년의 고용 상태는 교육 수준에 상응하지 않고 있으며,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직업세계로 이행하고 곧이어 부모로부터 분가를 하는 것이 성인기 이행의 관례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행기간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연장된 이행 기간의 교육이나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청년들 스스로 마련하기 힘든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지원이나 정부 기금(benefits)의 수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자원의 수혜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성인기 이행에서 부모의 지원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독립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영국 사회의 관습적인 분위기와 최근의 추세인 성인기 이행 시점의 연장이라는 현실 간의 갈등이 일정 정도 존재하는데, 이행 기간의 연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체계화가 미진하여 청년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된다(Biggart & Walther, 2006).

Walther(2006)에 따르면, 영국의 성인기 이행 지원 체계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보다 자유주의적(liberal)이며 소극적인(minimal)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즉, 청년기를 경제적 독립을 성취해 나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보고 청년 실업 등의 문제를 자립능력이 부족하고 의존적인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의 개입이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편이라는 것이다. Walther(2006)는 이러한 영국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관련 정책의 특성이 자유주의적이고 소극적인 개입의 원칙에 기반한 영국의 복지국가모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Furlong(2007)은 영국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의 최근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이행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십대 후반에 직업세계로 이행하던 예전의 청년들과는 달리 20대 중반이 되어도 취업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 이행의 과정이 비선형적이 되고 있으며, 학교, 직장, 실업, 직업 훈련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일종의 ‘요요’와 같은 이행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성인기 이행의 과정의 복잡성과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넷째,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과정이 급속하게 개성화됨에 따라 타인의 이행 과정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성인기 이행의 과업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성인기 이행 유형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 거시적으로 볼 때에는 청년들 간의 불평등의 구조는 아직 남아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영국에서의 연구는 서유럽 국가들과의 협동 비교 연구가 활발한 편이며, 정책 연구와 이론적 연구가 비교적 고르게 축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선, 1990년대 이후의 서유럽 국가간 비교연구과제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년들의 사회 통합 정책, 청년 실업 대책, 성인기로의 비선형적 이행 경향 등에 주목해왔다(Walther, 2006). 비교 연구는 종종 정책적 연구와 결합되기도 하는데, 서유럽이나 북미 청년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청년 이행의 변화를 진단하고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Biggart & Walther, 2006; Rendall et al., 2009). 한편, 청년 이행에 관한 영국에서의 연구는 다양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Morrison(2008)은 이들 이론적 연구들의 전반적 동향을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한 바 있다. 즉 한편으로는 사회의 탈전통화와 생애주기의 개성화를 분석함으로써 청년의 성인기 이행을 밝히려는 사회학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이행 과정의 불평등과 계급재생산의 문제에 주목하는 교육사회학적 전통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전자가 후

기 산업사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자유와 자율적 선택에 기초한 상대적으로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다면, 후자는 자율적 선택을 제한하는 사회구조적 제약을 분석하는데 관심을 갖는다(Morrison, 2008; 532). 영국 학계의 청년 이행 관련 연구는 사회학적이거나 교육사회학적 측면의 접근이 주를 이루지만 문화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들도 적지 않다(Pole et al., 2005).

### 1) 직업세계로의 이행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는 영국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교육 수준의 상승과 교육 연한의 연장과 아울러 고학력 청년들의 고용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실업이나 니트 청년에 관한 정책적 또는 비판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최근 수십 년간 영국 청년들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킨 배경으로는 경제적 변화와 정책적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의 호황으로 인해 청년의 직업 전망이 매우 좋았으나 1970년대 중후반 이후로는 노동시장 불안과 고용불안이 증가했다. 전통적으로 중등교육 이후 성인기로의 조기 이행이 권장되던 영국 사회의 분위기와 맞물려 1970년대 초반까지 청년들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후반 이후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국가 정책이 변화하면서 청년들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영국의 청년 대상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영국에서는 청년 개인들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청년 대상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시키고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필요한 자원을 가족에 의존하여

해결하도록 했으며, 교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Pollock, 1997; Tracy & MacDonald, 2007).

1970년대 이전에는 의무중등교육이 끝나는 15-16세에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었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의무중등교육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는 학교와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도제식 모델(apprenticeship)의 도입이 시도되기도 하였다(Vickerstaff, 2005).

고교 졸업 후 대학교육이나 직업교육을 통해 학업을 연장하게 하는 요인에 대해서 영국에서는 여러 논의들이 제출되어 왔다. 크게 보면, 사회구조적인 압력에 주목하는 입장, 개인적 선택을 강조하는 입장, 학업기간 연장을 복합적이고 우연적인 과정으로 보는 입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Furlong(2007)은 청년들의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이행 유형의 변화 원인을 사회구조와 학교제도에서 찾고 있다. 즉, 고등교육 인력을 요청하는 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학교 교육 제도의 변화에 따라 청년들이 학업기간을 연장하고 직업세계로의 이행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영국의 경제는 중등교육 이상을 이수한 인력을 선호함에 따라 중등교육만을 이수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전반적인 학력 인플레이션은 교육과정의 변화와 함께 심화되었다. 즉, 영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일어난 교육과정의 변화는 학업능력이 현저히 뛰어나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다양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이에 따라 고학력자들의 양산에 상응하는 인적자원의 질의 제고가 동반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Hodkinson와 Sparkes(1997)는 청년들의 직업 세계로의 이행을 청년 개인이 처한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본다. 청년 개인의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과 청년들의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함께 고려하면서도 이러한 의사결정과 상호작용이 예측하기 힘든 전환점이나 경로들 내에서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Hodkinson와 Sparkes(1997)는 청년들의 직업 세계로의 이행에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혹은 니트 상태에 남는 선택은 환경의 영향일 수도, 기회주의적 선택일 수도, 또는 감정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은 부분적 정보로 인한 결정일 수도 있다고 본다.

#### (1) 학교교육기간의 장기화

지난 30여 년간 영국에서는 중등교육 이후의 고등 교육 및 직업 교육 기관에 진학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중등 이후 교육 이수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특히 여성 교육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하의 표에 보듯이, 2005-2006년 현재 영국 전역에서 약 4백5십만 명이 전일제 또는 파트타임으로 중등 교육 이후의 성인계속교육을 받고 있다. 이 숫자는 1970-71년도 대비 2.5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여학생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1970-71년도의 경우 42%가 여성이었던 데 반해, 2005-2006년도에는 57%가 여성이다. 2005-2006학년도 현재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은 2백5십만 명으로, 1970-71학년도의 62만여 명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2005-2006년도의 여학생 수는 1백 5십만 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70-71년도의 전체 대학생 중 여학생 비율인 33%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표 III-12> 대학 또는 성인계속교육 재학생 수 1970~ 2006

(단위: 천명)

	1970/71		1980/81		1990/91		2005/06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성인계속교육 (총원)	1,007	725	851	820	986	1,247	1,842	2,609
(전일제)	116	95	154	196	219	261	517	538
(파트타임)	891	630	697	624	768	986	1,325	2,071
고등교육(총원)	416	205	526	301	588	491	1,085	1,456
학부(전일제)	241	173	277	196	345	319	561	701
학부(파트타임)	127	19	176	71	148	106	267	458
대학원(전일제)	33	10	41	21	50	34	116	119
대학원(파트타임)	15	3	32	13	46	33	140	177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8).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참여율은 1970년대 이래 크게 증가해왔다. 고교 졸업 후 전일제로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의 비율은 1980년에 13%였으나, 2000년에는 33%로 크게 증가했다(Walker & Zhu, 2003). 1970-1971 학년도 대비 2006-2007학년도의 전일제 대학생 수는 3배가 되었다(414,000명에서 1,269,000명으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 수보다 많아졌다. 2008년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에 20대였던 현재 30대 초반의 성인 중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는 여성(43%)이 남성(39%)보다 많았다(Berrington et al., 2010).

1970년대 이래 급격한 고등교육 참여율의 증가세를 지난 10년간만 떼어 놓고 본다면,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다. 지난 10년간의 20대 초반 청년들의 고등교육 참여율의 증가는 예전만큼 큰 폭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 특히 22세~24세 남성의 경우 전문대 이상의 교육 수준의 자격(higher level qualifications) 소지자가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이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동 나이대 여성의 경우 1998의 30.6%에서 2008년에는 34.7%로 일정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Berrington et

al., 2010).

〈표 III-13〉 16~34세 대학졸업(전문대, 직업교육 포함) 이상 인구비:  
1998년과 2008년 비교

(단위: %)

연도	1998년		2008년	
	남	여	남	여
16-19	1	1.3	1.4	1.4
20-21	11	11.3	8.5	13.8
22-24	28.9	30.6	30.3	34.7
25-29	30.3	26.9	36.9	40.4
30-34	27.1	24.8	36.8	43.2

출처: Berrington et al., 2010. p.8

원출처: UK Labour Force Survey 1998~2008

교육을 받는 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고등교육 또는 직업교육이 임금수준이나 직업적 전망에 과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Walker와 Zhu(2003)는 지난 수십 년간의 통계자료를 검토하면서, 영국에서 교육 수준과 임금 수준간의 상응 관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개인별로 차이가 크고, 특정 전공에서만 상응관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과 임금 간 상응 관계는 경제학, 경영학, 법학 전공자들에게는 높게 나타나지만 인문학 전공자에게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볼 때, 고등교육 이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이 임금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Walker & Zhu, 2003).

## (2)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및 문제점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의 기간이 길어지고 비선형적이 됨에 따라 청년들의 경제 참여의 유형 또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비경황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증가와 실업, 비정규직 참여의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1) 실업

18-24세 청년층의 실업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청년 노동 정책의 주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영국에서는 16-17세 청년들은 실업복지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반면, 18-24세 청년에게는 실업복지수당의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2009년에 18-24세 청년 50만 여명이 실업복지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Gregg와 Wadsworth(2010)은 2008년의 경제 침체 이후 청년 실업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에서 청년층 실업은 장년층에 비해 일반적으로 기간이 짧은 편이며, 장년층에 비해 실업율이 높은 대신 취업을 통한 실업 탈출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동안 청년 실업율은 성인 실업율의 2배 정도를 유지해왔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 실업율은 전체 실업율의 2배를 넘어 3배에 가까워지고 있다. 2008년 이후로는 청년들의 실업율도 높아졌을 뿐 아니라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들이나 소수 인종 청년들이 실업 상태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 III-14〉 18-24세 실업률

	18-24세 실업율	전체실업율
1995	15.0	8.6
1996	14.3	8.1
1997	12.9	6.9
1998	12.0	6.3
1999	11.2	6.0
2000	10.6	6.0
2001	10.4	5.1
2002	10.5	5.2
2003	10.6	5.1
2004	10.4	4.8
2005	11.0	4.9
2006	12.2	5.4
2007	12.3	5.3
2008	13.2	5.7
2009	18.0	7.8

출처: Bell & Blanchflower (2010)  
 원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3) 임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직종 취업

이하의 <표 III-15>에서 보듯이 통계 자료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임시직과 파트타임 취업을 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Berrington et al.(2010)은 여성 청년들의 파트타임 취업이 지난 10년간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파트타임과 임시직에서 일하는 청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일정정도 과장된 것일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학비의 인상 등으로 인해 학업 기간 중에 파트타임 및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학생 청년의 인구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학생 청년 인구를 제외한다면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직종에 종사하는 청년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유럽 전역에 걸쳐 평균적으로 임시직 노동자의 약 절반이 25세 이하의 청년층이라는 점을 들어 청년층의 정규직 취업이 감소하는 현상이 보편적 추세이며,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직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정규직으로 이행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리고 있음을 지적한다(Bynner, 2005; Furlong, 2007). Furlong(2007)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이나 일부 연구들은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직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간과함으로써, 이들을 보다 안정된 정규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로는 점차 많은 청년들이 임시직, 파트타임,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형태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들이 정규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표 III-15> 16~29세 취업 현황: 1998년과 2008년 비교

연령별 경제활동	남자			여자		
	1998%	2008%	변화량	1998%	2008%	변화량
16~19세	(n=3,496)	(n= 2,754)		(n= 3,271)	(n= 2,721)	
정규직 풀타임	25.1	16.1	-9.0	18.2	10.6	-7.6
정규직 파트타임	2.4	4.6	2.2	4.3	6.6	2.3
임시직	8.5	5.1	-3.4	6.6	3.7	-2.9
실업	9.1	9.4	0.3	5.4	5.4	0
학생	53.0	61.2	8.2	59.3	67.5	8.2
가정돌보기	-	-	-	3.6	2.7	-0.9
기타 비경제활동	2.0	3.7	1.7	2.6	3.5	0.9
20~21세	(n=1,345)	(n=1,167)		(n=1,410)	(n=1,206)	
정규직 풀타임	46.7	40.3	-6.4	37.9	31.1	-6.8
정규직 파트타임	3.2	3.8	0.6	6.6	8.8	2.2
임시직	6.5	4.9	-1.6	5.8	4.8	-1
실업	9.4	12.0	2.6	5.9	6.6	0.7
학생	30.6	36.0	5.4	30.3	35.0	4.7
가정돌보기	-	-	-	10.9	9.1	-1.8
기타 비경제활동	3.7	2.9	-0.8	2.5	4.7	2.2
22~24세	(n=2,098)	(n=1,695)		(n=2,385)	(n=1,824)	
정규직 풀타임	64.9	62.3	-2.6	49.4	48.7	-0.7
정규직 파트타임	3.2	4.8	1.6	10.6	11.9	1.3
임시직	6.9	5.6	-1.3	7.6	4.8	-2.8
실업	9.4	9.4	0.0	5.4	5.8	0.4
학생	12.0	14.3	2.3	9.5	12.9	3.4
가정돌보기	-	-	-	14.3	11.6	-2.7
기타 비경제활동	3.5	3.6	0.1	3.2	4.3	1.1
25~29세	(n=4,463)	(n= 3,077)		(n= 5,100)	(n= 3,562)	
정규직 풀타임	78.0	75.8	-2.2	51.0	53.1	2.1
정규직 파트타임	1.8	2.7	0.9	15.7	14.1	-1.6
임시직	5.3	4.5	-0.8	5.2	4.8	-0.4
실업	6.2	6.3	0.1	4.2	3.7	-0.5
학생	3.7	6.1	2.4	3.3	5.8	2.5
가정돌보기	-	-	-	16.1	14.5	-1.6
기타 비경제활동	5.0	4.7	-0.3	4.4	4.0	-0.4

출처: Berrington et al., 2010, pp.15-16.

원출처: UK Labour Force Survey 1998~2008

(4) 경제 비활동 인구와 니트의 증가

청년층의 비경활 인구(inactive)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일제 학생이 아닌 십대 청년 중에서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1998년에는 16-19세 남성의 2%, 여성의 2.6%가 전일제 학생이 아닌 비경활 인구였으나, 2009년에는 동 연령대 남성의 3.7%, 여성의 3.5%가 비경활 인구로 파악되고 있다(Berrington et al., 2010: 13).

일반적인 추세를 비교해 볼 때, 동아시아나 북미의 국가들에 비해 영국은 보다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Heinz, 2009). 정부의 지속적인 취업 권장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 십대 후반의 나이부터 니트(NEET)로 지내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2009년의 자료에 따르면, 18세의 영국 청년들은 45%가 전일제 학생이고, 33%가 취업상태, 7%가 국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 중이고, 15%가 니트이다.

<표 III-16> 18세 청년 근로자/학생 인구 비율 (2009년, 잉글랜드 지역)

(단위: %)

	전일제학생 (%)	취업+훈련 (%)	미취업+훈련 (%)	정부지원 직업훈련 (%)	니트 (%)	합계 (%)
전체	45	11	22	7	15	100
남성	42	11	22	9	16	100
여성	48	11	22	5	14	100

출처: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Youth Cohort Study & Longitudinal Study of Young People in England, Statistics Bulletin.

영국에서 니트는 1990년대 중반에 처음 개념화되었고 이후 1999년에 정부가 “Bridging the Gap”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을 때 본격적인 정책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Pemberton, 2008, p. 243). 1990년대 들어서

니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난 데에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다. 특히 정부가 청년 실업이라는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청년 실업이라는 개념 대신, 취업, 교육, 직업 훈련이 상태에 있지 않은 인구를 지칭하는 니트라는 범주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Furlong, 2006). 이후 니트라는 개념은 영국의 청년 정책 및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데, 이에 따라 실업 상태로 분류되던 청년들의 상당수가 니트 상태로 재분류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 이행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그동안 비경활(inactive) 인구로 분류되던 자녀가 있는 젊은 여성들이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청년 집단이 가시적으로 청년 이행 정책 프레임 안에 포함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니트라는 개념이 청년들의 다양한 이행의 경험과 다양한 청년 집단을 아우르는 분석적 범주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Furlong, 2006). 최근 의회의 보고서에서도 니트가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잠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특정 청년들을 부정적으로 범주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염려가 제기된 바 있다(House of Commons, 2010).

니트의 증가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제출된 바 있다. 우선, 영국 의회 소위원회의 조사는 니트 그룹을 직업 및 직업교육에 대한 태도 등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니트의 41%는 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므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니트의 22%는 향후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개입보다는 정보 제공과 상담이 보다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중 38%는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복합적인 요구가 있는 집단이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여성과 같은 이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데, 이들은 이러한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는 니트 상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요구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

Rennison et al. (2005)는 중등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업에 대한 불만이 있는 청년들이 니트 상태에 머무는 비율이 높다는 분석을 제기한

바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 표본 니트 청년들의 2/5는 성적 때문에 중등 이후의 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없었고 니트 상태에 진입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Pemberton(2008)의 연구에서도 학업에 대한 태도가 니트 진입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Pemberton(2008)는 니트가 되도록 하는 요인들의 복합성에 더 주목한다. 그는 영국 니트 청년에 대한 면접 조사를 통해 니트가 되는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점을 밝혀낸다. 니트가 되는 데에는 부모의 교육 기대, 교육에 대한 불만,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동료 집단의 영향 등이 다양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기대와 지원을 제공하는 가정은 매우 중요한 환경으로 꼽힌다. 니트들이 이트(EET,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로 변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가족환경이 불안정하고 긍정적인 부모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Bynner(2005) 역시 제도적, 구조적, 개인적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즉,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과정이라는 제도적 차원과 계급·젠더·인종 등의 사회구조적 차원에 개개인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영국의 출산 관련 추세에서 주목할 점은 출산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지만 출산 시기가 연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현재 출산율은 여성 1000명당 1.94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역 평균)로 역사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다. 1973년도 이래 최고치였던 2008년 1.96에서 약간 감소했을 뿐이다. 출산율은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출산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대 초반의 출산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연령

별 비교를 해보면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이 가장 높다. 출산 여성의 평균 나이는 1999년의 28.4세에서 2009년 현재 약 한 살이 더 늦춰진 29.4세이다.

<표 III-17>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출산율 추이

연도	출산율(여성 1000명당)
1999	1.70
2000	1.65
2001	1.63
2002	1.65
2003	1.73
2004	1.78
2005	1.79
2006	1.86
2007	1.91
2008	1.97
2009	1.96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0). Births in England and Wales.

1970년대 이래 영국의 청년층이 부모가 되는 연령은 점차 늦어지고 있으며, 자녀를 갖지 않는 청년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16세에서 34세 중 자녀가 있는 인구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졌는데, 특히 이러한 감소 경향은 30대 초반 인구에서 두드러진다. 자녀가 있는 30대 초반 인구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 48%에서 43%로 낮아졌고, 여성의 경우 71%에서 62%로 낮아졌다(Berrington et al., 2010).

영국에서 부모가 되는 시기는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성인기로의 이행 시기가 늦어지면서 출산이 지연되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10대나 20대 초반에 부모가 되는 커

플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보다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 출산율의 감소와 출산시기의 지연은 학업기간의 연장과 직업 준비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ndall et al., 2009).

<표 III-18> 자녀가 있는 청년층 비율 (1998년과 2008년 비교)

	배우자와 동거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 없이 자녀가 있는 경우 %	유자녀 총합 %	배우자와 동거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 없이 자녀가 있는 경우 %	유자녀 총합 %
남자	1998			2008		
16~19	0.5	0.1	0.5	0.3	0	0.4
20~24	5.8	0.2	6.0	6.5	0.2	6.7
25~29	24.6	0.3	24.9	19.8	0.4	20.3
30~34	47.2	0.9	48.1	42.1	0.8	43.0
여자	1998			2008		
16~19	1.8	3.2	5.0	1.7	2.4	4.2
20~24	13.1	10.8	23.9	12.5	11.1	23.6
25~29	32.8	13.2	46.0	30.9	11.8	42.6
30~34	56.1	14.4	70.5	49.5	12.3	61.8

출처: Berrington et al., 2010

원출처: Labor Force Survey 1998, 2008.

### 3) 분가

영국의 경우,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나 점차적으로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분가하

는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다르지 않다.

Bellington et al.(2009)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16세에서 34세까지 인구의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전반적으로 볼 때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일정한 차이가 나타난다. 20대 초반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자 비율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고, 20대 중반과 후반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시점이나 이유는 대체로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서도 편차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적으로 중상층의 경우, 십대 후반이나 이십대 초반에 대학진학을 위해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하류층 청년들은 뚜렷한 직업적 전망 없이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경우가 많아 성인기로의 이행이 혼란스럽고 비선형적이기 쉽다.

Bellington et al.(2009)은 영국 청년들의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세대 구성 시기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로 고등교육의 확대,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니트의 증가, 주택가격의 상승 등을 들고 있다. 우선, 고등교육시스템의 확대에 의한 전일제 대학생의 증가로 인해 대학진학과 함께 부모로부터 분가를 하게 되는 청년들의 수가 증가했다. 물론 대학진학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이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대학진학이 부모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독립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20대 초반 청년들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오히려 과거보다 줄어드는 추세이다. 청년 노동시장의 붕괴 및 청년실업의 증가 역시 청년들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점차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만, 전반적인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독립적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힘들다. 특히 주택 가격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서 첫 주택구매자들이 자력으로 집을 장만하기가 과거에 비해 훨씬 어려워졌다는 점도 세대구성을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과 주택구매의 어려움은 20대 중후반과 30대 초반 청년, 청년층

의 부모와의 동거 비율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교육연한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실질적 경제소득은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Bosanquet et al. (2007)은 영국 청년층의 임금 상승은 성인층의 임금 상승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폭을 기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처음 구매 주택 가격 평균은 2배로 상승하였다. 이들은 주택 가격 인상과, 세금 상승, 기타 경제적 압력의 가중에 시달리는 오늘날의 영국 청년들을 일컬어 IPOD 세대(즉, 불안정한 압력을 받으며 과도한 세금과 빚에 시달리는 세대: Insecure Pressurised, Over taxed and Debit-Ridden)라고 지칭한다(Bosanquet et al., 2007).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과 청년층의 비율의 변동 추이는 <표 III-19>와 같다.

<표 III-19>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비율 (1988, 1998, 2008년 비교)

연령별 세대구성	1988		1998		2008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b>20~21</b>						
부모동거	70.8	53.5	68.6	43.0	62.9	46.4
배우자 동거	6.8	16.9	7.8	24.0	8.8	21.7
배우자 없이 자녀와 거주	0.7	6.2	0.0	8.0	0.1	7.3
가족구성하지 않음	21.8	23.4	23.5	25.0	28.2	24.6
<b>22~24</b>						
부모동거	48.1	29.7	53.3	30.0	50.1	34.0
배우자 동거	23.4	39.5	24.1	40.3	24.5	39.5
배우자없이 자녀와 거주	0.7	8.0	0.0	10.2	0.1	11.2
가족구성하지 않음	27.7	22.9	22.6	19.4	25.3	15.3
<b>25~29</b>						
부모동거	22.7	11.6	24.3	10.7	24.5	12.8
배우자 동거	53.9	64.0	52.6	61.6	47.7	62.5
배우자없이 자녀와 거주	0.9	9.2	0.3	12.5	0.3	11.0
가족구성하지 않음	22.5	15.2	22.9	15.2	27.5	13.7
<b>30~34</b>						
부모동거	9.7	4.9	10.8	4.1	10.3	4.9
배우자 동거	73.9	77.3	70.9	73.0	69.9	72.6
배우자없이 자녀와 거주	1.0	10.3	0.9	13.9	0.7	11.9
가족구성하지 않음	15.4	7.5	18.1	9.0	19.1	10.6

출처: (Bellington et al., 2009)

원출처: Labor Force Survey 1988, 1998, 2008.

#### 4) 청년의 이행시기 지연의 원인과 결과

##### (1)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은 성인기 이행시기의 지연과 비선형화의 가장 공통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차 많은 청년들이 교육, 비정규직 취업, 정부의 직업훈련, 자영업, 파트타임 취업 및 훈련

등이 불명확하게 혼합된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Pollock, 1997; Fergusson et al, 2000). 특히,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청년들의 교육기간을 연장시키고 이에 따라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성인기로 이행하게 되는 시기를 늦추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경제 환경의 변화가 모든 청년들에 동일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계층에 따라 경제 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상당수의 연구 결과는 증가하고 있는 비전형적 이행 과정이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Fenton & Dermot, 2006; Furlong et al., 2005).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청년들일수록 비전형적인 이행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청년들일수록 전형적 이행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Bynner와 Parsons (2000)는 저소득층의 청년일수록 장기적인 직업 이행 계획이 부족한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처럼 일련의 연구 결과는 청년 이행시기의 지연과 이행과정의 비선형화라는 추세를 전체 청년 집단에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청년 집단 내부에 차이와 불평등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Bynner & Parsons, 2000; Fenton & Dermot, 2006; Furlong et al., 2005; Roberts, 2008; Yates & Payne, 2006).

또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유연화의 증가가 반드시 청년들의 직업 세계에 대한 기대를 큰 폭으로 변화시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Fergusson et al. (2000)은 불안정하고 유연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직면해서도 많은 청년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고용을 선호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 (2) 문화적/ 심리적 측면

청년 이행 과정과 시기의 변화의 원인으로 사회구조적 요인의 중요성과

아울러 문화적이거나 심리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영향과 같은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이나, 하위문화의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 청년들의 주관적이고 복합적인 대응방식에 대한 주목하는 연구들로 분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Rennison et al.(2005)은 의무교육을 마친 이후의 청년의 진로선택과 성인기로의 이행에 가족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밝혀내바 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 개인의 교육 및 직업 기대와 가족의 교육 및 직업 기대가 잘 매치할 때, 니트가 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영국에서 크게 발달한 문화연구의 관점에서는 하위문화나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방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의 청년 하위문화연구는 뉴 미디어와 소비문화의 영향력 속에서 청년 문화가 파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사회계급 만 큼이나 하위문화의 상징적 영향력이나 또래집단의 라이프스타일이 청년들의 이행과정을 다양화시키고 지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Gelder, 2007).

Furlong과 Cartmel(1997)은 청년들이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대응하는 측면도 간과해서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노동시장 등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의 구조적 여건이 점점 불안정해짐에 따라 이행 과정에서 개개인의 선택과 대응이 더 크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추세는 생애주기의 개성화와 다양화를 초래하며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5) 요약

최근의 자료를 검토해보면, 영국의 학계와 정책입안자들은 니트의 존재와 증가를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서 핵심적인 의제로 보고 있는 듯하다. 즉, 안정된 고용상태로의 이행을 성인기 이행의 주요 과제로 보고 이를 위한 연구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결혼/동거, 출산 등의 추세는 급격

한 변화보다는 완만한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출산율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출산하는 시기가 늦춰지고 있고 독신 등의 형태로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하는 시기는 점점 늦춰지는 추세이며, 청년들이 자력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영국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은 시기의 연장과 경로의 비선형화로 요약해볼 수 있다. 하지만, 선형적 이행과 비선형적 이행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선형적 이행을 하지 않는 대표적 집단으로 인식되는 니트 내부에도 큰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성인기 이행의 방식과 시기가 보다 다양해지면서 이에 관한 일반적 추세나 이론을 도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당수의 청년들이 여전히 선형적인 성인기 이행을 추구하거나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된 바 있다(Furlong et al., 2005).

상당수의 청년들이 자의건 타의건 일정한 시점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휴지기를 갖게 되곤 하는 불안정하고 유연화된 후기산업사회에서 선형적/규범적인 이행과 비선형적인 이행을 뚜렷하게 나누고 비선형적 이행 집단을 문제시하는 이분법적 접근은 청년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생애경로와 그러한 다양한 이행과정에 내포된 사회적 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청년들의 비선형적인 이행을 선택적이고 성찰적인 생애계획과 생애관리의 과정으로 파악하여 긍정적 잠재력을 과장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연장되고 불안정해지는 성인기로의 이행에 대해 사회계층별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영구에서 이루어진 성인기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들은 불안정해지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핵심적으로 다루면서, 비선형적 이행을 야기하는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을 폭넓게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한 영국적 특수성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영국내의 지역 간이나 계층 간의 격차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청년 이행을 단순히 선형화나 비선형화로 분류하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청년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이행의 복잡성과 이러한 복잡성이 사회에 미칠 효과에 대한 정교한 연구의 틀을 요청하고 있다 (Furlong et al., 2005; Pollock, 2008).

### 3. 캐나다

캐나다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패턴은 시기가 청년기의 기간이 길어지는 동시에 유연화되고 불명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Beaujot, 2000; Franke, 2010). 우선, 청년기의 연장(extension of youth)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성인기로의 이행이 대체적으로 16세부터 23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Cote & Bynner, 2008), 현재는 성인기 이행 시점이 연장되어, 여러 문헌들에서 청년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29세 까지로 보는 경향이 있다(Beaujot & Kerr, 2007). 청년기의 연장과 아울러, 성인기로의 이행 경로가 개성화, 유연화, 파편화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Saunder(2008)는 최근 캐나다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경향을 “지그 재그 이행” 또는 “비선형적 이행” 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캐나다의 연구들은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분가, 대학진학, 취업, 결혼, 출산, 양육 등의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Beaujot & Kerr, 2007; Clark, 2007). Franke(2010)는 캐나다 청년 이행의 유형을 최근의 교육, 노동시장, 소외계층, 다문화, 노령화 사회로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분석한 바 있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지식경제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고등교육 진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여 고용기회가 확대되거나 임금 수준이 상승하진 않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교육수준의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소외계층의 청년들의 교육수준이나 경제 수준은 열악한 실정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현실은 이민자 또는 비백인(non-white) 청년들에게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흑인

청년들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인종 간, 문화 간 갈등뿐 아니라 노령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세대간 갈등도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분가의 측면에서 보면, 2001년 현재 남성 24세, 여성 22.5세 기준으로 볼 때 약 50%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점차로 부모와 20대 중반까지 함께 사는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늘고 있으며, 25세에서 34세 인구의 61%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Franke, 2010). 취업의 측면에서는, 고등교육 참여율이 상승함에 따라 최초 취업 시기가 늦춰지는 경향이 있고, 노동의 유연화에 따라 전일제 직장에 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결혼(union formation) 시작 시기도 점차 늦춰지고 있다. 캐나다에서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결혼에 비해 동거/사실혼 관계(common law spouse relationship)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예컨대 2001년을 기준으로 20~29세 여성의 첫 번째 동거 형태의 63%가 사실혼 관계(common law)였다(Beaujot & Kerr, 2007).

취업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출산의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1976년에는 30세 이후에 초산을 경험하는 여성은 전체 출산경험자의 9%였으나, 2003년에는 그 비율이 35%에 이르렀다. 한편, 양육 단계에서의 최근의 특이사항으로는 지속적인 편모 가정의 증가를 들 수 있다(Beaujot & Kerr, 2007).

## 1) 직업세계로의 이행

지식기반경제의 대두에 따라 캐나다의 청년들은 중등교육 이후에 다양한 형태로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Franke, 2010). 1970년대까지만 해도 22세의 청년들의 3/4이 이미 최종학교를 마친 상태였으나 2001년에는 오직 1/2만이 최종학교를 마친 상태로 나타나, 20대 초중반까지 학업을 계속 하

는 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육연한이 늘고 고등교육 이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실업율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Hango & de Broucker, 2007).

Hango와 de Broucker (2007)가 지적하듯이 캐나다 청년들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은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곧바로 이행하는 선형적(linear) 유형과 이행이 지연되는 비선형적(non-linear)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는데, 많은 통계자료나 연구결과는 비선형적 이행 유형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aunders(2008)는 캐나다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서 주목해야 할 만한 경향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여성 청년들이 남성 청년들보다 학교 중도 탈락율이 낮고, 취업 이전에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많다. 둘째, 원주민 청년들(aboriginal youth)의 학업성취나 진학률이 여타 청년들에 비해 낮다. 셋째,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청년들일수록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 넷째, 대도시 거주 청년들이 시골 거주 청년들보다 대학 진학율이 높다. 다섯째,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의 단계로 이행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도에 휴지기를 갖거나 전공을 바꾸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표 III-20> 18-34세 인구 특성

	1971	1981	1991	2001
18-34세 인구 (단위: 천명)	5,398	7,366	7,447	6,685
비율				
나이				
18 to 24	48	44	36	41
25 to 29	29	29	31	28
30 to 34	24	27	33	31
이민 유무				
캐나다 출생자 비율 (비이민자)	84	86	85	82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33	31	24	18

고졸	42	33	35	34
전문대 졸	16	24	27	28
대졸 이상	9	12	14	20
결혼 또는 사실혼 동거 경험	61	59	54	45

출처: Clark (2007).

원출처: Statistics Canada, Censuses of Population.

Table source: Statistics Canada, 2007, "Delayed transitions of young adults." Canadian Social Trends, Number 84, catalogue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데에는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특히, 이행 유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대학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Hango와 de Broucker(2007)는 학업성취도(Academic performance), 고교재학 중 취업상태(Working status during high school), 가족부양책임(Family responsibility), 부모의 기대(Parental expectations), 지역 간 이동성(interprovincial mobility) 등을 꼽고 있다. 첫째, 학업성취도의 경우 평균 성적(GPA)의 백분위가 80%~100%인 고등학생들은 70~79%인 고등학생들보다 대학진학을 미룰 확률이 4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고교재학 중 취업 경험이 대학 진학 시점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한적인 정도의 직무경험은 대학진학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주당 20시간 이상의 노동은 대학진학의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주당 2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을 가진 고교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대학진학을 미룰 확률이 30%이상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가족부양책임도 대학진학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학진학시기인 10대 후반에 출산을 하거나 동거가족을 시작하는 경우 대학진학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예컨대, 첫 번째 아동의 출산 시기 (즉, 부모가 되는 최초의 시점)가 19세 이하인 청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고교 진학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95%나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부모가 매우 높은 교육기대수준을 갖고 있는 청년들

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대학진학을 미룰 확률이 4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시절의 거주지역과 20대 초반 (20세23세)의 거주 지역이 다른 경우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에 따르면, 이동성이 높은 청년들이 대학진학 확률이 높았다.

### (1) 학교교육기간의 장기화

2003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75%의 청년들이 고교를 졸업하며, 중퇴자들의 상당수도 22세 이전에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획득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22세를 기준으로 고교졸업의 학력을 가진 청년은 약 90%에 달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고졸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는 반면, 20세~24세 사이의 고등학교 중퇴자들의 경우 실업률이 19%에 달해(2002년 기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다. 즉, 고졸자 및 대학진학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고교졸업장 또는 그 이하의 학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줄어들고 있고 저학력 청년들의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Beaujot & Kerr, 2007).

전일제 대학생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0년대 이후 전문대학과 직업교육기관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의 수의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캐나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인구조사에서 25세~34세 연령 군 중 고졸 이상 학력자 비율이 49%였던 데 비해 2001년의 인구조사 결과에서는 61%로 나타났다(Fussell, 2002). 2001년의 경우 606,819명이었던 대학재학생의 수는 2005년에는 757,000명에 달해 약 25%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파트타임 학생의 수는 동기간 동안 약 6%의 성장세를 보였다(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2010 cited in Beaujot & Kerr, 2007).

〈표 III-21〉 15-29세 인구 교육 참여율  
(1996/1997년과 2006/2007년 비교)

	Age Group		
	15~19	20~24	25~29
	비율 %		
1996~1997			
초중등	65	2	1
전문대	11	12	4
대학	7	20	6
총계			
2006~2007			
초중등	61	2	-
전문대	11	11	4
대학	10	25	8
총계	81	38	12

출처: Statistics Canada and 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 2007. Education indicators in Canada: Report of the Pan-Canadian Education Indicators Program, Catalogue no. 81-582-XIE, Ottawa.

〈표 III-22〉 15-29세 취업 인구별 교육 수준  
1996/1997 2006/2007년도 비교

	Age Group		
	15~19	20~24	25~29
	비율 %		
1996~1997			
초중등 졸	28	28	17
전문대 졸	39	49	52
대졸	34	44	53
총계	30	45	50
2006~2007			
초중등	35	38	35
전문대	55	57	55
대학	37	50	58
총계	38	51	57

학업기간 연장의 한 원인으로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가 지적되기도 한다. 부모들이 기대하는 자녀교육의 수준은 확연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0세~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의 74%는 자녀가 대학까지 마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는 조사 시점 기준 자녀 나이가 13~18세인 부모들의 61%와 비교할 때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젊은 세대의 부모들일수록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한 저축을 하고 있는 부모의 비율은 교육기대수준보다는 낮았다. 자녀의 대학진학을 기대하는 부모의 약 절반만이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한 저축을 하고 있었다(Beaujot & Kerr, 2007).

## (2)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및 문제점

지난 20여 년간 캐나다의 경제는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해 왔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나 지식정보관련 분야의 고용이 늘어났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응기제로 교육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중요해졌고, 청년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신 정보기술 관련 직종의 증가와 비숙련직종의 쇠퇴로 인해 취업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비숙련 청년층의 실업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Franke, 2010). 청년 실업은 2008년 이후의 경제 침체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15-24세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25세 이상 인구에 비해 15-24세 청년 실업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집단이 성인 집단에 비해 경제 위기에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년 집단 내에서는 남성의 실업율이 더욱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15-24세 여성 실업율이 2008년 12월 11.5% 대비 2009년 12월 현재 12.8%로 소폭 증가한데 반해, 동기간의 동연령 남성 실업율은 14.6%에서 19.1%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Statistics Canada, 2010).

캐나다 청년의 직업 세계로의 이행 시점의 지연과 비선형적 이행 유형의 증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Franke, 2010). 우선, 과거에 비해 확연하게 연장되고 있는 교육기간이 청년의 취업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졸 학력이 임금의 상승에 기여하는 바는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지만, 대학졸업장과 실제로 직업세계에서 요청하는 기술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Cote & Allahar, 2006).

교육과 직업 간의 상응 정도(matching)가 낮다는 점도 청년들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에서 큰 문제로 지적된다(Franke, 2010:12). 대학진학율이 높아짐에 따라 적성과 필요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는 사회적 압력이나 가족의 기대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늘어나다보니 초기 직업 선택에서 본인의 동기나 전공과 관련 없는 영역에서 일하는 경우나 사실상 대학 졸업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직장에 하향 취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컨대, 2001년 조사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의 20%가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Li et al., 2006).

Brisbois 등(2008)의 조사에 따르면, 25세 이하 취업자 중 40%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으나 이 중 11%만이 이러한 교육이 자신의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5세에서 34세 연령에서는 42%가 전문대 디플로마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 직종의 수행을 위해 전문대 디플로마 이상의 학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4%에 지나지 않았다. 즉, 상당수의 청년 근로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의 학력 수준이 잘 매칭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25세 이하 연령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성인들의 상당수가 자신들의 교육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 훈련이 실제 직무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잠재적 생산성을 잠식하고 있다고 평가된다(Saunders, 14).

남녀 청년간의 임금격차나 교육에 따른 비용과 같은 문제들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역으로 청년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이나 세대 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남성과 여성간 임금 격차가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05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대학졸업자는 남성 대학졸업자 임금의 68%를 받고 있다고 밝혀졌는데, 1995년 조사에서 그 수치가 75%로 나왔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0년 동안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Franke, 2010). 청년들의 교육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자금 대출 규모도 증가해, 2007년 기준으로 대출자 1인당 평균 2만4천 캐나다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자 평균 대출금은 1990년 1만8백달러, 1995년 1만4천5백달러, 2000년 1만9천달러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Mary, A. & Vaillancourt, 2004). 대출금 상황에 대한 압력은 대학 졸업 후 신규 직장에서 적응하고 가정적 독립을 이루는데 매우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Franke, 2010:12).

청년들의 직장세계로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로서 학교와 산업 간의 연계 강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캐나다 각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기업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직업교육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지적인 수준을 넘는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고 지역별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함에 따라,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Saunders, 2008).

## 2) 결혼 및 출산

결혼의 시기가 늦춰지거나 결혼 대신 사실혼 관계의 동거를 택하는 이성간 파트너십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이 성인기로의 이행의 한 중요한 지표가 되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이제 결혼은 성인기로의 이행을 가늠하는 요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학진학 등을 위해 부모로부터 분가를 한 이후 사실혼 관계의 동거(common law spouse relationship)를 경험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 유무로 성인기 진입

을 논의하는 힘들다는 것이다(Kerr et al., 2006).

최근 캐나다의 20대들에게는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로 가구를 구성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가구 구성의 결합방식은 결혼보다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가 더 일반적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결혼 대신에 사실혼 관계의 동거 관계로 지내는 커플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가 일종의 라이프스타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청년 커플들이 결혼과 상관없이 사실혼 관계의 동거를 하고 있다(Kerr et al., 2006). 캐나다에서 전체 동거 커플 중 사실혼 관계(common law)로 인정되는 동거의 비율은 2001년 현재 16%, 2006년 현재 17.9%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퀘벡주의 경우 동거자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전체 커플 중 2001년 현재 29.8%, 2006년 현재 34.6%가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의 동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동거는 비교적 짧게 끝나고 결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200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9세 여성 63%는 첫 번째 파트너십을 결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의 동거로 시작한다고 한다(Beaujot & Kerr, 2007: 16). 24세의 여성 중 결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의 동거를 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1981년에는 9.1% (기혼 상태에 있는 여성은 53.1%)였으나 2001년에는 31.1%로 증가하였다(기혼상태 여성은 25.1%)(Beaujot & Kerr, 2007: 16). 2006년 현재 25-29세 인구의 22.6%가 사실혼 동거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Milan et al., 2007).

<표 III-23> 20-29세 결혼 또는 동거 커플 비율 (1986년과 2006년 비교)

연령대	1986	2006
20-24세	28.4% (9.3%)	17.9%(12.6%)
25-29세	62.8% (10.2%)	48.5% (22.6%)

출처: Milan et al. (2007).

원출처: Statistics Canada, 인구센서스, 1986, 1996, 2006.

참고: 괄호 안에 제시된 숫자는 전체 커플 중 사실혼 관계 동거 커플 비율을 나타냄

결혼의 회피나 지연 현상이 증가하면서 출산을 감소도 뒤따르고 있다. 캐나다에서 출산을 감소와 노령화는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Liu et al., 2006). 특히 교육연한이 연장되고 개성화된 라이프스타일이나 비선형적 성인기 이행이 많아지면서, 출산을 회피하거나 출산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출산 시기는 각 연령대를 비교해보면, 1970년대에는 20대 후반과 20대 초반 산모의 출산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30대 초반의 출산율과 20대 후반의 출산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이루고 있다. 지난 30년간 출산율이 가장 현저하게 감소한 연령대는 20대 초반의 여성이다. 이 연령대의 출산율은 1973년에 1,000명당 120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1,000명당 52.7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동거 관계에서의 출산율은 결혼 관계에서의 출산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전체적으로 동거관계를 중심으로 한 라이프스타일의 확산은 출산을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Liu et al., 2006; p. 9).

<표 III-24> 여성 1,000명당 출산율 (1960~2005)

(단위:명)

연도	15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1960	59.5	233.6	224.4	146.2	84.2
1970	42.9	143.5	147.4	82.0	39.0
1980	26.9	96.1	124.9	67.0	19.1
1990	25.3	80.3	123.5	83.6	27.7
1995	24.4	72.1	113.0	88.2	31.5
2000	17.0	58.9	98.7	86.1	34.1
2001	16.0	56.4	100.4	91.4	35.7
2002	14.9	54.0	97.4	90.9	36.4
2003	14.4	52.7	98.6	93.7	38.7
2004	13.6	50.9	97.3	95.8	40.1
2005	13.3	50.4	97.3	97.4	42.1

출처: Statistics Canada (2009).

결혼 및 출산 패턴의 변화는 교육기간의 연장을 요하는 직업세계의 변화라는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개성화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라는 보다 심리적 이거나 문화적인 요인을 통해 설명되곤 한다(Beaujot & Kerr, 2007; Kerr et al., 2006). 특히, 출산 시기가 늦추어지고 출산율이 저하되는 현상의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Beaujot와 Kerr(2007)에 따르면, 출산 시기의 지연이나 출산율 감소의 원인에 대한 논의들은 대체로 여성의 교육기간 연장과 노동시장 참여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전 세대는 여성의 취업률이 낮았고 이에 따라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비율이 높았고, 출산 시점도 비교적 이른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청년들은 교육에 따른 경제적이고 직업적인 유인 효과로 인해 출산을 늦추는 경우가 많고, 직업을 얻게 되면 그에 따라 출산 시점이 늦춰지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산후 휴가나 직장 내의 보육 제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한 이후로 출산을 미루는 경향은 두드러진다. 하지만, Hall(2002)은 이러한 경제적 요인에 의한 출산 연기 현상과 더불어, 그러한 경제적 요인에 대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과거에는 경제적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 나이에 자녀를 출산하는 데 거부감이 크지 않았으나, 점차로 경제적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 아이를 갖는 것을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산 시기를 미루는 현상과 더불어 편부모 하에서 출생하고 양육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Liu et al., 2006). 비결혼 관계의 출산도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1980년대 초의 경우 전체 출생아동 6명 중 1명이 비결혼 상태의 산모로부터 출생하였으나, 2000년에는 3명 중 1명이 비결혼 상태의 산모로부터 출생하였다(Le Bourdais & Lapierre-Adamcyk,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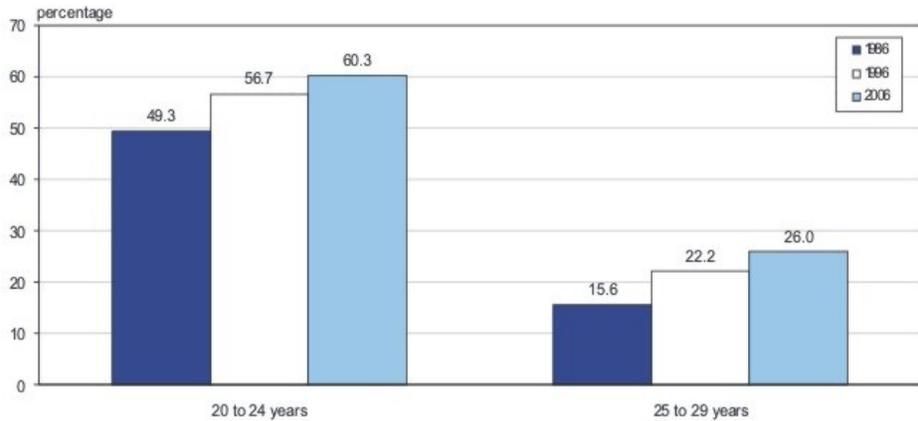
동거 형태의 증가는 청년들의 삶이 탈전통화되고 사회적으로는 다양성이 증가된다는 긍정적 기능도 일부 있으나 제도적이고 법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주로 육아나 가사를 담당하는 여성 배우

자의 경우, 남성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나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동거 커플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Kerr et al., 2006).

전반적으로 볼 때, 결혼이건 동거를 결합이건 파트너 관계가 해체되거나 혼자 사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부모와 분가를 한 청년의 경우 혼자 사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늘고 있다. 특히 남성이 부모로부터 독립한 후 이성 또는 동성 파트너와 동거 또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비율이 28세에 13%로서 정점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34세에 이를 때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여성의 경우는 독신자 비율이 27세 때 9%로 가장 높다(Clark, 2007).

### 3) 분가

2001년 인구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평균 24세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 독립 시점이 조금 더 이른 평균 22.5세였다. 이러한 독립 시기는 베이비붐 세대(1951년~1955년 출생자들)의 자립 평균 연령인 남성 21.5세, 여성 19.9세보다 확연히 늦어진 것이다. 부모로부터 분가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20대 인구의 비율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하의 표에 제시되고 있듯이, 20-24세 인구의 경우 1986년에는 48.3%가 부모와 함께 살았으나, 2006년에는 60.3%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25-29세의 경우, 1986년의 22.2%에서 2006년의 26.0%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Sources: Statistics Canada, censuses of population, 1986, 1996 and 2006.

출처: Milan et al. (2007).

원출처: Statistics Canada, 인구센서스, 1986, 1996, 2006.

### [그림 III-1] 20-29세 청년 부모와의 동거 비율

청년들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와의 동거 또는 독립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꼽고 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일제 학업에 전념하고 있거나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부모로부터 자립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신세대 부모들은 예전 세대에 비해서 자녀와 보다 평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청년후기에도 함께 동거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자녀의 분가를 늦추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Beaujot & Kerr, 2007).

고등교육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고등교육 이수 후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중등교육 이후 대학이나 기타 계속교육기간에 진학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일시적으로 독립을 했다가 졸업 후 취업준비 기간 다시 부모와 동거하게 되는 부모와의 재동거(returning)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2001년도의 General Social Survey에 따르면 33%의 남성과 28%의 여성이 초기의 분가 이후 적어도 한번 이상 부모의 집으로 돌아와 재동거한 적이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Beaujot & Kerr, 2007: 11).

부모로부터 분가를 미루는 데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난 30여 년간 캐나다 집값의 큰 상승은 남성 청년들의 평균 임금의 상승을 웃돌았다(Clark, 2007). 분가가 성인기 진입과 독립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캐나다의 경우, 분가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도 적지 않다. Boyd & Pryor(1989)는 분가와 독립시기가 늦어지는 청년기를 어수선했던 둥지(cluttered nest)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 4) 성인기 이행 지연의 원인

##### (1) 사회적 측면

Cote와 Bynner(2008)는 두 가지 구조적 변화가 청년의 성인기로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심리적 요인보다도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을 청년의 이행 유형의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기의 지연을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떠맡는 것을 두려워하는 신세대의 개인적 또는 심리적 성향으로 환원하려는 관점은 현상을 호도하는 분석이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Cote와 Bynner(2008)가 중시하는 첫 번째 주요 사회적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캐나다의 경우 전통적으로 농업이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으나 산업구조가 점차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비숙련 청년들의 경우 취업이 점점 더 어렵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의 축소, 비정규직의 확대 등은 청년들의 정규직으로의 진입을 봉쇄하는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Cote와 Bynner(2008)가 지적하는 두 번째 구조적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20세기 초의 캐나다 인구구조는 15-29세 인구와 30~64세 인구가 비슷한 비율을 이루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명이

연장되고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15-29세 인구가 30~64세 인구의 약 1/2에 지나지 않는다. 청년들은 줄어들거나 한정되어 있는 고소득 직종을 놓고 윗세대와 경쟁을 하게 되지만 아직 기술 등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정규직에서 일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 노동 시장의 위축은 청년층의 소득을 크게 하락시켰다. 실제로,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후반의 청년층 소득은 1/3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편, Clark(2007)는 노동시장의 변화, 고등교육 기간의 연장과 그에 따른 교육비 증가 등의 구조적 요인과 아울러, 결혼/동거에서 젠더 역할의 변화도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지연시키는 사회적 요인의 하나로 지적한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득수준도 상대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결혼이나 출산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성인기 이행의 지연 추세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설명들에 대한 비판이나 이견도 제기된다. 예컨대, Beaujot와 Kerr(2007)는 청년의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는 현상을 경제적 기회 박탈과 축소라는 요인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전 세대에 비해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직업 기회나 경제적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주민 청년과 같은 특정한 청년 집단들은 경제적인 난관에 대한 대책으로 직업세계로 이동하는 시점을 지연시키기도 한다는 교육기간을 단축시키고 서둘러 직업을 얻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인 변동에 대한 대응은 청년 집단에 따라 다르며, 특히 청년들이 속한 문화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암시되는 것이다.

## (2) 문화적/ 심리적 요인

Cote와 Bynner(2008)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하고 성인기를 청년기와 구분해주는 사회적 징표들이 감소함에 따라 성인역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줄고 성인기와 청년기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요인이 캐나다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을 연장시키는데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라이프스타일과 의식체계의 개성화라는 흐름은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유형과 시점을 크게 변화시킨 요인으로 간주된다. 많은 서구사회의 사회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개성화는 청년의 성인기로의 이동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문화적 현상이다. 이전 세대의 청년들이 성인의 역할과 주류사회의 규범을 습득하는 대표적인 장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최근의 청년들은 성인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채널보다는 파편화되고 개별적인 경험을 통해 성인기에 대한 지식이나 규범을 습득하게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Cote & Bynner, 2008). Cote와 Bynner(2008)는 캐나다 청년들의 성인기 진입 과정이 개성화되는 현상의 한 증거로서 종교단체 출석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 반세기동안 캐나다에서 개신교와 카톨릭 등 조직화된 종교기관들은 청년들의 사회화에 큰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1990년대 이후 청년들의 종교 활동 참여율은 크게 저하되고 있다. 2001년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없는 인구 중 40%가 24세 이하의 청년층이었다.

탈전통적 생활유형의 보편화와 라이프스타일의 개성화라는 문화적 흐름과 아울러 구조적 변동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의 변화를 지적하는 연구들도 제기된 바 있다. Beaujot와 Kerr(2007)나 Hall(2002) 등의 캐나다 연구자들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나 사회의 구조적 변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틀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요인에 주목한다. 교육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직업세계의 변화 자체보다도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Hall(2002)은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위기의식의 변화가 결혼, 출산 등을 늦추거나 회피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성인기로의 이행 유형이 변화하는 상황을 문화적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다. Cote와 Bynner(2008)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성인기 이행 지연 현상의 원인을 개인적이거나 심리적인 요인으

로 환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성인기 이행의 양상이 개성화되는 것은 개인주의와 같은 심리적 경향의 심화에 따른 자발적인 선택의 과정이라기보다는 보다 거시적 사회변동과 개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문화적 경향이기 때문이다.

## 5) 요약

캐나다 사회에서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은 이전의 선형적 이행에서 비선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식경제사회로의 변화와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라는 구조적인 요인과 개성화된 라이프스타일의 확산이라는 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해 성인기로의 진입을 보여주는 학교졸업 및 직업세계로의 이행, 결혼 및 출산 등의 각 지표에서 성인기 진입 연령대가 늦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정적인 함의와 긍정적인 함의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Beaujot & Kerr, 2007).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교육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나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연계가 긴밀하게 되지 않아 청년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기간 연장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상승의 추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육대출 등으로 인해 청년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가중된 경제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인기로의 진입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학비 등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생애에서 벌게 되는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Beaujot & Kerr, 2007).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성인기 이행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양극화의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Beaujot & Kerr, 2007). 사회경제적으로 상층에 속할수록 성인기 이행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빨리 직업세계에 진입하는 하류 계층은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저임금 직장에 고용된다. 주류의 청년들이 성인기 이행에 더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데 비해, 원주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은 크게 연장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ranke,

2010).

이러한 경제적 요인과 개성화라는 문화적 흐름은 청년들이 결혼, 출산, 육아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유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결혼 이전에 동거를 경험하거나 아예 결혼을 회피하는 동거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출산 시점을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으로 늦추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출생율의 감소와 노령화는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성인기로의 이행 연기의 긍정적인 함의로는 가족 성원간의 경제적 평등성과 안정성의 향상을 들 수 있다(Beaujot & Kerr, 2007). 가족단위로 볼 때에는 양쪽 부모 모두가 교육과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여성과 아동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던 가족 형태에서 나타나던 경제적 불안정성이나 위험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는 것이다.

요컨대, 성인기로 이행의 연기 현상에 대한 캐나다의 연구들은 일부 긍정적인 함의를 인정하면서도 부정적인 효과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이전세대에 비해 청년들이 더 빈곤화되거나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이나 사회노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Beaujot & Kerr, 2007; Franke, 2010).



## IV. 외국 사례연구: 호주의 성인기 이행

1. 산업화 사회에서의 성인기 이행
2. 성인기 이행의 현대적 양상
3. 라이프패턴 프로젝트
4. 젠더와 성인기 이행
5. 농촌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6. 성인기 이행의 교차점
7. 소결



## IV. 외국 사례 연구: 호주의 성인기 이행

호주의 성인기로의 이행양상은 지난 50년에 걸쳐 극적으로 변화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설명하고 분석하며 정책 형성에 미치는 함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분석에는 정책 문서, 호주 통계청(Australia Bureau of Statistics, 이하 ABS)에서 작성된 자료, 호주의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이하 HILDA) 데이터와 멜버른대학교 청년연구소에서 시행한 호주 청년들에 대한 중단 연구인 라이프 패턴(Life Patterns) 데이터가 이용되었다. 호주 통계청의 자료와 HILDA 데이터는 중요한 성인기 이행 영역(예: 교육)에 대한 전국단위의 폭 넓은 프로파일을 제공한다.

라이프 패턴 자료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동안 성인기 이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깊고 폭넓게 제공한다. 18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실시간으로 청년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바람, 성과, 태도 및 행동을 기록하여 깊이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라이프 패턴 자료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학업과 취업이라는 통상적 측면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건강과 웰빙, 인간관계와 여가 활동에 걸친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호주에서 이루어져온 연구와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가정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존재했던 표준적 성인기 이행 패턴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대의 성인기 이행 과정과 비교할 때, 그 이후 세대의 성인기 이행의 양상은 종종 ‘결점 있고’ 너무 확대되고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전 세대의 경우보다 덜 구조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1980년대나 되어서야 성인기 이행이라는 개념이 연구의 중심이 되어 정부 정책에서 관심 받는 영역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20년 동안 성인기 이행의 특성을 조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인기 이행은 규범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세대의 성인기 이행 방식이 뭔가 문제 있는 것으로 보는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이

다. 먼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역사적 개관을 통해 호주 성인기 이행 양상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두 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1950년대 대중 중등교육의 설립이다. 대중 중등교육은 15세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의무교육이었으며, 중등교육의 목표는 청년들이 사회에서 각자의 몫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대다수의 청년들은 의무교육 연령일 때 중등교육을 떠나 산업 현장의 다양한 직업군에 뛰어들었다. 젊은 남자 청년의 경우 장사에 뛰어들고 1차 산업 및 제조업에 종사했다. 젊은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될 때까지 서기나 사무직에 종사했다. 학교는 청년이 직장과 가정 그리고 시민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호주의 W. F. Connell과 그의 동료는 1950년대 초에 수행한 초창기 청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서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 나가는데 있어 청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Connell et al., 1957).

첫 번째 절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 호주 청년들의 생활환경을 살펴보고,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청년 노동시장이 축소된 과정을 추적한다. 이 기간에는 밀, 양 및 가축 농업과 같은 1차 산업과 주로 지방 중심과 도심지에 위치한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었던 호주의 전통적 경제기반에서 멀어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비스 부문으로 방향을 전환한 경제와 지식과 학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도시와 주요 대도시 지역의 새로운 산업은 청년들에게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전일제 일자리 노동시장의 붕괴를 야기했다. 당시 많은 시간제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경력직으로 연결되거나 적절한 생계 수단을 제공할만한 일자리는 아니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경제의 이러한 방향전환은 모든 청년의 중등교육 이수율 목표로 했던 교육, 훈련 및 노동시장의 정책에 반영되었고, 1990년대 초반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고등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긴급히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 이 당시의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호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호주 청년들이 기술과 자격(credential)을 갖추도록 하는 정책에 주력했다. 1950년대에 Connell (1957) 등이 수행한 호주 성인기 이행에 대한 기념비적인 연구가 농촌 청년이 아닌 도시 청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은 눈여겨볼만하다.

1980년대가 되면서 15세에 성인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졌다. 청년들은 시간제 일자리(part-time)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청년들이 중등교육을 마쳤다. 이런 변화로 인해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오랫동안 부모에게 더 의존하게 되었다. 그들은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집에 살면서 의지하게 되었고,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교육을 받는데 보냈다. 시간제 근로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는 독립적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할 수 없는 청년들이 대다수였다.

두 번째 절에서는 성인기 이행의 거시적 분석에 대한 결론을 맺고, 호주 경제의 변화가 청년들의 선택과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1990년대의 경제적 여건과 불확실성에 맞서는 정책적 대응은 호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을 변화시켰다. 1990년대 호주 경제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작업장 관리(management of workplace) 방식과 정부와 기업 사이의 관계에도 다양한 변화가 따라왔다. 1990년대의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시스템의 분권화와 규제완화는 노조의 힘을 약화시켰고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책임은 개별 근로자들에게 돌아갔다. 또한 공공 기관과 서비스 기능이 민영화되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역시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에게 극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고용주의 노동유연화가 목적이었던 노사관계 정책의 경우, 청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근로조건만 더욱 불안정해졌으며, 단기계약과 대부분의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더 줄고 근로시간은 더 늘어났다. 청년 실업은 1991년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었고 1990년대 동안 비교적 높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시행된 정부 정책은 호주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뒷받침할 인적자본의 개발을 1차적 목표로 세웠다. 청년들은 호주의 미래의

자원으로 여겨졌다. 정부 정책은 청년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990년대 초반에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참여율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이는 중등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복지정책과 청년 노동시장 붕괴에 따른 결과였다. 동시에 정부는 교육이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는데,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1990년대부터 청년들과 그 가족들은 교육비를 부담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처럼 청년을 “인적 자본(human capital)”으로 보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하는 과정과 “경로(pathways)”가 명확히 있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정책은 변화하는 청년들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어지는 절에서 성별에 따른 새로운 성인기 이행양상과 농촌 지역의 특성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성인기 이행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6절 또한 상이한 삶의 영역이 교차하면서 복잡함이 야기되는 방식을 자세하게 논의하고 분석함으로써 성인기 이행의 문제를 다룬다.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은 청년연구소(Youth Research Center)의 라이프 패턴 중단연구 프로그램을 활용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호주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시한다. 세 번째 절에서는 이 시대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주요 추세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이 절에서는 성인기 이행의 새로운 양상을 ‘새로운 성인기’로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1990년대 호주의 청년들은 불안정해진 일자리, 연장된 학업과 일의 병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의 터득 그리고 생활방식과 인간관계를 통한 삶의 의미 찾기와 같은 모든 호주인들이 당면한 새로운 삶의 현실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우선시해야 할 사항들은 성인기의 본질(nature of adulthood)을 바꾸었다. 세 번째 부분은 새로운 성인기를 포함해 이 시기 동안의 호주의 성인기 이행을 특징적으로 설명하는 폭 넓은 몇 개의 주제를 규명한다. 사회적 세대(social generation)에 대한 개념, 진로(career)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대두, 그리고 다양한 성인기

로의 이행 양상의 등장도 함께 다뤄진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부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삶의 균형을 유지(balance in life)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청년들은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상충적(conflicting) 요구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웠음을 강조했다. 과반수까지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청년들은 불확실한 시기에 대처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그들의 인생에서 학업과 일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생기는 압박감이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였다.

네 번째 절에서는 호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 성별에 따른 변화를 고찰한다. 특히 1990년대 초반을 중요한 시점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때가 교육에의 참여와 결과에서 양성 평등이 이루어진 시점이기 때문이다. 호주 역사상 최초로 청년 남녀의 중등교육 이수 비율이 동일해졌으며, 고등교육 진학 비율도 같아졌다. 라이프 패턴 연구의 자료를 토대로 이 절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청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고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들어서기까지 그들의 행보를 자세히 기록한다. 성인기 이행 양상에 대한 데이터에 따르면 교육 측면에서 양성 평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젊은 여성들은 이런 남녀가 평등이 직장과 개인적 삶 속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어지는 그들의 성인기 이행은 오히려 더욱 전통적인 젠더 패턴(gender patterns)으로 회귀한 것을 보인다. 이러한 해석은 미국과 여러 유럽국가에서 등장했던 유사한 양상에 대한 Esping-Andersen의 분석과도 일치하고 있다(Esping-Andersen, 2009). Esping-Andersen은 1990년대의 교육정책에서는 남녀 평등이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남녀의 평등한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불완전한 혁명’이라고 부른다. 라이프 패턴 연구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이수한 여성일수록 시간제 근로를 하거나 38세 이전에(by the age of 37)세에 일터를 떠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또한 라이프 패턴 연구는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남자 청년들이 가장 취약한 일자리를 갖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중등교육만 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하

게 되면 남자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제한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섯 번째 절에서는 성인기 이행양상에서 나타난 또 다른 차원의 불평등을 상세히 짚어본다. 이 부분에서는 농촌 청년들이 겪는 성인기 이행의 복합성과 그들이 농촌 사회에서 부딪히는 구조적 장벽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다. 농촌 지역에서는 고등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지방 중심지나 대도시 중심지로 이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농촌 지역에 머물기로 결정하는 청년들의 경우 주로 임시직과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 등과 같은 불안정하고 쇠퇴 일로에 있는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서만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making independent livelihood)가 어렵다. 라이프 패턴 연구의 자료에 따르면 농촌 지역사회의 주요 일자리였던 1, 2차 산업의 일자리를 서비스 부문이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농촌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는 구직을 하던 이전의 전통적인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상태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라이프 패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을 분석함으로써 삶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영역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더욱 더 부각되었다. 지금까지 정책에서는 성인기 이행을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만 초점을 두어 다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경제주의적(economistic) 정책 내에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청년들의 생애전반의 궤도를 정확히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여섯 번째 절에서는 ‘삶의 교차점(intersections of life)’ 을 고찰함으로써 학업과 일이 청년들의 가정생활과 사적 관계 그리고 심신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아울러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교육과 고용 정책, 특히 호주 노동시장의 탈규제 정책으로 인한 유연화의 효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청년들의 현실과 희망의 차이(gap)를 살펴본다. 해당 자료는 불확실

성, 불안정한 근로 그리고 장시간의 노동이 호주 청년들의 혼인율과 출산율 그리고 그들의 웰빙과 건강에 미친 영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는 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논의한다.

## 1. 산업화 사회에서의 성인기 이행

이 절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호주에서 발생한 사회, 교육 및 경제적 변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청년들의 삶에 끼쳤던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1950년대 호주의 초기 산업화 경제에서부터 청년들이 교육, 일자리 그리고 삶의 다른 측면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던 후기산업 사회의 등장이 있다. 이 시기에 호주에서는 중요한 사회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호주 사회와 호주 청년들의 삶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나게 변화시켰던 3가지 역사적 시기를 살펴본다. 첫 번째 시기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로, 이 시기에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대체로 선형적인(linear) 형태를 보였다. 남자들은 주로 전일제 일자리를 얻었으며, 이 때 중등교육이 대중화 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시기에는 노동력의 직업별 구조 변화, 그리고 청년층의 전일제 근로 붕괴를 포함한 호주 노동시장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 특히 1970년대에 교육 정책은 취약계층(예: 여자 아이, 농촌 청년, 원주민 청년)이 분화되고 복잡한 양상으로 변해가는(fragmented and complex) 노동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세 번째 시기에서는 1970년대의 사회공학정책 정신(social engineering policy ethos)이 이후 10년 동안 호주 경제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경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에 의해 대체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분석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청년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주거형태와 가정생활의 방식이 크게 변화했고,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교육에서의 학력주의(credentialism)가 강화되었다. 특히 노동 부문의 구조전환이 이루어져 고용 형태가 유연하고 불안정한 방식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많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독립은 먼 일이 되었고, 이는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청년들이 성인기 진입에 실패했음을 의미했다.

### 1) 중등교육의 대중화(mass secondary education)와 취업으로의 조기 이행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에서는 중등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는데, 새로운 산업기반 경제를 위한 노동력 구축, 이를 통한 제조업, 비즈니스, 금융 및 공공부문의 젊은 노동력의 공급이 필요해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대중화된 중등교육 제도는 새로운 이민자의 대대적인 유입과 인구의 급속한 증가<sup>9)</sup>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통합(social inclusion)과 평등의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 (1) 중등교육의 확대

1950년대 중반의 의무교육은 14세까지였으므로 대다수의 청년들은 15세에 학교를 떠났다.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시키는데 있어 학교는 가정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생활, 직업, 시민으로의 역할을 준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Wyn, 2009a).

당시 연구들은 청년들을 ‘고도로 복잡한 세계’에 대비해 준비시키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있도록 만드는(fit) 학교의 기능을 강조했다(Cunningham, 1951: 10). 오늘날의 시대에 맞춰 추정해보면, Connell과 동료들(1957)은 1950년대의 청년들이 ‘현재의 불안과 불확실한 대처하고 미래의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지식과 기술을

---

9) 호주의 1945년과 1975년 사이에 연평균 2%씩 증가했다 (Welch, 2007).

제공해야 함을 주장했다. 즉,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르고 그들 처한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철저히 파악함으로써 지적이고 비판적인 시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교육의 목표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화가 야기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50년대 청년들이 당면한 불확실한 시기의 어려움과 긴장에도 불구하고, Wyn(2009a)은 당시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우선 (대부분 남자의 경우) 취업용 교육과 (젊은 여성의 경우) 사회적 역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교육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은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학습내용은 연령에 따라 구성이 되었고, 각 연령대에 기대하는 수준이 결정되었으며 “학생”이라 개념은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학습은 가족,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었다. 청년들은 제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정해진 행동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가정 하에 교육을 했으며, 이 당시 부상한 전문지식과 발달심리학이 청년들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Wyn, 2009a: 5).

동질적인 대규모 학교교육(homogeneous mass schooling)의 개념은 학생들의 다양성은 무시한 채 연령에 따라 학생들을 분류하고자 하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sup>10)</sup>. 이 당시에는 그 사람이 처한 특수 상황보다 몇 살인지가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18세라는 것이 일류 대학의 법대 학생이라거나 시골에서 실업상태의 젊은 여성, 또는 갓 이민 온 사람이라는 것(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른 교육적 필요) 보다 더 중요시 되

---

10) 이러한 동질화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특한 사회 경제적 산물이었다. 즉 대중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대중문화의 개념이 나왔고,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시기였고 또한 일반 인구집단을 위한 중등교육의 문이 더욱 넓어졌다.

는 듯 했다(Wilson & Wyn 1987). Wilson과 Wyn은 연령대보다 성별, 계층 또는 인종이 무엇인지가 청년들이 당면하는 도전과 기회에 훨씬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 (2) 경제적 번영 및 전일제 취업

1950년대는 완전 고용의 시기였고 실질적으로 경제가 성장한 시기였으며 대다수 호주인의 생활수준이 향상된 시기였다. 직업의 문은 학교를 떠난 청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열려 있었다. 1961년 인구조사 기록에 따르면 제조업, 상업, 금융 및 부동산 그리고 지역사회와 비즈니스 서비스는 급속히 성장했다(ABS 1964).

제조업의 성장은 특히 노동계층의 젊은 남성에게 새로운 고용의 기회를 제공했다. 1950년대의 10년을 통틀어 청년 실업은 2%를 넘지 않았다(Brown, 1998). 또한 청년들은 젊은이는 일찍(예: 15세) 학교를 떠났고 다양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물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위치가 되기 전까지 그들이 일하는 직업은 대부분은 미숙련직이었다(Brown, 1998). 그렇지만 젊은 남성의 경우, 일단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 안착했으면 직장에서 승진을 기대할 수 있었다.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전일제 근로는 안정적인 성인기 이행을 가능케 하여 책임있는 근로자로서,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Connell et al., 1975; Wilson 1989,; Wilson & Wyn, 1987). 전일제 일자리를 얻게 되면 그들의 기술, 지식 그리고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의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게되고, 정체성이나 존재감을 형성하며 삶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의 일원으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또한 일에 대한 보수 덕분에 청년들은 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족과 학교 친구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Bessant과 동료들(1998: 163)에 따르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갖는다는 것이 호주 남성들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은 ‘아주 중대한 의미(an historical dimension)’를 갖는다. 근로 윤리(work ethics)를 우선시하는 호주 같은 사회에서는 취업과 정체성 구축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실업을 한 사람은 게으르고 부주의하거나 무능력한 것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말하는 연구자도 있었다 (Wilson, 1989: 15). 직업은 사람들 삶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학교를 떠나 일자리를 얻을 때 청년들의 성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1970년대까지 대개 약 16세에 취직을 하였음). 또한 취업을 함으로써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며, 학교교육이라는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Connell et al. 1957).

그러나 청년이라는 이미지가 ‘독립을 찾아 나서는 남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별 간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Brown 1998: 65). 젊은 여성에게 청년기(Youth)란 결혼하기 전 그리고 가사일을 떠맡기 전의 한 단계였다. 다시 말하자면 학교 졸업 직후 얼마간의 취업기간은 일시적 단계로 여겨졌고, 심지어 ‘여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자원(psychological resources)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는’ 시기로 여겨지기도 했다 (Brown, 1998: 65). 젊은 여성은 가정을 이룰 때까지(Wyn, 2009a) 혹은 ‘진짜 일’로 여겨지지도 않았던 집안일 같은 무급 노동을 할 때까지만 취업을 했다(Bessant & Cook, 1998). 실제로 196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연령과 결혼 여부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변동이 컸다. 상당 비율의 여성이 10대 후반에 직장에 들어가지만, 20대의 노동시장참여율은 (결혼 및 육아로 인해) 가파르게 감소했고, 30대 중반 및 후반에 들어 다시 증가했다 (ABS 1964).

## 2) 전일제 노동시장의 감소 및 교육의 사회통합 기능

1960년대 중반부터 호주의 노동시장은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고용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던 제조업과 같은 산업이 몰락하고 공공부문의 고용구조가 조정되는 등 굵직한 변화를 겪었다. 청년의 전일제 일자리는 줄었고 실업상태에 있거나 전일제 교육을 받는 15세에서 19세 청년들의 수가 증가했다.

### (1) 청년 전일제 고용의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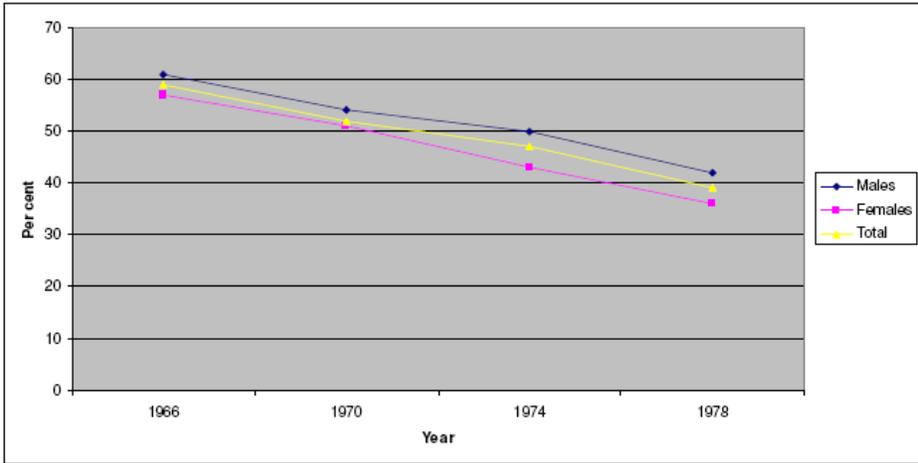
Bessant과 Cook(1998)은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이 학교가 청년들의 직업 대비 교육에 실패했거나 청년들에게 어떤 특정한 능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청년들의 전일제 고용이 붕괴하면서 학교는 더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정책의 초점은 청년의 직업 교육을 준비시키는 곳으로서의 학교역할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1970년대의 청년 실업은 학교 중도 탈락자, 이민자,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 또는 소수자 집단(minority groups) 같은 ‘사회적 취약 집단’ 출신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취약 계층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 불평등한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Jamrozik, 1998: 78). 그러나 Bessant과 Cook은 학교를 탓하기보다 청년 전일제 근로의 붕괴가 경제계와 일터에서 발생한 변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일부 산업에 요구되는 관세 보호 장벽의 철폐와 세계적인 사건(예: 1970년대의 석유위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사양산업(예. 제조업)에 있던 미숙련 노동력이 사라지고 보다 전문성이 강화된(금융,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직종이 증가했다. <표 IV-1>은 전일제 일자리의 감소와 1966년에서 1984년 사이의 약 20년에 걸쳐 발생한 시간제 일자리와 실업의 증가를 보여준다.

〈표 IV-1〉 1966년, 1975년 및 1984년 전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거나 실업 상태에 있거나 전일제 교육을 받는 15-19세의 비율 (%)

	1966	1975	1984	Growth +/-
Full-time 고용	59	43	33	-26
실업 Unemployment *	2	6	10	+8
Total Full-time labor force	61	50	42	-19
Part-time 고용	4	8	13	+9
Full-time education	30	43	51	+21

\* 전일제 취업 희망하는 실업자  
출처: Sweet (1987).

Wilson (1989)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부터 젊은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전일제 일자리의 기회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을 겪었고 젊은 남성의 경우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중반 그리고 특히 1980년대 중반에 전일제 일자리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호주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 이러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사이에 전일제 일자리를 가진 15세에서 19세 청년의 비율이 남녀 집단 모두에서 평균 20%까지 감소했다 (ABS 1987). 전일제 일자리는 1966년에서 1978년까지 젊은 남성의 경우 61%에서 42%로, 젊은 여성의 경우 57%에서 36%로 감소했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은 남녀 청년층에서 나타난 전일제 근로의 변동사항을 나타낸다.



출처: ABS (1987)

[그림 IV-1] 1966-1978년 성별 15-19세의 전일제 취업, (%)

전일제 고용의 감소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 15세와 16세의 청년들이 더욱 심하게 경험했지만, 1980년대에는 다양한 연령에 걸쳐 고르게 나타났다 (Sweet 1987). [그림 IV-1]은 15세에서 19세까지 여성의 전일제 근로가 동일 연령 코호트 전체와 비교할 때 항상 평균치를 밑돌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영어권 출신의 이민자 청년은 호주 출신의 청년보다 실업률이 더욱 높아 인종과 민족(ethnicity) 또한 청년의 고용 여부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기는 임시직 고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인데, 젊은 남성보다 젊은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성별 차이가 있었다. <표 IV-2>는 이러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2> 1966-1978년 성별 15-19세의 시간제 취업 비율

(단위:%)

	1966	1970	1974	1978	Growth +/-
남성	6	9	9	17	+11
여성	7	8	15	24	+17
전체	7	9	12	20	+13

출처: ABS (1987)

전일제 고용 기회의 감소와 맞물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는 청년들이 많아졌고(부분적으로는 제한된 근로의 기회 때문에 그리고 더 나은 직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간제 근로와 임시직(보통 전일제 교육과 중첩되는)으로 고용형태의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이후 40년간 청년 취업의 주된 형태가 되었다(Jamrozik 1998).

청년, 특히 젊은 여성은 전일제 고용에서 시간제 취업으로의 옮겨가기 시작했다, 교육을 받는 경우도 많아졌으며, 시간제 취업과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다시 말해, 1970년대 동안 성인기 이행 양상은 더 복잡해졌는데,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현상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청년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더 이상 선형적 방식(linear trajectory)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하게 되었다.

## (2) 교육 정책에서의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등교육에 대한 참여가 극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일부 사회 집단들은 교육 참여도 면에서 여전히 뒤쳐져 있었다. 1970년대 호주의 교육 정책은 취약 집단을 포용하고(inclusion) 발전(development)시키기 위해 평등의 문제와 평등한 교육 기회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었다. 학비를 없애고 학생 보조금(student allowance)을 지급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도 이에 포함되었다

(Beazley 1980). 이러한 전략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의 모든 청년들의 참여를 최대화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경우 더욱 심하게 경험을 하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실업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70년대는 사회정의의 중요시 하는 사회 공학(social engineering)의 신기원을 이루었다. 1973년 호주 학교 위원회는 Karmel 리포트를 통해 교육기회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부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충교육 프로그램들(compensatory education programs)이 실시되었다(Haynes, 2002; Welch 2007). 취약계층의 학교, 이민자 교육, 여학생 교육, 농촌 및 벽지 학생들의 교육, 교과과정, 문해 및 수리 프로그램, 학교의 재정지원 방식, 참여 및 평등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정책이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었으며, 소수(minorities) 집단의 권리를 옹호하고 호주사회가 '동화주의 입장(assimilationist)에서 문화적 다원주의 입장(cultural pluralist)'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Henry et al., 1988: 117).

### 3)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에서 경제적 구조조정(economic restructuring)으로의 전환

1980년대의 노동당 정부(Labor government)는 1970년대에 추구되었던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tic)와 다른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모색하였다.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다. 신자유주의(neoliberal), 경제적 합리주의(economic rationalist)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재구조화는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변화는 '사회 공학에서 경제적 구조조정으로의 전환'으로 요약될 수 있다 (Haynes, 2002: 118).

학교 위원회(School Council)의 권한이 감소되는 대신 고용과 경제 문제에 본격적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고, 국가고용교육훈련위원회(National

Board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가 창설되기에 이르렀다(Haynes, 2002). 예를 들어 ‘호주의 학교 강화(Strengthening Australia's Schools)’ 정책은 국제 시장에서의 호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다 융통성 있고 다방면에 숙련된 노동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호주의 학교교육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Dawkins, 1988; Lingard & Porter, 1997). 1989년 발표된 “호바트 학교교육 선언(Hobart Declaration on Schooling)”은 ‘호주 학교교육의 국가적 공동목표(Common and Agreed National Goals for Schooling in Australia)’가 포함되었는데 여기에서 교육의 ‘경제적’ 목표가 다시 한번 명시되었다.

#### (1) 교육과 취업의 관련성(relevance) 증가

이러한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 속에서 청년 연구센터(Youth Research Centre)의 Dwyer(1989a: 2)와 그의 동료들은 1980년대에 ‘청년이 독립적인 성인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학교교육의 이수와 취업, 그리고 주거공간 마련(housing)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노동시장의 재편과 더불어 더 높은 숙련도와 유연성을 요구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정책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학생이 학교교육이나 다른 형태의 훈련(training)을 통한 기술과 공인된 자격(recognized qualification)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를 위해 학교교육의 마지막 해(마지막 학년)에 탈락하는 학생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컬비보고서(Kirby Report, Kirby, 1985)에 제시된 정책은 중등학교 교과과정이 노동시장(job market)과 더욱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이 보고서는 훈련생 제도(traineeship system)의 도입을 권장했는데, 이 제도는 이전의 도제제도보다 청년들에게 보다 폭 넓은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시도는 청년들, 특히 실업 상태의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했다(Wilson & Wyn, 1987).

Dwyer와 그의 동료들(1989a: 3)은 이러한 정책들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먼저 학교 중도 탈락률을 낮추었다는 증거와 학교 교과과정과 취업 사이의 연계성을 높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반면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이 감소한 것은 호크정부(Hawke government)가 15세-16세를 대상으로 한 청년 실업급여를 폐지함으로써 야기된 결과였을 수도 있다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 구축에만 관심을 가졌지 청년들의 취업이 가지는 사회 참여, 새로운 도전, 보람을 얻는 일이라는 측면에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이다<sup>11)</sup>.

게다가 1980년대 초에 수행된 일부 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학교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더 나은 취업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inley, 1984; CTEC, 1982). ‘쉼터 효과(shelter effect)’라는 개념을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말하자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고용 기회의 부족 때문이며, 이 때문에 학생들을 학교에 머무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CTEC, 1982).

예컨대 호주 전국여론조사(Australian National Opinion Polls survey)에 따르면 학생과 부모들 중 학교교육을 받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1984년의 69%에서 1988년에는 8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ANOP, 1988). 더욱이 25세 미만의 조사 응답자 중 88%는 더 많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이 더 나은 취업 기

---

11) 노동시장에 접근시키기 위해 청년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정책실패 또 다른 예는 청년 보장 일-학업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청년들은 소매점에서 선반 정리하기 등 훈련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 교육을 받았다. 또는 주유소 보조원처럼 훈련이 또 다른 기관(교통청)에 의해 이미 제공되었다 (Smith, 1988 참조).

회라는 점에 동의했으며, 56%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재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NOP, 1988). Braithwaite(1988)가 수행한 연구는 교육의 가치에 대한 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특히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s)를 다니거나 대도시 지역(metropolitan areas)에 사는 학생들과 학부모일수록 교육의 그러한 경향이 높았다.

학력(educational qualification)이 점차 더 중요해지면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는데, 학력을 취득하는 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그리고 인종(ethnicity)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Wilson과 Wyn(1987)에 따르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고 학교에 머무는 비율(retention rate)이 카톨릭학교(45 - 50%)와 공립학교(30-35%)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높았다. 성별 요인도 학력취득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중도 탈락 하지 않고 학교에 머무는 비율은 1970년대의 여학생들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 덕분에 남학생들보다 더 높았지만, 중등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은 남학생보다 낮았으며 그 여학생들이 받는 직업훈련은 남학생들이 받는 직업훈련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가지는 가치가 낮았다. 끝으로 농촌 지역과 원주민 출신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학교를 떠났고 노동자 계층의 이민자들의 고등교육 참여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모든 청년들이 중등교육을 이수하도록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는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추가적인 자금은 보통 개인의 부담으로 충당되었다. 학교는 교육에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에 떠넘기기 시작함으로써 책임과 부담을 개인에게 지웠다(Sheen, 1988; Wilson & Wyn, 1987). Wilson과 Wyn(1987: 14)의 주장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희생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면 청년이 누릴 수 있는 교육활동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저소득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일자

리 찾는데 필요한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데 드는 부담이 점차 커짐을 느끼게 되었다.

## (2) 변화하는 상호 의존적인 환경에서의 취업

1980년대 초반 호주 경제의 구조조정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심화시켰으며,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경험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983년과 1988년 사이 전체 고용율은 17% 증가했고 청년 고용율은 15% 증가했다. 전체 실업율은 절반으로 줄었다(1980년대 중반에 청년 실업 급여가 철폐됨으로써 야기된 결과로도 볼 수 있음)(Dwyer et al., 1989a). 그러나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리 낙관적인 상황으로만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청년의 전일제 근로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것은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던 추세로, 그 후 20년 동안 15세에서 19세 여성의 전일제 근로 비율은 58%에서 26%로 떨어졌으며, 동일 연령대 남자들의 경우 59%에서 34%로 떨어졌다(Dwyer et al., 1989b).

시간제 취업을 하는 청년의 비율이 1966년의 경우 15명 당 1명이었으나 1986년에는 3명 당 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Sweet(1987)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고용주들은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업자보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했다. 1986년까지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청년 가운데 60%가 학교 학생이었고, 이는 1971년의 약 30%보다도 훨씬 증가한 수준이었다. 1980년대에 새로 생겨난 대부분의 시간제 일자리는 주당 몇 시간짜리였을 뿐이고 소매와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었던 반면, 사무직 일자리(white collar and clerical employment)는 70년대 초반부터 크게 감소했다. 즉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의 종류는 성인의 일자리와 달랐으며, 학생들이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게다가 자동화, 전문화된 분업 및 셀프 서비스 테크닉과 같은 노동 환경의 변화 역시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한 원인이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25세-34세 청년들에 비해 15세-24세의

청년들의 노동 이동성(labor mobility)이 높아졌는데, 나이가 어리고 노동 시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착취를 당하는 일이 많았다(Dwyer et al., 1989b). 이 시기에 산업계는 채용을 줄여서 비용 절감을 단행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청년층의 취업 기회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들이 생겨나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등교육을 이수하거나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이 때문에 15세-19세 청년들보다 20세-24세 청년들이 더 유리했다)(Wilson, 1989). 말하자면 청년 노동시장의 취약성은 청년들의 자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전 세대가 누렸던 학교에서 전일제 일자리로의 이행이 1980년대에는 당연시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새로운 양상은 1980년대에 청년들이 교육을 받는 방식과 일자리를 얻는 방식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 (3) 변화하는 청년 노동시장의 함의

통계수치와 사회적 추세에 담긴 의미 외에도 왜 청년 노동시장이 변화하였고 그 변화가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Sweet(1987)은 이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중 다수는 지엽적이거나, 청년의 전일제 일자리가 줄어든 원인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설명 가운데에는 실업의 증가, 지나치게 높은 청년 임금, 그리고 기성세대와의 경쟁 등이 포함되어 있다. Sweet은 이와 같은 요인들이 청년의 전일제 일자리가 줄어든데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주요 원인은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의 변화와 기술이나 구조적 변화에 있다고 보았다. Sweet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10대가 가질 수 있는 전일제 일자리는 지난 20년간 다양한 이유

로 감소해왔다. 경기침체는 그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다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고용주들의 노동력 수요와 노동력 공급을 매칭시키는 기술의 정교화, 하청(subcontracting)의 증가, 기술 혁신, 정교화된 분업(finer division of labor), 높아진 노동시장 진입 자격, 경험이 많고 교육 수준이 월등히 높은 신입 노동력을 활용한 무한 경쟁(unregulated competition), 해고와 채용 결정에서 기술과 경력(skill and experience)을 우선시 하는 노동시장의 역학(dynamics) 등이 있다(Sweet, 1987).

다시 말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시하는 구조적 변화와 더 나은(more qualified) 노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 재학률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정책,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증가하고 전일제 취업을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믿은 학부모의 인식 등으로 인해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15세나 16세가 되면 학교에서 전일제 근로로 이행하던 성인기 이행모델에 변화가 이루어졌다.

청년들의 태도와 신념에 관한 여러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전일제의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가장 많이 우려를 하였으며, 실업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NOP, 1988). 청년의 전일제 일자리 시장이 붕괴한 점을 감안할 때 응답한 청년의 2/3가 전일제 일자리를 얻는 것이 매우 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고, 그들 중 92%가 ‘이상적’ 일자리를 찾이란 상당히 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응답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ANOP, 1988).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구하기에 이렇게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일자리 자체가 끝이 아니라 일자리는 ‘독립과 성인됨’에 이르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먼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희망과 낙관의 감정 뿐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의 원천이기도 했다. 또한 청년들은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얻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그래야 한다는 요구를 받지만, 재편된 노동시장이 더 높은 학력을 요구하고 전일제 일자리는 붕괴되면서 성인으로서 독립하여 생계를 책임지고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부모와 청년 자녀들은 전일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노동시장에도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청년들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전일제 일자리를 얻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전일제 일자리는 1차 노동시장(primary labor market)에서만 얻을 수 있었다(ABS, 1988; Dwyer et al., 1989b; Wilson & Wyn, 1987).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다 나은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이 경제와 밀접히 연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부모와 청년 자녀들 사이에 점차 폭넓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괜찮은 일자리와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부모와 청년 자녀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청년층을 위한 전일제 일자리가 붕괴되었다는 것은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Hartley(1989: 24)와 Dwyer와 그의 동료들(1989a)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이 시간제 근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주 정부로부터의 복지수당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부모와 주 정부가 담당하는 경제적 지원은 더 커지게 되었다. 15세에서 17세 근로자의 상당 비율과 18세에서 26세 근로자의 25% 정도가 빈곤선 이하(below poverty line)의 소득을 벌었고,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을 반영한다(Dwyer et al., 1989a).

#### (4) 새로운 주거 형태

Dwyer와 그의 동료가 정리한 성인기 이행이라는 개념에 관련된 세 번째 이슈는 독립적 거주 문제와 관계가 있다. 이들의 연구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밀접히 관련된 중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이들은 1980

년대에 결혼을 하고 전통적인 핵가족(traditional nuclear family)으로서 출발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부모님 집을 떠나는 청년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가족의 구성과 성인기 이행에서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음을 지적했다. 결혼하는 것이 여전히 부모님 집을 나와 분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지만 그 비중은 점차 감소했다(남성 31%, 여성 45%) (Young, 1987).

Young (1987: 3)은 이러한 양상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확인했는데 하나는 1) 독립을 원하거나 부모와의 갈등을 이유로 집을 떠나는 청년들의 비율이 증가했고, 2) 결혼한 사람 중 25세 미만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했으며(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1971년에 21세였고 1983년에는 23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도 높아졌다(첫출산 연령은 1971년의 23세에서 1983년의 26세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Young (1987: 141-145)은 ‘독립’을 이유로 부모의 집을 떠났던 이들이 결혼을 이유로 떠난 사람들보다 남자의 경우 2살, 여자의 경우 1살 더 어렸음에 주목했다. 부모의 집에서 떠나 독립한 청년들의 절반은 친구와 동거했지만 나머지는 혼자서 살거나 친척과 함께 살았다. Young(1987)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독립을 이유로 집을 떠났던 많은 청년들이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왔는데(남성 59%, 여성 54%), 대부분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많은 이들이 차후에 다시 한 번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유형 및 청년 독립에 관련된 이러한 새로운 양상에 담긴 중요한 정책적 함의는 청년들이 받는 낮은 임금으로는 주거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버드킨 리포트 (Burdekin, 1989)에서는 청년의 주거관련 필요를 정책이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으며, 청년들이 실지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주거비용(housing/ rent prices)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적어도 생계유지와 주거공간의 측면에서 부모 집을 떠난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성인과 다를 바 없다. 버드킨 질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듯이 청년이라고 해서 더 낮은 임

대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공공요금이나 식비를 더 적게 내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청년들에 대한 수입보조(income support payment)가 더 낮은 것은 공평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pp.148 - 149).<sup>12)</sup>

Dwyer와 그의 동료들(1989a: 14)에 따르면, 청년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려고 할 때 장애가 되는 물질적, 비물질적 요인들은 ‘성인기가 기회와 희망이 있는 미래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배제된 미래’임을 보여줬다. 더욱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드는 비용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일제 일자리는 부족하고, 어떤 청년들은 시간제로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성인으로서 사회·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 청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어떤지에 따라 좌우됨을 뜻했다.

그런데 청년정책은 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했으며(outmoded) 청년들의 가구 형태(household arrangement)와 부모로부터 분가한 청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의 가장 큰 과오는 청년기가 성인기에 이르기 전에 거쳐가는 과도기적 단계라는 가정 때문에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청년들이 받는 낮은 임금이나 편찮은 전일제 일자리 부족 같은 구조적 불리함(structural disadvantages)이 정당화되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그들을 빈곤의 위협에 처하게 만들었다(Hartley, 1989).

Dwyer와 동료들(1989b: 15)이 말한 것처럼,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임대비를 깎아주는 것(junior rental rates)과 같은 사회적 배려는 없다. 넉넉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는 청년도 있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어 빈곤한 삶의 위협에 처

---

12) 버드킨 리포트는 청년들이 독립적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빅토리아 루밍 하우스 프로그램 사용을 원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수수료를 물리는 상황에서 주 정부의 구조적 지원 부족을 강조했다. 민간부문의 측면에서 평균 임대료 상승은 주 당평균소득을 뛰어넘었고 청년들은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들의 고정관념에 좌우되었기에 그들의 거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청년들도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마련된 전통적인 청년 정책의 틀은 청년들의 주거 방식과 같은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청년 정책은 1980년대 청년들이 경험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 4) 요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청년들이 경험했던 선형적인 성인기로의 이행방식은 그로부터 25년 뒤 깨어졌다. 1980년대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성인임을 나타내던 지표(markers)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청년과 성인을 별개의 범주로 다루기도 애매해졌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수립된 청년 정책은 더 이상 시대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청년기를 “성인기로 이행 하는 과정(in transition)”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려고 할 때 청년들이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자유시장정책(free-market oriented policies)의 도입으로 복지 정책은 약화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모든 호주 청년들이 12년의 학교교육을 마치도록 한 것은 호주 사회에 중대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시작되었음으로 보여준다. 12년간의 학교교육을 마치지 않고도 전일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1980년대 청년이 당면한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 2. 성인기 이행의 현대적 양상

이 절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호주 청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경제적 필요와 노동시장의 요구에 따라 교육 정책이 변화된 양상을 광범위하게 살펴본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변화는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그리고 전체 사회를 보고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먼저 노동시장에서 일어난 극적인 변화와 그것이 청년들에게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짚어본다. 복잡한 변화 속에서 제조업 경제가 서비스 경제로 변모했고 전일제 고용이 결국은 불확실하고 비정규적인(casual) 고용으로 전환되었다. 다음으로는 지난 20년 동안 연방정부와 주 정부 정책에서 경제적 필요에 따라 교육정책을 맞추어왔던(alignment) 시도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경제적 필요에 맞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성인기로 이행하는 ‘경로(pathways)’ 라는 은유가 갖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한다. “경로” 라는 개념은 의무교육단계 이후의 교육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로(pathways)” 라는 개념이 많은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청년들이 당면한 기회와 도전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념적 접근을 제시한다.

### 1)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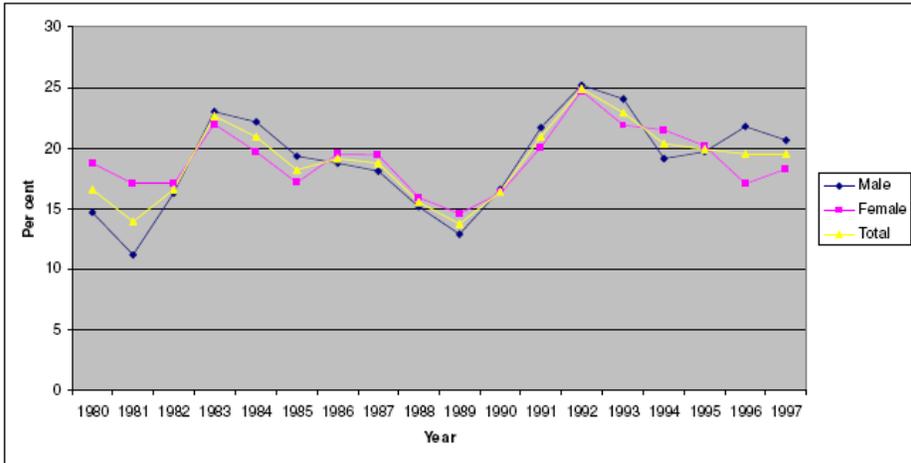
1980년대 호크 정부(Hawke government)에 의해 단행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 최대화’ 를 목표로 했던 구조적 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1990년대에 더욱 심화되었다. Pusey(2003)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노동시장의 개혁(labor market reform)은 1990년대 초반 경기침체 이후 등장했고, 경제적 구조조정(economic structural

adjustment)은 호주 노동자들의 사회계약(social contract)과 그들의 직업 생활을 결정적으로 바꾸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노사관계 체제의 분권화(decentralisation)와 탈규제화(deregulation)는 이러한 개혁의 전조였으며, 이는 중재(arbitration), 보호(protection) 및 의무노동조합주의(compulsory unionism)에 영향을 미쳤다. 인건비(labor cost)를 줄이고 근로자의 유연성(flexibility)을 늘려야하는 요구가 강해졌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민영화,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 도급계약(contracting)의 증가 등이 잇달아 나타났다. 1985년부터 2000년까지 15년 동안 전일제 근로는 9%, 남성 노동력의 경우 3%,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는 4% 그리고 노동조합원은 21% 감소한 반면, 임시직 일자리는 11%, 여성 노동력은 9% 증가했으며,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은 40시간에서 43시간으로 늘었고 민간부문의 취업비중(share of employment)은 11% 증가했다(Pusey, 2003).

이러한 경제적 변화와 노동력 변화는 모든 호주 사람들이 겪은 변화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극적인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한 이들이 청년층이었다. Andres와 Wyn(2010)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의 세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래 그 어느 세대도 겪지 않았던 노동시장의 새로운 원칙이 적용되던 상황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했다. 예컨대 청년 취업의 측면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대는 전일제 일자리를 수월하게 구할 수 있었던데 비해 1970년대 이후의 세대는 실업과 불완전 고용의 증가, 시간제 일자리나 임시직의 만연, 그리고 취업을 하는 대신 직업훈련과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Lewis & Mclean, 1998: 1).

지난 20년간 청년 노동시장의 실업률은 1980년의 16.6%에서 1998년에는 거의 20%까지 증가하면서 악화 일로를 걸었다. 청년 실업은 1990-1991년에 25%까지 높아져 정점을 찍었는데, 이 시기는 1970년대 이후 세대가 학교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입한 시기였다. [그림 IV-2]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준다.



출처: ABS (2010)

[그림 IV-2] 1980 -1997년 호주의 성별에 따른 15-19세의 실업률

청년층의 악화된 고용상황은 총 고용 대비 청년인구 고용률이 1978년 49%에서 1998년 44%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Lewis & Mclean, 1998). 전일제 일자리에 일하는 청년의 수가 감소한 것은 중등 교육을 받는 청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 전일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하던 제조업 부문이 감소하면서 전일제 일자리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Gregory, 1995). 이처럼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청년들이 중등교육이나 전문대학 학력 없이는 괜찮은(meaningful and rewarding)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됨에 따라 문화에도 세대적 변화(generational change)가 일어났다.

경제 및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분명한 특징은 청년 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일제 일자리에서 시간제 일자리로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변화는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던 때와 경기 침체 후에 발생했다. 즉, 1988년 전일제 근로에 종사하는 청년의 수가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청년의 약 2배에 달했다. 10년 후에는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었는데, 대부분의 산업 경제(industrial economy)에서 서비스 경

제(service economy)로 옮겨감으로써 시간제 근로와 임시직 일자리가 전일제 일자리보다 더 많아졌다. 이 시기 동안 전일제 일자리가 46% 감소한 데 비해, 시간제 일자리는 77%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명백한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난 20년 동안 젊은 여성들의 근로 형태는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로로 급격하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 IV-3>은 이러한 양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IV-3> 1988 -1998년 15-19세의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

(단위: %)

성별	고용	1988	1998	2008
남	전일제	70.2	44.4	45.2
	시간제	29.8	55.6	54.8
	합계	100.0	100.0	100.0
여	전일제	55.3	24.2	21.5
	시간제	44.7	75.8	78.5
	합계	100.0	100.0	100.0
합계	전일제	62.8	34.2	33.5
	시간제	37.2	65.8	66.5
	합계	100.0	100.0	100.0

출처: ABS (2010)

1970년대 이후 세대는 불안정한 일자리의 증가, 전일제 근로의 붕괴 그리고 7년 간 계속된 높은 청년 실업률을 처음으로 경험한 세대였다. 1993년의 노사관계 개혁법(The industrial Relations Reform Act) 및 1997년의 직장 노사관계법(The Workplace Relations Act) 같은 노동 정책은 임시직과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와 근로시간의 탈표준화(de-standardisation)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Campbell & Brosnan, 1999).

호주에서는 임시직이 1990년의 19%에서 2004년에는 26%로 증가해 전일제 일자리의 성장률을 앞질렀다(Pocock et al., 2004). 지난 20년 동안

호주는 임시직 증가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상위 3위 안에 들었다 (Pocock et al., 2004; Campbell & Burgess, 2001; OECD 2002). 더욱이 지난 15년 동안 청년 일자리에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5년에는 고용된 15세-19세 중 66%가 임시직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1992년의 54%보다도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AIHW, 2007).

호주 통계청 데이터(ABS)와 HILDA는 임시직의 특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두 자료에 따르면 임시직 근로자들은 아직 전일제 교육을 받는 중이거나 중등교육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판매직이나 접대업(hospitality sector)과 같은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는 일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Wooden & Warren, 2003). HILDA 200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Wooden과 Warren은 임시직 근로자(casual workers) 중 상당수가 단기(short-duration)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고, 이 때문에 '실업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p. 10).

이렇게 복잡하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정책에서는 근로자, 특히 젊은 근로자가 다방면에 능하고 숙련도가 높아야 하며 유연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이행한 새로운 경제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시각으로 인해 교육정책이 경제적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된 상황을 다음 부분에서 짚어보겠다.

## 2) 교육정책 및 고등교육 확대

경제계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혁, 그리고 1990년대 초의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을 하지 않으려면 기술을 습득하고 고등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압력이 청년들 사이에 더 커졌다. 정부는 학교 진학률을 높이는데 주력하였고, 실업 퇴치 및 '보다 강하고(stronger),' '보다 똑똑한(smarter)' 노동력 양성을 위해 더 많은 교육을 받도록 장려함으로써 노동시장 변화와 불경

기에 대응했다. Haynes (2002: 113 - 114)는 이러한 추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금융거래의 규제완화, 일터(workplace)에 대한 부분적 규제완화, 관세 감소, 공기업 및 공공서비스의 부분적 민영화, 정부 지출을 사회 복지 및 교육에 사용되던 정부 지출을 훈련 (인적 자본 투자)으로 전용하기 위한 노력... 이 모든 것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호주 경제를 구조조정하려는 정부의 의도적인 시도이다. 이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표는 결국 일자리이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강대국’에 의해 지배되는 치열한(hostile) 통상의 세계에서 호주 경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경제의 필요에 맞춰줌으로써 사회경제적 여건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1990년대의 핵심적인 생각이 되었다 (Haynes, 2002; Lingard & Porter, 1997; Marginson, 1997).

호주 경제는 구조조정이 필요했고 보다 높은 수준의 숙련되고 자격을 갖춘 노동력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교육정책과 청년정책의 어젠다가 다시 정립되었다. 19세 중 95%가 중등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중 하나였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중등교육을 마치는 비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장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 직업교육이나 훈련 등이 차선으로 여겨졌다(Dwyer et al., 1998; DEET, 1993A; DEET, 1994). 결과적으로 청년 정책은 국가의 인적 자본을 양성하고 숙련기술자를 길러내는 교육 및 훈련 정책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Bessant와 동료들(1998)은 호주의 청년 정책이 일반적으로 청년들을 ‘미래의 주역,’ ‘국가의 자원(national resource)’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념들은 청년들을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대상으로 보았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시각은 청년을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발달하는 중’인 존재로 묘사하는 전통적

인 사고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지난 20년 동안 실시된 연방 및 주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을 평가해보면 청년 노동시장과 교육의 관계는 엄청나게 변화하였고 그 변화의 방향을 이제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1991년 최초의 “호주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 보고서(National Report on Australian Schooling)는 경제적 필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즉, 호주가 중대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받은 노동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나가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Lingard & Porter, 1997).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담론의 근거에는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국제 경제에 대처하고 청년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학업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강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으며 이런 필요성은 “청년의 의무교육 이후 교육 및 훈련 참여(Young People's Participation in Post-Compulsory Education and Training, Finn, 1991), 교육의 활성화: 핵심 역량 보고서(Putting general education to work: The key competencies report, Mayer 1992), 호주 직업 자격 훈련 체계(The Australian Vocational Certificate Training System, Carmichael, 1992)와 같은 정부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런 정책은 또한 높은 청년 실업과 청년 전일제 근로 노동시장의 붕괴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의무교육 이후 교육을 받는 청년들의 비율을 높이고 ‘미래를 위해 숙련되고 유연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직업능력’을 개발시키는 보편적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Dwyer, 1995: 95).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아니면 경기가 회복된 것 때문에) 21세기가 시작되어서도 교육 정책은 계속 경제 목표에 맞춰 이루어져 왔다. 교육훈련청년부(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 2000)의 보고서인 “지식사회를 위한 학습(Learning for the Knowledge Society)은 경제적 필요에 맞는 숙련된 노동력을 구축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민간 부문이 생산성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이라고 주장한다.

빅토리아 주의 2003년과 2008년 공립학교 청사진은 교육이 나라의 경제적 경쟁력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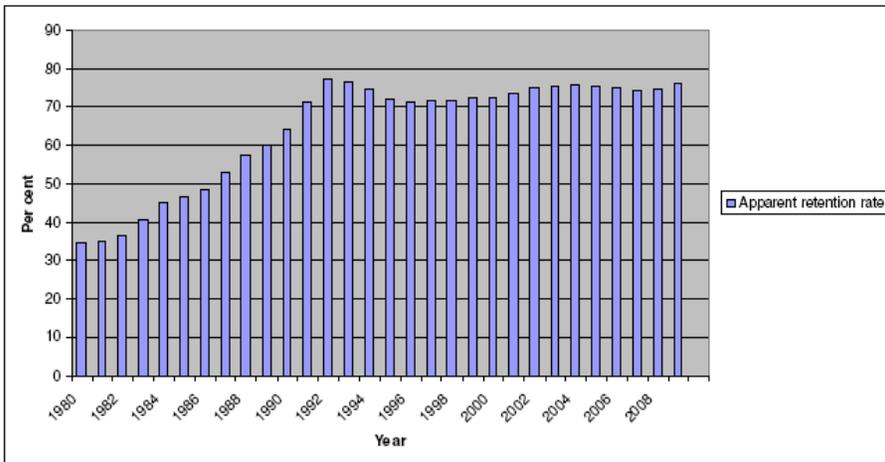
한층 수준이 높아진 (sophisticated) 경제와 점차 복잡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의 요구로 인해 우리는 모든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를 향상시켜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호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성장에 있어 꼭 필요한 고도로 숙련된 혁신적 근로자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육성해야 한다(DET, 2003a:1).

빅토리아 주의 또 다른 정책인 “국가경쟁력 유지: 숙련된 빅토리아 산업 인력” (Maintaining the Advantage: Skilled Victorians) 또한 혁신이 요구되고 경쟁력이 강화된 경제 환경에 맞서기 위해 노동력을 쇄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DET, 2003b). 또한 국가의 경제적 필요를 교육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최근 연방정부는 “배우기 아니면 일하기(Learning or Earning)” 라는 정책을 내 놓았는데, 이는 청년들로 하여금 중등교육을 이수한 후 고등교육을 지속하도록 권장하고, 고등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적어도 20세까지는 일을 해야만 소득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COAG, 2009). 마지막으로, 새로운 세대에 있어 전문 대학교육을 새로운 ‘의무 교육’ 으로 보는 견해는 고등 교육 부문을 다룬 Bradley 보고서에 의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Australian Government, 2008). 이 보고서는 25세에서 34세의 호주인 중 40%가 2020년까지 적어도 학사 수준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현재 학사학위 취득률은 29%로, 이는 1996년의 16%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호주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손질하고자 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Wyn(2004, 2007)은 과거와 비교해 1990년대와 2000

년대 동안 교육 측면에서 성인기 이행은 지속되는 부분과 변화하는 부분이 있음을 환기시킨다. 지속되는 측면을 보자면, 여전히 상당한 비율의 15세-19세 청년들이 전일제 교육을 받지 않았고(30%),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의 학생들은 중등교육을 마칠 가능성이 낮았다. 그러나 변화의 측면을 보면, 지난 20년 동안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지 않은 학생의 비율(school retention rate)과 고등학교까지의 12년 교육을 마치는 비율도 크게 증가했으며, 20세-24세 중 25%는 2006년까지 전일제 교육을 받았다. 그림 IV-3은 1980년부터 2009년까지 12학년 학생 유지율이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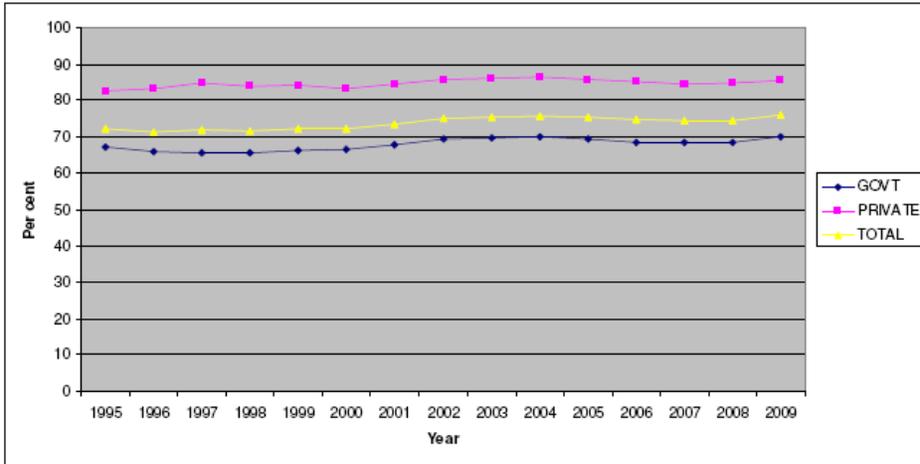


출처: ABS의 추정 데이터.

[그림 IV- 3] 1980-2009년 12학년 학생 유지율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과 그 가족에게 학력이 중요성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반영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은 일부 집단의 주변화(marginalization)와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학률이 일반적으로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학교와 연관된 사회적 격차는 상당했다. 아래의 그림은 지난 15년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학생 유지율 차이를 보여준다. 1995~ 2009년 내내 사립학교의 진학률은 공립학교보다

15% 더 높았으며 전국 평균보다 10%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과 그럴 수 없는 가정 사이에 사회적 불평등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IV-4]는 이러한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출처: ABS에서 추정된 데이터, 다양한 카탈로그.

[그림 IV-4] 1995-2009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생유지율 비교

결국, 이러한 교육정책과 사회적 결과는 교육 이수율이 높아지고 심화교육과 고등교육 부문이 많이 팽창했으며 지난 몇 세대 동안 고등교육 학력이 중요해 졌음을 보여준다. Andres와 Wyn (2010)의 설명처럼 이러한 정책은 고등교육이 1970년대 청년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에겐 당연한 규범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또 교육이 청년이 새로운 후기산업경제와 더욱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헤쳐나가는데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것임을 뜻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Wyn (2009a)의 지적처럼, 교육정책과 청년정책을 동일선상에서 추구해온 것이 지난 20년 동안 호주의 청년들에게 있어 젊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what it means to be young)를 규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점철된 노동시장에

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의무교육과 대학교육 및 평생교육)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버렸다 (Wyn, 2004). 다음 절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호주 청년들이 학교교육 이후에 어떤 진로를 선택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의 일환으로 성인기로 가는 길을 의미하는 “경로” (pathways)라는 은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다.

### 3) 경로(pathways)라는 은유의 의미

경기침체, 경제와 노동력의 구조조정 그리고 청년의 불확실한 일자리와 실업이 증가하던 상황에서 1990년대 초반에 성인기에 접어든 1970년대 이후 세대에게 성인기 이행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로” (pathways)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었다 (Dwyer et al., 2001). 이 “경로”는 당대 교육 정책의 핵심개념이었다. 그 중 첫 번째는 중등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전통적 경로이다. 1990년대에는 보통 학교를 일찍 떠났던 청년들이 이 경로를 선택했으나, 노동시장의 높은 불확실성과 청년 실업 때문에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못했다. 두 번째는 직업교육 및 훈련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이 경우 직업과 성인으로서의 삶이라는 보다 분명한 결과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대학을 거치는 ‘수퍼 하이웨이(super highway)’라는 길은 ‘지식사회’로의 진입을 약속했다 (Dwyer et al., 2001: 5).

“경로”라는 개념은 교육에 관한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호주 정부는 가능한 한 호주의 많은 청년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보내려는 정책을 폈다. (Dwyer et al., 1998). 즉, 교육과 청년 정책 그리고 노동 정책이 장려하는 이상적인 경로는 대학 진학이었다. 대학은 새로운 후기 산업 경제가 요구하는 정보, 기술 및 지식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서 권장되었다.

그러나 중등교육을 이수한 대다수의 청년들은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다 (위의 언급처럼 1996년까지 24세 이하의 사람 중 16%만이 대졸 학력을

취득했다). 또한 청년 연구소(YRC)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 19세의 약 25%가 12학년을 마치기 전에 학교를 떠나 고등교육 학력을 취득할 수 없었다 (Dwyer, 1995; Wyn & Lamb, 1996 참조). 이들 청년들이 학교를 떠났던 이유는 학교에 만족하지 못했거나 노동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였다. 이들이 주변화되었던 것은 대학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된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상에서 이들은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이루지 못한 집단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 중에는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학교로 다시 돌아가 중등교육을 마치는 것이 아주 어려웠기 때문이다 (Dwyer, 1995).

이와 같이 정부의 정책은 상당수의 호주 청년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교육적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더욱이 교육에 대한 이러한 협소한 경제주의적 관점은 지난 20년간 Dwyer (1995)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이 교육에 대한 “관리주의적 접근”(managerialist approach)이라고 불러왔던 생각(Haynes, 2002; Taylor et al., 1997; Wyn, 2009a 참조)이 그 핵심인데, 이 입장에서는 경제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교육을 어떤 결과로 보며, 지식을 기술과 역량(competencies)으로 정의한다.

의무교육 이후에도 모든 청년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한 정책 방향의 위험성은 바로 청년들을 보는 시각에 있어 그런 경로를 선택하지 않으면 성인기 이행의 다음 단계에서도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 데에 있다. 이러한 정책은 스스로를 위해 다양한 상황에 몸을 던져보고 이전의 결정을 반복해 방향을 수정하기도 하고 다양한 책임과 이해를 조율해야 하는 등의, 많은 청년들이 겪게 되는 학교 이후의 삶의 현실을 간과했다 (Dwyer et al., 1998). 또한 1980년대~1990년대에 호주의 노동시장에 일어난 구조적 변화와 세계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에 대해 협소한 직업주의적(vocationalist) 대응을 하였다. 청년의 개념과 성인기로의 이행 개념을 축소했고, 청년들의 삶을 이루는 다양한 차원(예. 사회적, 노동, 개인적)을 일반 노동시장의 역동성에 한정하여 바라보았다.

게다가 교육과 직업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게 된 것은 이전의 세대에 비해 가능했던 전통적인 ‘규범적’ 이고 ‘선형적’ 인 성인기 이행 양상이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복잡한 궤도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육과 일 사이의 예측 불가능한 연결고리가 생기고, 대다수의 청년들이 학생이나 근로자로 범주화될 수 없게 되었으며, 한 사람이 상이한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Stokes & Wyn, 2007).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호주의 청년 세대가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하며 유연한 근로자여야 하고, 여러 위험들을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Furlong & Cartmel, 2007; Wyn 2009a). Wyn (2004, 2007)은 청년들이 시간제 근무를 늘어나게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들이 의무 교육을 받는 기간의 마지막 두 해 동안 시간제로 학교를 다니면서 시간제 근로를 동시에 하거나 조기에 학교를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교육을 마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추세는 이전 세대가 누렸거나 밟았던 전통적인 성인기 이행양식이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전에 당연시되던 방식, 즉 청년들이 안정적 성인기를 향한 일련의 ‘단계들’ 을 거쳐, 의존에서 독립으로, 학업에서 취업으로 나아가던 성인기로의 직선적 이행은 후기산업 사회에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선형적 이행으로는 많은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 생활과 가정 생활, 전일제 교육과 시간제 근로 사이에 중첩되는 부분을 설명하지 못한다 (Dwyer et al., 2001). 아울러 Wyn과 White (1997)의 설명처럼 청년이나 성인기로의 이행이 연령에 의해 개념화되어서는 안되며, 아직 성인기에 다다르지 못한, 무엇인가 부족한 단계로 인식되어서도 안된다. 성인기 이행은 가족, 노동시장, 학교, 국가 등의 사회제도 속에서 청년들의 삶을 이루는 다양한 차원들이 형성되고 타협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화를 통해 청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지를 보다 현실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분명하고 제도적으로 정해진 경로를 따르는 청년들이 주류이고, 그렇지 않은 소수는

위기에 처해있으며 교정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는 청년 정책의 단순성과 선형성을 보여준다.

#### 4) 새로운 정체성의 구축: 개인의 책임 전가

지금까지 거시적 차원에서 청년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호주의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청년들이 삶의 여러 측면을 결정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기 산업 사회의 청년들이 당면한 도전과 과제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념을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에서의 새로운 성인기로의 이행은 학업으로부터 취업으로의 단순한 선형적 전환으로만 볼 수 없다. 이전의 세대가 누렸던 예측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Dwyer et al., 2005; Leccardi & Ruspini, 2006). 청년들은 전통적 사회 구조 (예. 가족, 일, 복지)의 붕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교육과 취업 사이의 ‘헐거워진 관계’ 등의 문제에 직면해있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특히 호주 복지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전통적 제도들이 청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었고, 국가가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림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이 개인의 책임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청년들은 복잡한 후기 산업 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해야 함을 알고 있다 (Beck & Beck-Gernsheim, 2002).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할 수 있으려면 자신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분명히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청년 스스로가 선택의 결정자이자 전략적이면서 성찰적인 주체로서 자신을 구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Kelly, 2006; McLeod & Yates, 2006; Wyn, 2009a).

그러므로 Dwyer와 그의 동료들은 (2005: 36) 청년들이 ‘삶을 위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계획하고 개개인의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압박이 커져

가면서 ‘집단적 정체성’에서 ‘개인의 자율성’으로의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한다. 또한 청년들의 삶에 관한 선택에 있어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앞세우는 담론은 ‘개인화(individualization)’의 과정으로 설명되었다 (Beck & Beck-Gernsheim, 2002). 이러한 개인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대한 전통적 방식(historical model)은 없어졌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활동적이고 독창적이며 전략적(active, inventive, and resourceful)’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Beck & Beck-Gernsheim, 2002: 23-26). 더욱이 이런 일상생활의 개인화는 집단의 이해와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 (Dwyer et al., 2003). Wyn (2009a: 9)의 설명처럼,

…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것과 잘 살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대한 책임에서 개인이 완전히 자유로운 적은 없었지만, 후기 현대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커지게 됨에 따라 성인기 이행에서 이러한 책임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었다.

개인의 책임과 선택 그리고 전략적인 주체에 관한 개념에는 교육, 일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새로 정립해야 할 필요뿐만 아니라 성인기 이행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구조적인(예. 교육비 절감, 정부 프로그램의 철폐,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문제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개인의 실패나 문제로 여기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Dwyer & Wyn, 2001). 성인기로 이행(예를 들어 주택 구입, 원하는 직업에서의 전일제 일자리 보유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청년들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다 (Furlong & Cartmel, 2007). Furlong과 Cartmel (2007)의 주장처럼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분석하게 됨에 따라 교육적·직업적 성취를 얻는데 놓인 구조적인 조건과 장벽은 은폐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구조의 중요성을 부정한 채 청년들을 개별화하고 고립시킴으로써 더 강화될 것이다 (Wyn &

White, 1997). 이 때 간과되는 부분은 구조적 요소와 개인의 역할 사이의 균형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구조와 행위자(agency) 사이의 잘못된 대립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청년들의 경험에 나타나는 이 2가지 중요한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 의존(self-reliance)이나 개인적 선택과 전통적 방식 사이의 “균형”에 대해 살펴본다 (Dwyer et al., 2001, 2005).

## 5) 요약

지금까지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거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시장과 교육에 나타난 급진적 변화와 그것이 청년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고찰했다. 교육의 의미를 노동인력의 새로운 기술과 지식 습득으로 한정시켜버린 경제주의적 견해를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경제의 필요에 교육정책을 맞춰왔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육 정책은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실제적인 필요와도 거리가 멀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의 본질, 청년이 충분히 생계를 꾸릴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교육과 일 이외의 다른 영역들을(웰빙, 사회적 관계, 영성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더욱이 “경로(pathways)”라는 은유는 고등교육 진학만을 강조함으로써 상당수의 호주 청년들이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20년간 진행되어온 중단연구인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를 살펴본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년 동안 호주의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교육, 일, 사회적 관계, 웰빙 같은 다양한 삶의 영역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짚어본다.

### 3.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

이 절에서는 청년 연구센터(YRC)의 라이프 패턴 중단연구를 활용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1970년 이후 출생한 호주 청년들이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이자 취업이 당연시될 수 없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최초의 세대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 (Dwyer & Wyn, 2001). 즉, 이 세대는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 때와 완전히 다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성인기로의 길을 떠나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했다.

앞의 두 절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환경, 예컨대 불확실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 의무교육 이후의 추가적인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교육을 평생 계속되는 경험으로 보는 시각 등을 제시했다. 임시직과 불안정한 고용이 늘어남에 따라 초래된 일터에서의 중요한 변화도 소개했다.

다양한 연구대상을 다루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적 연구에서는 하나의 차원만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례로 청년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과 그 역할 간 상호관련성을 모두 파악하지 않고 청년들의 신분을 그저 학생이나 근로자로 측정한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보다 정교한 이해를 위해 청년들의 다양한 역할들에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즉, 교육, 일 그리고 이 밖의 삶의 영역들 (예를 들어 여가,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웰빙, 건강) 사이의 긴장과 상호 관련성을 짚어보고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의 영역이 청년들에 의해 어떻게 경험되고 형성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를 설명한 후 사용된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이어 본 프로젝트로부터 도출된 개념들,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본다.

#### 1) 연구대상

지난 20년 동안 청년 연구센터(YRC)는 호주 청년들의 삶을 상세히 기록해왔다.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는 1991년에 시작된 중단연구다. 최초의 데이

터베이스는 그 해 중등교육을 마쳤던 29,155명의 참여자로 구성되었다. 그 이듬해 학교를 떠난 이후 그들의 행보를 추적 조사하기 위해 이들 참여자를 조사했다. 1995년 원래의 세트에서 10,985명의 대표 표본에게 1991년 이후 그들의 행보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얻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1996년 표본을 2,000명의 참여자로 줄여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및 지리적 위치와 관련한 대표성을 가진 표본으로 일관성을 유지했다. 또한 100명을 선정해 매년 개인 심층 면접을 포함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했다. 거의 20년 지난 현재에는 약 400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코호트가 남아 있다.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는 두 세대를 추적하는 독특성을 갖고 있다. 2005년 이후 이 프로젝트는 1988년 또는 1989년에 태어나고 2006년에 중등교육을 마친 호주의 청년들로 구성된 또 하나의 코호트를 추가하였다 (이 코호트는 대중 매체에서 소위 Y세대라고 불리운다). 본 보고서에서 전개되는 논의의 주된 초점이 앞선 언급된 코호트 (대중 매체에서 X세대로 지칭되는 세대)에 있긴 하지만, 두 코호트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패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05년 코호트 2에 대한 첫 조사에서는 중등교육 11학년에 재학중인 1,954명의 학생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 참여자들은 뉴 사우스 웨일즈주(New South Wales)와 빅토리아주(Victoria)에 있었다. 보다 광범위한 지리적 대표성을 위해 ACT 및 타스마니아 출신의 청년 2,023명으로 구성된 또 하나의 조사가 2005년에 실시되었다. 2007년, 2008년 그리고 2010년 두 집단을 합해 조사를 실시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30명과 5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표본소실로 인하여 현재에는 약 1,400명의 청년들로 이뤄진 코호트가 있다.

## 2) 연구방법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는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혼합적으로 (mix-method) 사용함으로써 많은 이점을 누렸다.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지나친 단순화나 예외적인 양상을 중요한 연구 결과로 오인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심층 면접자료를 통해 지난 20년간 청년들의 생활에 존재하는 모호성과 복잡성의 요소들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대중 담론에서 나타나는 일반화와 지나친 단순화를 넘어 호주 청년들 삶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미묘한 부분들을 그려낼 수 있었다. 또한 본 프로젝트가 종단 연구이기 때문에 우수한 분석을 할 수 있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개념의 중요성의 변화를 고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단기 연구("snapshot" studies)를 통해서서는 불가능한 부분이다.

혼합 방법론을 사용한 접근의 큰 장점은 한 가지 방법론만을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심층 면접을 통해 설문조사에서도 출되었던 특정 이슈를 보다 깊이 파고 들 수 있고, 개인적인 우선순위에 대해 훨씬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참여자의 선택과 행동의 숨겨져 있거나 예상치 못한 동기를 파헤쳐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설문조사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찾아내어 제시함으로써 심층면접에서 이야기되었던 내용을 재확인하거나 그것을 바꾸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더욱이 두 가지 기법에서 도출된 자료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였고, 참여자들의 생활을 보다 자세하게 그려낼 수 있는 반복적인 과정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이 연구는 20년에 동안 연구에 있어 참여적 접근법(participatory approach)을 취해왔다. 다시 말해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의견(active voice)’이 반영되었다. 호주의 교육과 고용에 관한 개략적이고 일반적인 데이터를 생산해낸 수많은 연구나 정책과는 달리 우리는 호주 청년들의 실제 경험과 그들의 삶에 비추어 정책의 기본 가정을 지속적으로 검증해왔다. 예컨대 많은 정책 문서에서 사용된 “경로”(pathways)에 대한 은유는 참여자들의 실제 포부와 선택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정책담론의 타당성을 실제 생활 경험에 비추어 검증하기 위해 질적 기법과 양적 기법을 활용하여 주거형태, 학업과 취업 상태, 웰빙과 건강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이 가까운 미래와

장기적 미래에 대해 어떤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 3) 주요 개념

20년에 걸친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주제 (conceptual themes)와 접근방법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변화가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궤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을 이해하는데 유용했다. 이전의 절에서 이미 청년들이 성인기로 전환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주제 몇 가지를 다뤄본 바 있다. ‘경로(pathways)’라는 은유와 사회적 책임에서 ‘개인의 자율성(personal autonomy)’으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 절에서는 호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에 담긴 보다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적 주제를 다룬다.

#### (1) 소셜 제너레이션 (Social Generation)

세대를 막론하고 청년들은 누구나 성인기로 이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생활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1970년대 이후 세대가 학교를 마칠 당시 직면한 독특한 사회 경제적 환경은 그들이 교육과 일, 삶에 부여하는 의미와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10년간 수행된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를 회고하면서 Dwyer와 Wyn (2001: 205)은 ‘위험한 세대적 변화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Dwyer와 Wyn은 1980년대 이후 서구 국가에서 일어난 극적인 사회 변화에 감안할 때 구세대의 경험을 통해 젊은 세대를 이해함으로써 인해 그들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manufacturers)로 보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와 분석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Wyn과 Woodman(2006, 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는 ‘소셜 제너레이션(social generation)’이란 개념이 과거와의 연속성뿐 아니라 새로운 생활 방식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Wyn과 Woodman

은 ‘세대’ 라는 용어가 학문 영역, 정책, 대중매체에서도 남용되는 바람에 이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예: X 세대, Y세대, 베이비붐 세대, 디지털 세대, 밀레니엄 세대, 그린 세대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청년기를 단지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겪는 과도기 정도로 보는 전통적 견해를 반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일례로 X세대나 Y세대 개념은 이들 젊은 층이 그들의 우선순위와 생활 패턴을 형성시키는 독특한 사회적 조건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Wyn et al., 2008: 14). 그러나 그러한 이름표를 붙이고 나면 세대 내의 다양성을 가리게(mask)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동질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지리적 위치에 따라 청년들의 가능성과 선택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계속 강조해왔다

아울러 Wyn과 Woodman (2006, 2007)은 소셜 제너레이션 접근법이 비단 학업, 취업 그리고 가정생활에서의 변화 추세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집단 간의 상이한 주관성(subjectivities)과 자신들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 젊은이들이 가지는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Wyn과 Woodman (2007: 375)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소셜 제너레이션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는 복잡해지고 변화된 성인의 지위를 탐구하고, 청년과 성인이라는 것이 현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람들의 자아정체성과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게 된다.

즉 소셜 제너레이션 접근법은 임시직 고용이 늘면서 1990년대의 노동시장에 끼친 변화 같은 사회적 여건이 사람들의 가능성을 결정하는(shapes and constrains) 하나의 틀로서 기능한다고 본다 (Wyn et al., 2008). 또한 이 접근법은 청년이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 가장 많이 좌우되는 집단임을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청년들이 사회에 대해 지속되는 의식의 형태(an enduring form of consciousness)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Wyn 및

Woodman (2007: 377)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청년들은 현재 전통적인 핵가족과는 다른 형태도 그들 삶의 하나의 가능성임을 받아들이며, 대다수의 부모가 그랬던 것과는 달리 다양한 삶의 형태가 현재 그들이 사는데 있어 오히려 가능성 높은 선택지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대다수 청년들이 두 명의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정 형태를 원치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전통적 가족구성은 이제 당연한 수순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하나의 옵션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런 인식은 관계에 대한 의미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한 세대이거나 동일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회를 갖거나 동일한 도전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다 (Wyn et al., 2008). 라이프패턴 연구와 다른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성별, 민족집단(ethnicity), 계급의 문제는 청년들의 가능성과 성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McLeod & Yates, 2006; Stokes & Wyn, 2007 참조). 요약하자면, 라이프패턴 프로젝트의 자료 수집과 분석에 사용된 접근법은 동일한 세대의 청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강조하는 고정관념이나 분류(labels)를 피하도록 고안되었다.

## (2) 성인기로의 이행 양상의 다양화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경로(pathways)라는 개념은 성인기 이행에 대한 매력적인 은유이며, 특히 교육 정책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최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시기별로 결정된 ‘단계’ 들 사이의 선형적 진행을 당연시함으로써 의무교육 이후의 진로에 대한 융통성 있는 틀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Abrahamsson, 1994; Cohen, & Ainley; 2000, te Riele, 2005). 게다가 교육과 직업에만 초점을 맞추면 성인기 이행의 다른 측면(예. 웰빙, 가정생활)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성공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 다양성을 놓칠 수 있다. 이는 “모두에게 들어맞는 하나의 방법(one size fits all approach)”이 있다는 가정하의 접근 방식이다. 그러나 라이프패턴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청년들의 주관성(subjectivities)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다시 말해 청년들이 자신들이 처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상이한 집단이 자신들의 가용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종단적 특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중등교육 이후 거처온 다양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1970년대 이후 (코호트 1) 세대는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비선형적 양상을 보였고, 가족과 사회적 관계가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다 (Dwyer et al., 2005, 2003). 중등교육을 마친 5년 후인 1996년의 청년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등교육 이수 직후 고등교육이나 추가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았던 연구 참여자의 80%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교육 이후 추가적인 교육을 받은 비율이 전체 연구 참여자의 90%에 달하는데, 이 중 중등교육을 마친 후 고등교육으로 바로 이행을 한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이런 식으로 청년들의 경로(pathways)는 공부를 중단하든가, 전공이나 교육기관을 변경한다든가, 학교를 떠나 취업을 한 후 다시 몇 년 후 학업에 복귀하는 등의 다양한 경로를 나타내었다 (참여자 중 적어도 50%는 한 가지 이상의 궤도변화를 겪었다). 고등교육에 진학한 코호트 2에서도 ‘표준적인’ 선형(linear)의 궤도를 따를 가능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대도시 이외의 지역 출신일수록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호트 2에서도 출된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삶의 역할을 균형있게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3) 새로운 성인기

성인기 이행이 선형적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경우 정책에서는 이를 불완전한 이행으로 간주해 왔는데, 왜냐하면 생애 단계가 기대된 수순대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서 나온 결과는 선형적 성인기 이행이 있다는 정책적 가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아울러 성인기 이행 시기가 연장되었다거나 청년기가 ‘정체’ 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 그리고 ‘사춘기’ 길어지고 있다고 간주하는 생각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반대로 우리는 청년들이 ‘새로운’ 성인기에 일찍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예컨대 16-17세의 나이에 코호트 2 중 약 60%가 학교를 다니며 일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80%가 중등학교에 다니던 마지막 해부터 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른 연구의 결과들도 청년들이 학교교육을 마치는 대로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의 결과와 일치한다. 예컨대 2007년 5월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15-19세의 호주 청년 가운데 77%가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고 52%는 취업 상태였다 (ABS, 2007). 이들 두 가지 활동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조합은 전일제로 공부하면서 시간제로 일하는 것이었다 (약 30%) (ABS, 2007). 또한 Alloway와 그의 동료들 (2004)의 농촌 청년의 중등학교 열망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점차 많은 청년들이 교육기관 재학 중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과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인해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두고 교사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취업상태의 청년에 대한 조사 역시 대도시의 청년들은 무려 13세에, 농촌의 경우 6세에도 취업이 되어 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다 (Stokes & Cuervo, 2009 참조). 이러한 이른 나이의 취업 때문에 청년들은 직장 내에서의 건강과 안전 문제서부터 법적, 금전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성인기에나 할 경험을 어려서부터 많이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새로운 책임과 도전에 직면한다. 청년들은 학교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을 접하게 되고,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생활을 관리하는 것을 긴장(tension)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 학교에서 근로자로서의 학생의 역할은 무시된다 (Stokes & Cuervo, 2009).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기간이 연장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일터에서 청년들이 겪는 ‘학교 밖의 학습 경험’ 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Wyn, 2009a: 18). 또한 학생을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는 관행은 정책이 청년들의 실제 경험을 뒤따라가지 못함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청년들의 경험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정책에서 청년에 대한 보다 광의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Martin, 2009; Wyn, 2009a). 이제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 관한 정책에는 이러한 ‘새로운 성인기’ 를 형성시키는 ‘점진적이고 균일하지 않으며 예측 불가능한’ 이행양상에서 나타나는 ‘이른’ 성인기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즉 이제는 청년기와 성인기를 중첩되는 단계로 보아야 한다 (Wyn, 2004: 12).

#### (4) 일(work)과 직업(진로, career)의 의미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1970년 이후 세대에 있어 직업(career)에 대한 새로운 의미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전 세대가 당연하게 여겼던 근로패턴이 현재 젊은 세대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다.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유연성 증가는 전일제 근로에 대한 기대 또는 은퇴 연령까지의 중단 없는 직업 경로에 대해 이전의 세대가 가졌던 가정을 바꿔놓았다 (Dwyer et al., 2005). 예컨대 20대에 코호트 1에 있던 참여자 가운데 18%만이 1개의 직업을 갖고 있었고 61%는 2개~4개, 그리고 21%는 5개 이상의 일자리를 거쳤다.

상대적으로 어린 청년들의 경우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로 유연성과 개인의 자율성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또한 직장에서의 ‘상향 이동’ 에 대한 열망은 ‘수평 이동’ 으로 대체되었고, 직업이 전일제 취업을 의미하던 이전 세대의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Wyn, 2004: 10~11). 1990년대 중반에 실시한 우리의 면접과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직업 전망에 대한 청년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

었다. Dwyer와 그의 동료들 (2005: 16)은 불확실하고 규제가 완화된 노동 시장에서 중등교육 이수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성과는 그렇게 분명하지도 않고 성과를 거두는 시간도 오래 걸렸다' 고 주장했다.

더욱이 청년들은 직업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궤도라기보다 '마음의 상태' 라는 주관적 개념으로 상징함으로써 윗세대와는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Dwyer et al., 2003; Wyn, 2004). 27-28세일 때 참여자의 적어도 1/3 은 경력을 쌓기 위해 반드시 일자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2/3는 인생에서 단 하나의 직업을 갖는 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표 IV-4>는 참여자들이 '직업(career)' 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IV-4> 다음 진술은 '직업' 에 대한 나의 생각과 매우 가깝다

(단위: %)

'직업'에 대한 진술	동의
내 일과 직업은 별개의 것이다.	35
직업이란 영구적인 전일제 일자리를 의미한다.	48
나의 일이 직업이 되려면 헌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88
직업은 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91
경력을 쌓기 위해 반드시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33
지속적으로 성취감을 주는 역할을 직업(career)이라고 할 수 있다.	81
지속적인 소득원	29
직업은 나의 전문영역에 직접 관련된 것이다.	59
평생 동안 단 하나의 직업만 갖는다는 것은 옛날 일이다.	67
오늘날 평생 직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스럽다.	25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는 종단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참여자가 23세이던 1996년부터 31세가 된 2004년 까지 그들의 근로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5>는 특정 시점에서의 그들의 당시 일자리와 직업에 대한 생각을 나타낸다.

<표 IV-5> 현재 일자리와 직업 사이의 관계, 1996-2004,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2	2004
나는 현재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32	49	54	65	68	65	73
현재의 내 일자리는 내가 원하는 직업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20	20	22	21	16	15	12
현재의 내 일자리는 미래에 내가 갖고자 하는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18	19	13	8	8	10	9
현재 일이 있지만, 어떤 직업진로를 가질 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	8	N/A	11	N/A	8	10	6

\* 일부 년도에는 추가된 범주 또는 조금 다른 범주의 질문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는 총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다 (N/A = 해당사항 없음.)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0대 초반에 적어도 1/4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분야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70년 이후 세대의 절반은 20대가 한참 지날 때까지도 그들의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자리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세대에 비교해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다.

직업에 대해 드러난 이러한 생각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복잡성은 청년들이 '개인적 선택' 과 '위험감수' 를 통해 그들의 길을 헤쳐 나가야 함을 뜻했다 (Furlong & Cartmel, 2007; Wyn, 2004). 이전 세대와는 달리 이 청년집단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옵션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일과 직업을 반드시 도달해야만 하는 특정한 목적지라기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하나의 여정(journey)' 으로 간주한다.

또한 치열한 노동시장을 헤쳐 나가기 위해 기술과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취득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됨으로써 청년들은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삶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narratives)를 만들어내야 했다. 따라서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에서는 청년들의 정체성에서 교육이나 직업보다 삶의 다른 영역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음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관계, 가정생활, 웰빙, 그리고 여가가 포함된다. 다음 절에서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영역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살펴본다.

### (5) 생활에서의 균형(balancing) 찾기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 결과는 지난 20년의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호주 청년들이 삶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취해왔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프로젝트 전반을 통해 웰빙, 사회적 관계, 가정생활 등 청년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요소가 등장했음을 강조해 왔다.

#### ① 건강과 웰빙

Wyn (2009b)은 전통적인 사회적 제도 (예: 학교, 일, 가족)의 붕괴로 인해 불확실성이 만연한 사회세계에서 건강과 웰빙이 점차 중요해졌다고 설명한다. 이전 세대에서 현재의 청년 세대에 이르는 사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의 유지는 사회적인 책임에서 개인적 책임으로 넘어 왔다. White와 Wyn (2008: 207)은 전통적 사회 구조가 무너지자 개개인이 그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몸(body)이란 그 자체로 선택과 행동의 결과다. 이는 양호한 건강에 대한 책임이 비단 좋은 것일 뿐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자 도덕적 책임으로까지 여겨짐을 의미한다. 개인의 책임인 건강, 신체단련, 웰빙에 대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사안이 되었다.

두 코호트의 참여자들은 교육과 취업에 쏟는 노력과 그들의 개인적 관계, 건강과 웰빙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일례로 30대 초반의 참여자들이 조금 더 어렸던 그들의 20대를 되돌아볼 때, 코호트 1의 참여자의 경우 그들의 삶에서 건강과 신체단련 (약 30%)을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 평가했다. 이는 심지어 근로와 직업 문제에 대한 불만족도 보다도 (약 15%) 더 높은 수치이다. 적어도 남성의 1/4 그리고 여성의 1/3이 건강문제를 언급하였다. 20대 초반의 코호트 2 참여자 역시 상당수가 건강 문제, 특히 생활의 균형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관계된 문제가 그들 삶의 주요 걱정거리라고 한다. 이러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은 두 코호트 사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대중매체가 이 두 세대(X세대와 Y세대)를 다르게 개념화하는 오류를 잘 보여준다.

더구나 삶의 균형 유지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러한 우려는 호주의 전국 통계의 수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호주가족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들의 다양한 책임과 역할에 잘 대처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1/5은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한 병리 증상이 있었고, 1/4는 높은 수준의 불안이나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약물을 사용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으며, 1/3에서 1/2에 이르는 청년들이 '심각한 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Smart & Sanson, 2005: 12). 호주보건복지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 청년의 1/4은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AIHW, 2007). 아울러 호주 보건복지연구소는 학업과 취업에 관련한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지적한다. 예컨대 학교를 조기 중퇴를 한 청년들 (35%)은 중등교육을 마친 청년들 (25%)보다 정신적 장애 비율이 높으며 실업 상태의 청년들은 취업 상태의 청년들보다 정신적 장애를 겪을 위험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

위에 언급된 양상은 학교-일터로의 이행에만 초점을 맞춘 성인기 이행에 대한 편협한 관점이 청년들의 삶의 다른 중요한 차원을 간과하였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교육의 목표를 노동시장의 요구사항에 제한하지 않고 건강

과 웰빙의 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청년들의 삶을 이루는 이러한 중요한 측면은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우선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를 통해 집중적으로 조명된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청년들의 삶에 있어 사회적 관계와 가족 관계의 중요성 증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 ② 사회적 관계와 가족 관계

청년들이 삶의 다양한 역할과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 앞에 놓인 선택지, 우선순위,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 성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Dwyer et al., 2003, 2005 참조). 코호트 1의 참여자를 조사하고 면접했던 20년 동안 그들이 해온 응답에 따르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그리고 개인적 인간관계(personal relationship)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예컨대 참여자들이 24세였던 1998에 그들이 삶의 가장 만족스러운 측면으로 언급한 것이 가정생활 (91%)이었고, 그 다음으로 인간 관계(86%)가 뒤를 이었다. 또한 20대와 30대 초반에 그들의 시간을 할애한 양상을 뒤돌아 보면서 연구 참여자는 그들의 직업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참여자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강해졌다. 가정과 인간관계 다음인 세 번째로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어한 부분이 건강이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코호트 2의 참여자들은 20대 초반에 이미 인간 관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20세가 된 2008년에 참여자들은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그들 삶의 가장 긍정적 측면으로 그리고 ‘절친한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두 번째로 꼽았다. ‘사회 생활’과 ‘스스로에 대해 깨달은 것’이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직업의 중요성은 이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가장 낮은 의미부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두 세대가 공유하는 관심사는 변화했다기보다는

연속적임을 암시한다. 개인적 삶과 인간관계를 중시한 점에서 상당한 일관성이 나타나며, 흔히 청년들을 단지 물질적 욕망에 의해 이끌리는 존재로 보는 시각을 반박한다. 게다가 두 코호트의 참여자는 그들의 20대 초반 당시 ‘안정적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인생에서 중요한 것으로 보지만 ‘많은 돈을 번다’는 항목은 우선 순위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반대로 청년들은 직업에 대한 그들의 가치관과 유사하게 ‘능력 개발’과 ‘자아 실현’에 관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가족으로부터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시간 경과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대 간 갈등보다는 세대 간 결속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청년들은 가족의 지원을 통해 구조적 요인의 영향력을(예, 노동시장의 임시직화, 실업, 저임금) 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의 지원 측면에서도 일부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요한 차이와 불평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 4) 요약

본 절에서는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에서 제기된 중요한 개념적 주제를 다루었다. 이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개인적 환경에서의 청년들이 갖게되는 경험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을 넘어 상이한 삶의 영역을 받아들임으로써 개인의 총체적인 자아(holistic self)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삶에 내린 주관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근의 호주 청년들은 일터에서의 직업적 성취보다 건강과 웰빙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관계 및 가족 관계와 같은 영역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젝트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다양한 역할과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이를 관리하며 그들의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 한다. 이는 청년 세대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

한 중대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접근방식을 취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층에 따라 그들이 가진 선택지와 결정에는 분명히 차이가 발생한다. 다음 절에서는 젠더와 지리적 위치라는 렌즈(lenses)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와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웰빙의 개념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4. 젠더(gender)와 호주의 성인기 이행

지난 50년 동안 호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새로운 생활양식, 기대 그리고 우선순위의 등장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했다고 해서 사회적 분업의 측면에서 젠더의 중요성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젠더와 관련된 새로운 양상은 젠더와 사회경제적 지위 사이의 복잡성을 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0년대의 고등교육 보편화 움직임과 대다수의 호주 청년들이 적어도 어떤 형태이든 중등교육 이후에 추가적인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두 집단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 젊은 여성,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의 젊은 여성은 지식 및 서비스 부문에 관계된 새로운 도시 경제 체제에서 교육 기회와 취업의 약속을 거머쥐었다.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에 일찍이 진입하고자 했던 집단의 경우, 학력 (특히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의 젊은 남성)이 높지 않다면 기회는 점차 줄어들어가는 실정이었다. 특히 두 집단의 궤적은 1990년대 호주의 변화하는 성별 성인기 이행(gender transition)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보여준다.

이전의 절에서는 지난 50년에 걸쳐 성인기 이행의 변화를 야기했던 정치경제적 전개상을 제시했다. 성별에 따른 변화 양상 및 결과 분석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정부 정책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와 조건에 대응해가면서 다양한 사회적 현실을 형성해간다. 그 예가 1990년대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급격한 증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현실은 일터나 가족 같은 제도 내에서 존재하던 당연시된 관행과 사람들의 기대 사이에 격차(gap)를 야기하였다.

이 절에서는 스웨덴의 경제학자 Gøsta Esping-Andersen이 제시한 개념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 지난 20년에 걸쳐 호주에서 발생한 격차(gap)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논문 ‘불완전한 혁명(incomplete revolution, Esping-Andersen, 2009)은 1990년대 고등교육을 받았던 여성의 취업과 가정 생활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집단은 전례 없는 규모로 고등교육과 취업에 참여함으로 극적인 변화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다른 측면은 그만큼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근로자’ 라고 하면 당연히 남성 가장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과 관련된 의무는 근로 여건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여전히 남녀 모두 일상적인 가사일과 육아의 실질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절에서는 라이프 패턴 참여자들이 20대 초반에 가졌던 그들의 꿈과 희망을 보여준다. 이 당시 많은 참여자들은 고등교육을 마치고 경력을 쌓고자 노력하면서 결혼을 하거나 장기간의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집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대한 분석에서는 남녀의 유사성, 특히 사회경제적 집단 내에서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그 다음 절에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 10년에 걸친 그들의 궤적을 설명한다. 이 단계의 분석에서는 남녀 사이의 경로(pathways)가 갈리기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른 불평등의 고착을 중점적으로 규명해본다.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에서는 성인기 이행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ongoing process)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책 지향적인 청년 연구 내에서는 성인기 이행의 특정한 지점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21세기의 생애과정이 갖는 역동적인 특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라이프 패턴 연구에 따르면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심화학습 또는 근로)으로, 그리고 학업에서 전일제 취업이라는 ‘전통적’ 이행 외에 매우 중요한 이행 지점이 있다. 남녀에게 있어 대체로 공평한 결과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이행 지점은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이다. 이 시점 이후부터는 다른 이행(직업의 공고

화, 결혼 또는 장기간 파트너십 및 부모의 신분에 들어서는 것) 양상에서 남녀의 삶의 방식과 기회에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녀에 있어 이행 시점이 갖는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 Esping-Andersen처럼, 우리는 1990년대의 교육 혁명이 호주 정부, 일터 그리고 개인들에게 미완의 과제를 남겼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이 여성의 성인기 이행 경로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그들의 학력이 노동시장에서 활용되기 바랐지만, 여성들은 가사일과 직장일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에 따른 양립 불가능 요구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교육에 투자한다고 해서 노동시장 참여의 측면에서 확실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던 집단, 특히 젊은 남성의 경우 그 불리함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1) 교육 및 취업에서의 새로운 젠더 패턴

이전 세대의 교육 참여 수준과 비교할 때 1990년대 초반 고등교육에 진입한 호주 청년의 수적 팽창은 혁명적이었다. 1976년에는 20대의 청년들 중 12%만이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었다. 2001년에 그 비율은 23%까지 증가했다. 특히 성별에 따른 변화는 더욱 의미심장하다. 1976년에는 20대 여성 중 9%만이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었던데 비해 남성의 경우는 그 비율이 16%에 달했다. 2001년에는 여성이 이를 따라 잡아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20대의 남성의 비율은 23%, 여성의 비율은 24%였다 (ABS, 2005).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1990년대 호주정부는 모든 사람의 고등교육 진학을 권장하였다 (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 National Board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1990).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 비영여권 출신자, 장애가 있는 사람, 농촌과 벽지 지역 출신의 사람 뿐 아니라 여성들은 고등교육에 진입하는데 불리했다. 그러나 1991년, 12학년울 졸업한 중등교육 이수자를 보면 남성 (66%)보

다 여성 (77%)의 비율이 더 높았다 (DEET, 1993B).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호주 정부의 정책적 우선 순위는 교육 개혁을 통해 모든 호주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와 기회를 ‘동등하게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다 (고용, 교육 훈련부 및 고용, 교육, 훈련 국가 위원회 1990: 6). 학생 인구의 구성이 호주 인구의 다양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라이프 패턴 데이터에 따르면 젊은 여성은 이런 요구에 부응했다. 1992년, 18-19세이던 본 연구의 여성 참여자의 88%와 남성 참여자의 86%가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했다. 호주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는 라이프 패턴 연구 참여자 부모님의 58%가 어떠한 형태의 고등교육도 이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이는 Andres가 수행한 캐나다인 생애 경로(Paths on Life's Way)라는 종단연구에서 도출된 수치와 비교될 수 있다. 캐나다 연구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부모님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등교육을 마쳤다. 모친의 경우 20%, 부친의 경우 27%가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을 취득하였다. 이에 비해 라이프 패턴 연구 참여자의 부모 가운데 모친의 15%, 부친의 21%만이 학사 또는 그에 준하는 학위를 소지했다 (Andres & Wyn, 2010: 98).

2001년까지 호주 전역에 있어 고등교육 참여에 대한 성별 격차는 좁혀졌고, 2000년대 중반에는 남녀의 진학률과 취업률이 비슷해졌다 (Andres & Wyn, 2010). 그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그들이 취득한 학력을 활용하는 것을 중요시 했다.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의 코호트 2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중등교육을 졸업한 후 첫 해인 2007년에 추가적인 교육을 위해 진학을 하지 않은 참여자는 28%에 그쳤다. 진학을 하지 않은 이 집단은 진학을 한 집단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주요 대도시 이외 지역 출신이 많았는데, 성별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 다음 해인 2008년에는 학생이 아니었던 사람 중 대다수 (83%)가 공부를 시작했다. 따라서 2008년까지 (19-20세) 거의 모든 참여자가 고등교육을 포함한 추가적인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8%에 불과했다.

연구 참여자가 24세가 되던 1998년에 우리는 라이프 패턴 참여자 (코호트 1) 48명을 상대로 그들의 희망과 미래의 꿈에 대해 면접을 진행했다. 그들 중 절반이 개인적 안정과 고용 안정 그리고 안정적 수입에 대한 바람과 같은 미래에 대한 소박한 희망을 이야기 했다. 그러나 28%는 그들의 가장 큰 미래 목표가 취업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는데, 이 집단에는 젊은 남성보다는 젊은 여성의 수가 조금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1998년의 설문지 조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V-6>은 24세를 기점으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취업에 주력하는데 대한 명백한 차이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sup>13)</sup>.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젊은 여성 집단은 직업을 가지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 성향이 다른 집단보다 강했다. 이 여성 집단의 35%가 교육적 성취와 상관없이 그들의 커리어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입장을 피력한 남성의 비율은 27%에 그쳤다. 직업을 가지는 것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두는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학력이 학사 이하인 젊은 여성이었다. 흥미롭게도 여성 집단은 동년배의 남성 집단보다도 자녀를 두는 것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부모가 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경향이 약했다 (대졸 이하 25%, 대졸여성 23%).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38%)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36%)보다 결혼이나 파트너와의 동거에 높은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았고, 두 집단 모두 동년배의 남성 집단보다 이를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육을 받은 남성의 경우 27%,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남성의 경우 30%).

---

13) 표에 제시된 라이프 패턴 데이터 분석 및 이 절의 통계수치는 Lesley Andres가 수행한 작업의 결과에서 도출하였다. 호주의 라이프 패턴 데이터와 Andres의 캐나다 생애 경로 데이터를 비교한 전체 분석은 Lesley Andres와 Johanna Wyn의 세대의 형성: The children of the 1970s in Adulthood, Toronto University Press, 2010를 참고하면 된다.

<표 IV-6> 성별 및 학력별 개인적으로 증시한 영역(1998년 24세)  
(단위:%)

		여성 우선순위		남성 우선순위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대졸이하	안정된 일자리 얻기	3	61	4	55
	직업으로의 근로 참여	4	23	5	27
	많은 돈 벌기	3	16	4	26
	내 집 마련	14	44	8	45
	결혼 또는 파트너와의 동거	16	36	14	30
	자녀 갖기	32	25	36	12
	가족 관계	3	62	1	43
대졸이상	안정된 일자리 얻기	1	65	1	51
	직업으로의 근로 참여	2	35	2	27
	많은 돈 벌기	8	12	9	21
	내 집 마련	12	40	14	38
	결혼 또는 파트너와의 동거	10	38	16	27
	자녀 갖기	26	23	30	15
	가족 관계	1	65	0	51

연구 참여자가 22세가 되었을 때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조사했다. 그들 중 44%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불행할 것이라고 답했다(남성의 39%, 여성의 46%). 이 시점에서 여성의 30%가 '5년 안에 결혼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 이라고 응답했으며, 23%가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실제로는 여성 코호트의 1/3이 결혼하는데 13년이 걸렸다. 1996년에는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바람에 대해 물었다. 여성의 48%, 그리고 남성의 44%가 자녀가 없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것' 이라고 응답했다.

2006년 코호트 2 (18세)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조사했다. 10명 가운데 7명의 참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다면 불행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기서 여성일수록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불행이 약간 더 클 것이라고 응답되었다. 또한 약 절반의 참여자가

그들이 25세에 결혼한다면 만족스럽거나 매우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남성의 52%, 여성의 58%). 그러나 4년 후 결혼하거나 부모가 된 참여자는 1%에 그쳤다.

우리는 코호트 1의 연구 참여자가 25-26세이던 1998년에 실시되었던 면접을 통해 그들이 일(work)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Rachel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주된 우선순위라 하면 나의 경력과 일자리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오랫동안 하고 싶은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1년쯤 있다가 다른 일로 옮겨 갈 수도 있어요...나는 근로 환경이 계속 좋아지길 원하며 현재의 일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아마 새로운 직업의 길로 쉽게 옮겨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조만간 정착하고 싶지만, 그 점에 대해선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거예요. 그래도 내 나이에 비하면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나는 장기주택구입용자도 받았고 차도 있고, 일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991년 중등학교를 마친 뒤 곧장 공부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던 Katrina는 교육이 보다 더 나은 삶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1998년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직업·기능훈련과정) 코스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인 교육 과정을 밟으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아직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과정은 어떨까 또는 사회복지 같은 과정은 어떨까 생각하며...오랫동안 공부하지 않았고 공부엔 소질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겠죠... 요즘엔 일자리를 얻으려면 교육이 정말 필요해요...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별별 일들을 해왔지만 이젠 할 수 있다면 취업을 하고 싶어요. 이 교육을 잘 해내고 싶어요. 이걸 실업 대신 생산적인 직업

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나의 기회같아요. 꽤 오랫동안 실업 상태였고 계속 이 상태로 머물까봐 두려워요. 또 앞으로는 집을 벗어나 내 가족이 항상 나를 돌봐야 할 필요 없이 좀 더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나에게 있어 공부는... 맞아요. 백수상태를 벗어나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돈도 많이 받으려는 수단이에요..

동년배 남성의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음 예 또한 1998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면접에서 나온 답변이다. 매트는 선적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카메론은 수리공으로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매트: 저는 회사에서 선박사무원으로, 창고관리원으로 일하고 있고 또 경리 업무도 맡고 있는데 멜버른 북서부에 본사를 둔 꽤 큰 회사입니다. 그런대로 괜찮아요. 말단에서 승진하고 좀 좋은 경험을 얻려고 해요. 이 일을 진정으로 오랫동안 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직원들을 잘 대해주지는 않습니다. 이곳은 작업장 안전 광고에 나올 만합니다. 전 이미 몇 건의 지게차 “사고”를 봤는걸요. 집이나 더 나은 차를 장만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싶습니다. 저는 직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기서 일하는 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승진을 통해 옮겨가는 것입니다.

카메론: 별 다른 일이 일어난 것도 없고 열심히 일하면서 남의 눈의 띄지 않고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모으고 있어요. 현재는 친구와 어떤 개발부지에 투자할까 살펴보는 중인데 이것에 대한 확신은 크게 없습니다. 아직 부모님 집에 사는데, 그게 좋습니다. 렌트비도 절약하고 식료품과 청구서 아끼는 데 보탬이 되고 집 주변에 해야될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줍니다. 정비일을 하는 시간은 어색하고 익숙해지질 않습니다. 때로 쪽 20시간을 일하기도 하는데 그러곤 3일을 쉽니다. 그게 제 수면에 영향을 정말 미칩니다만, 초과근무가 참 좋기 때문에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선순위는 내 일에서건 다

른 것에서건 돈을 버는 겁니다.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의 결과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 예전의 젠더 양상이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얼마나 열렸는지를 드러낸다. 젊은 여성들은 특히 교육에 참여하고 적당히 편안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경력을 쌓고자 노력하면서 이러한 기회에 대응한다. 실제로 이 세대가 획득한 학력자원은 성별을 놓고 볼 때 놀랄만한 평등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7>은 28세가 된 2008년까지 다양한 배경 출신의 참여자들 중 상당한 비율이 준석사 학위 또는 그 이상을 성취했음을 보여준다.

<표 IV- 7> 28세 성별, 부모학력별 교육 성취도.  
2002년까지 획득한 최고 학력

(단위: %)

	부모학력이 대졸미만		부모 중 1명 이상 대졸	
	여	남	여	남
무역 자격증	1	9	2	6
TAFE	5	4	6	0
대학 수료증	6	8	4	14
학사 학위	13	12	12	17
준석사 학위	42	36	53	34
석사 학위	3	4	7	6
박사 학위	2	1	2	3

<표 IV-7>은 부모의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동년배의 남자와 비교했을 때의 여성의 학력 정도를 나타낸다. 가장 높은 학력을 달성했을 것 같은 집단은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 모두가 대학 학위를 갖는 가정 출신의 젊은 여성이다. 이는 계급에 기초한 교육 성취의 양상이 지속적이기는 하지만 그 패턴이 강력하지는 않음을 나타낸다.

## 2) 성인기 이행 경로(pathways)의 다양화

1990년대에 남녀가 그들의 학력에서 성취했던 평등은 초기에는 고용에서의 평등으로 이어질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1998년 그들이 24세가 되었을 때, 고용 양상에서 남녀 사이의 차이는 <표 IV-8>과 같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결국은 고용의 남녀차이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고등교육 또는 대학 학력이 없는 젊은 남성은 실업 상태일 가능성이 가장 컸고, 여성은 남성보다 그들의 1차적인 일로 가사와 관련된 책임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더 컸으며, 동년배의 남자 집단보다 시간제 근무(part-time job)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컸다.

<표 IV-8> 1998년, 24세 당시 또는 가장 최근의 일자리,

(단위: %)

	여			남		
	No PS	Non-uni	Uni	No PS	Non-uni	Uni
비정기적 유급직	17	18	15	13	13	17
실업, 구직활동	1	6	4	7	7	4
실업, 구직 활동하지 않음	1	6	4	0	0	6
시간제 근로	11	6	10	9	7	6
전일제 근로	51	58	64	67	68	63
가족/가정 책임	2	3	2	0	0	1
자영업	3	0	0	2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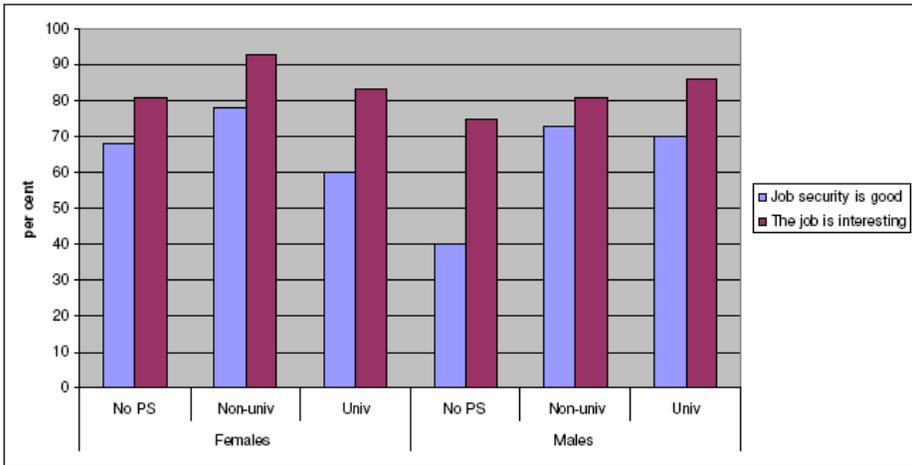
\*No PS = 고졸. Non-unIV = 대학 외의 직업교육 이수. Univ = 대학졸업

이후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이해하는데 있어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청년들의 궤적을 시간경과에 따라 다양한 이행 시점이 발생하는 계속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청년연구조사에서는 ‘학업에서 취업으로의 이행’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을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

연구 내의 이러한 경향에 대한 논의는 Wyn & Woodman, 2006 을 참조). 라이프 패턴 데이터에 따르면 청년들이 일단 취업을 했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 발생한 일들보다 그들의 궤도, 경로 그리고 성인기 생활 양상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것 같다.

1990년대 초반에 성취된 교육적 평등이 일터에서의 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분석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이수한 여성들은 직업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을지라도 그것이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 실제로 2002년 28세인 그들을 면접할 당시 근로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의 여성일수록 ‘매우 힘들었다’는 대답을 더 많이 했다. 그 다음으로 ‘매우 힘들다’는 것을 가장 많이 깨달았을 것 같은 집단은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의 젊은 남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여성은 그들이 일터에서 성취한 것에 높은 만족을 표현했다. 그러나 대학 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의 40%가 24세에 (1998년) 중등교육을 졸업하면서 갖게 된 진로계획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말했다. 한편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젊은 여성의 31%만이 그들의 진로계획이 여전히 변치 않았다고 답했다. 24세에 세운 진로계획이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은 대학 교육을 받은 젊은 남성(45%)으로 나타났다.

성별격차는 근로 경험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명백해졌다. 1999년 25세가 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조사했다. [그림 IV-5]에서 보듯, 학력성취에 따라 남녀 사이의 차이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Univ = 대졸학력 No PS = 고등교육 없음. Non-univ = 대학 이외의 교육이수.

[그림 IV-5] 1999년 25세 시 성별 및 학력별 근로태도, (%)

일자리 안정성이 높다는데 대해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남성의 40%가 동의한 데 비해 고등교육을 받은 남성의 70%가 동의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패턴은 완전히 달랐다. 25세까지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의 68%,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의 60%가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가졌는데 이는 교육에 소비한 시간 및 경력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긴 것을 반영한다.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남성은 그들의 일이 재미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가장 적었는데 이는 저학력 남성의 일자리가 단순기술직임을 의미한다. 대학 외의 고등교육 훈련을 이수한 남녀에 해당하는 수치가 반영하는 사실은 그들이 훈련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자격을 획득했다는 점이다. 대학교육을 받은 참여자는 그들이 만족스러워하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근로 조건의 차이는 고등교육을 받은 남녀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는 호주의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급속하게 열악한 처지에 놓이고 있는 집단은 학력이 낮고 고된 일이나 육체노동 또는 단순노동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다. 학력이 낮은 젊은 여성의 경우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획득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문에서는 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가능케 하는 일자리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

라이프 패턴 참여자의 근로 경험 및 취업 궤적에 관한 계속된 분석에 따르면 그들의 목표 도달은 결코 기대만큼 쉽지 않았다. 직업이동률은 중등교육을 떠난 10년 후에도 여전히 높았다. 라이프 패턴 참여자는 중등교육을 떠난 지 14년이 되어서야 직업 안정성이 큰 일자리에 안착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별에 기초한 경로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002년 시간제 근무는 여성(30%)이 남성(17%)의 약 2배에 달하고 일자리가 영구적이거나 연장 가능하다고 응답한 남자는 85%였는데 반해 여성은 72%였다. 고등교육을 이수한 모든 여성 집단을 통틀어 여성은 동년배의 남성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10% 더 적었다.

<표 IV-9>는 30세에 성별 고용상태가 고착화됨을 보여준다. 대학 학위를 받은 여성이 대학 학위를 받은 남성보다는 전문직에 고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클 수 있지만, 관리직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남자보다 더 적었다.

<표 IV- 9> 2004년 30세일 때 고등교육 이수 상태에 따른  
현재 또는 가장 최근의 일자리 (ANZSCO)

(단위: %)

	여			남		
	No PS	Non- uni	Uni	No PS	Non- uni	Uni
노동자	2	1	0	7	2	0
기계공 및 운전자	0	1	0	10	3	0
판매직원	5	4	3	7	6	0
사무직 및 행정직	34	6	10	12	12	10
지역사회 및 개인 서비스직	10	9	4	10	5	2
기술자	2	6	3	12	18	12
전문직	39	54	72	33	40	67
관리자	8	9	8	10	14	10

\*No PS = 고졸. Non-univ = 대학 외의 직업교육 이수. Univ = 대학졸업

Andres와 Wyn (2010)이 실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대학교육에 기울인 교육적 투자는 남성의 투자와는 달리 ‘성과가 없는(not paid off)’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여성들은 처음에는 전문직 취업을 추구하며 직업 획득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던 그룹이었다. 그들은 호주에서 이러한 선택을 당연하게 고려할 수 있었던 최초의 세대였다. 그러나 덴마크,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기타 나라에서의 가정생활과 고용패턴에 관련해 Esping-Anderse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Esping-Andersen의 분석에 따르면 전문직 여성은 직장과 부모노릇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호주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또한 이런 선택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의무교육 이상의 심화·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청년들의 상황은 그중에서도 가장 나쁘다. 그들의 경로는 그들이 학교를 떠나 단순기술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뛰어든 순간부터(심지어 학교를 떠나기 전부터도), 고학력 동년배들보다 훨씬 이른 나이부터 복잡해졌다. Andres와 Wyn의 호주 및 캐나다 청년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 이 집단은 전체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8년, 28세가 되었을 때 고등교육 학력이 없는 젊은 남성이 그들의 교육 성취에 가장 크게 불만족했고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그들의 건강과 신체단련에 대해 가장 걱정했다. 이 젊은 남성들은 가족의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가장 적었고 노동 시장에서도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 2004년 30세가 되었을 때 고등교육 학력이 없는 남녀는 일터에서 단순사무 및 행정직에 집중되었으며 고등교육 학력이 없는 남성의 경우 주로 노동자로 일했으며 일부는 사무직 및 행정직에 근무하기도 했다. 이 집단의 남녀 모두 그들의 심신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현할 가능성이 가장 컸다. 이 단계에서 고등교육 학력이 없는 여성의 20% 그리고 남성의 32%가 그들의 직업에 불만족을 표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은 참여자 가운데 직업에 대한 불만족은 각각 5% 그리고 12%였다.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남성은 32세까지 여전히 부모님 집에서 동거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또한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적었다.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남성의 상황은 호주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 학력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고등교육 학력 없이도, 이전 세대에서도처럼 육체노동으로도 잘 살 수 있기를 기대했던 이들 젊은 남성그룹은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유복한 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물질적 자원 없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정면으로 부딪혔던 것이다.

### 3) 성인기 이행에서의 성별 간 불평등

라이프 패턴 데이터에 따르면 학력의 측면에서 양성 평등이 보이는 듯 하다가 참여자들이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부터 불평등의 양상이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은 대체적으로 일터에서 그들의 교육경력을 활용하기를 기대했지만, 많은 이들은 그것이 ‘매우 어려움’을, 특히 전문직종에 진입하려는 이들에겐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면접에서 그들이 직장일과 개인적인 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때 부딪혔던 난제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코호트 2 (현재 22세)의 초기 자료는 일과 개인 생활 영역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때 생기는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호주에서의 노동 강도는 점차 증가했다. 1995년 한 연구에 따르면 피고용인의 28%가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Morehead et al., 1997). 이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부모 가정에서 전일제로 일하는 어머니의 70%가 항상 또는 자주 분주했고 아버지의 56% 그리고 부양 자녀가 없는 여성의 52%가 바쁘다고 응답했다. 라이프 패턴 참여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함에 대한 우려를 통해 노동 강도를 표현했다 (Wyn et al., 2008). 남녀 모두 일과 삶 사이의 균형 부족으로 인한 압박감을 표현했지만, 특히 여성은 일과 삶 중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부담이 더 컸다. 라이프 패턴의 여성 참여자 중 한 명은 2002년 면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비석에 어떤 글이 새겨지기를 원할까요? ‘굉장한 커리어우먼?’,  
아니면 ‘가족을 돌보는 사람?’

36세 당시 자녀가 있는 여성의 16%만이 전일제 일자리에 고용되었고, 남성의 경우는 88%였다. <표 IV-10>은 부모의 역할에 관계된 고용 현황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보여준다.

<표 IV-10> 2009년 36세 시 자녀유무에 따른 고용 상태

(단위: %)

	자녀있음		부양자녀없음	
	전일제 근무	파트타임 근무	전일제 근무	파트타임 근무
남	88	0	93	2
여	16	47	81	18

결혼 여부를 살펴보면 그 차이는 훨씬 커짐을 볼 수 있다. 2009년 기혼남성의 94% 그리고 기혼여성의 20%만이 전일제 근로였다. 기혼남성이 시간제 근로로 일한 경우는 없었고 기혼여성의 45%는 시간제 근로였다. 표 11은 이러한 양상을 나타낸다.

<표 IV-11> 2009년 36세 시 결혼 상태에 따른 고용 상황

(단위: %)

성별	결혼		미혼	
	전일제 근무	파트타임 근무	전일제 근무	파트타임 근무
남	94	0	82	3
여	20	45	73	20

고용에서의 이러한 성별 격차는 그들의 노동력 참여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낸다. 남녀의 불평등한 고용현황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의 결과를 고려할 때 한층 극명해진다. 2009년 대학교육을 이수했던 남성의 90%가 전일제 직업을 얻은 반면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의 38%가 전일제 직업을 얻었다.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은 그 어떤 집단보다

도 근로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가장 컸다.

대학교육을 이수한 여성이 경력을 쌓고 전일제 근로에 참여하기를 열망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근로 상황이 ‘녹록치 않음’ 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컸고, 학력 취득을 통한 기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근로 현장의 현실에 맞섰다. 학력을 높임으로써 호주 일터에서의 다양성이 구현되리라는 목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 4) 요약

학력을 높이는 것은 모든 청년들의 평범한 희망이 되었다.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라이프 패턴 데이터는 1990년대 호주 청년들 중 전례없이 많은 수가 고등교육에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가장 젊은 세대로부터 나온 데이터일수록 대다수가 심화 또는 고등교육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며, 고등교육 학력 획득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젊은 여성의 경우 특히 이전의 세대가 만들어놓은 성별 장벽을 해체할 수 있는 기회에 도전했다. 중상층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젊은 여성들은 서비스 및 지식 부문으로 이뤄진 신흥 도시 경제체제에 들어가고자 고등교육 기관 및 대학에 입학해 학력을 갖추었다.

라이프 패턴의 중단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학력의 취득은 대다수의 참여자에게 만족스럽고 즐거운 근로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학력을 취득하지 못했던 참여자의 경우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이들 가운데 고등교육 학력이 없는 젊은 남성이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또다른 성별 패턴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고등교육에 성심껏 임했다 하더라도 남녀의 일터에서의 경험 차이는 그들이 20대를 거치는동안 분명해졌다. 그들이 30세에 이르자 대학교육을 받은 남녀 사이의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대학 교육을 받은 기혼남성은 모든 집단 중 전일제로 일할 가능성이 가장 컸고, 대학 교육을 받은 기혼여성의 경우 그럴 가능성이 가장 적었다.

조사 기간 동안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이 했던 진술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극명하게 나타낸다. 부모가 된 여성은 노동 참여를 줄이거나 아예 그만 둬서 일과 가족의 균형이라는 난제를 해결하면서 양성 평등은 저만치 물러갔다.

Esping-Andersen은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이러한 인구 집단은 ‘불완전한 혁명’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여성 집단이 당면한 새로운 고용패턴은 노동시장 및 가족 정책의 새로운 양상과 일치되는 바가 없다. 그 결과 사적영역에서 변화된 것은 없는 채로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일 그리고 낮은 출산율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이 코호트의 경험들은 총체적 개념화와 경험적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여성의 교육 수준 변화 그리고 고용 기대에 대한 변화는 사회의 다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Esping-Andersen은 변화하는 여성의 지위를 ‘혁명적인 격변의 근원’으로 보고 (2009:1)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회의 본질을 분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Esping-Andersen의 주장을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더 나은 젊은 여성의 전례 없이 많은 수가 전문직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변화가 균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같은 극적인 변화의 결과가 다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직장 정책과 가사노동의 구조는 과거에 발목잡혀 여전히 가정친화적이지 않으며, 부실한 영·유아교육, 그리고 가사일의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에게만 맡기는 사회적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출산과 커리어를 양자택일해야 했고,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추세다.

또한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던 이들이 겪은 어려움을 강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들의 경로는 그들의 동년배들과 달리 일찍이 갈라져나와 불안정한 단순 기술직에 종사하며 ‘뚝뚝 못하는(stranded)’ 신세로 남겨지게 되었다. 또한 이들의 상황은 교육 및 고용 정책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며, 개개인에게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이행 시점(multiple transition points)을 인식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5. 농촌 성인기 이행의 다양성

농촌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은 해당 지역사회의 고등교육 기회 및 고용 기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교육 및 근로 여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청년들은 농촌 커뮤니티를 떠나야 할 필요를 느낀다. 따라서 그들은 지역사회를 떠나 이주할 것이냐, 혹은 이미 줄어들고 있는, 특히 농업분야와 같은 불확실한 농촌의 노동시장 구조에 남아있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게다가 농촌의 불충분한 인프라 (대중교통 수단 부족)는 지역사회에 머물고자 하는 청년들의 기회마저 제한하고 있다.

농촌 커뮤니티는 자유와 안전의 공간이자 사회적으로 동질적이며 이상적 공간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정반대로 많은 농촌 커뮤니티는 이질적이며 특히 청년들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농촌 청년들에게 불확실성의 공간으로 다가온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청년들이 ‘기회 부족’의 개념을 ‘자유 부족’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Alloway et al. 2004, Cuervo 2009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농촌 지역이 고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해안가 지역 (부유한 은퇴자들이 거주하거나 여름 휴가지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특히 광산<sup>14)</sup>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성장을 경험했다. 일례로 광산 도시는 독립적 생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임금의 장기 고용을 포함해 청년들에게 여전히 학업에서 취업이라는 전통적으로 안정적 이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골 지역 중 하나다.

이 절에서는 농업 지역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청년들의 경험과 그 지역에 머물기로 결정했던 이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펴보고, 농촌의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것의 어려움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서 농촌청년의 상이한 선택과 농촌 청년의 대도시로의 이주 문제를 포함한 고등교육 접근에의 장애물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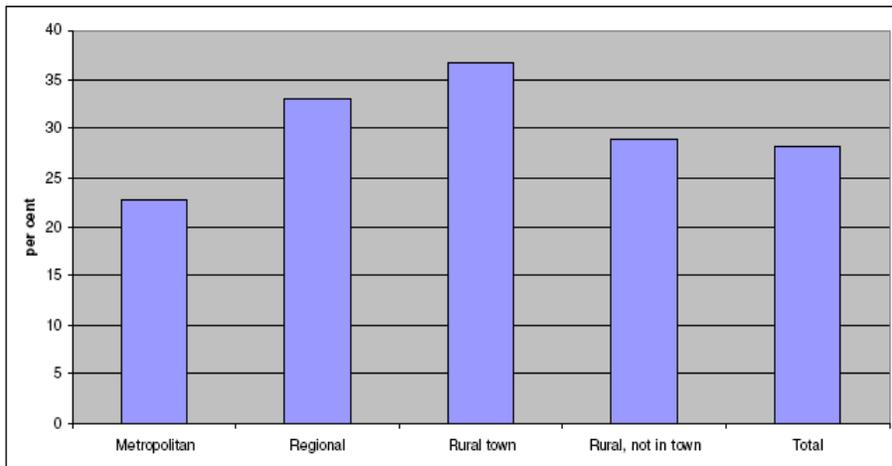
---

14) 몇몇 참여자가 퀸즈랜드와 호주 서부로 이주했지만,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광산마을이 밀집된 이 주들은 다루지 않았다.

### 1) 농촌에 남아있는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최근 연방 및 주 정부 질의·정책 문서는 상당한 비율의 농촌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머물고 싶어한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 RRSDC 2006). 라이프 패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자료에는 청년들이 심화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은 후 직업을 얻기 위해 대도시와 지역의 센터로 이주하는 현상이 반영되어 있다.

상당수(적어도 1/3정도)의 농촌 출신 참여자는 의무교육을 마친 후 그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다. 대신 다수의 참여자가 곧장 취업의 길에 들어섰다. 이 집단은 지난 20년간 심화교육 및 고등교육에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졸업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역행했다. 게다가 이러한 농촌 청년들의 선택은 일정부분 비슷한 처지의 대도시 청년들과 비교할 때 그들이 직면한 고등교육 기회 부족과 구조적 장벽 (예. 학비, 교통 및 이동 시간의 부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림 IV-6]은 고등교육을 계속하지 않았던 참여자의 비율을 지역별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6] 2007년 지역 별 고등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참여자

위의 그림에 따르면 학교를 떠난 첫 해, 농촌 참여자의 1/3, 주요 대도시

출신 참여자의 10%가 전일제 근로가 당시 그들의 주 목표였다고 진술했다. 전일제 취업을 이처럼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은 특히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청년들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학교를 떠난 후 첫 단계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지리적 위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반면, 성별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사회 집단마다 서로 다른 기회를 누리며 소망하는 바도 가지 각색이고 어떤 사회적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큰 구조적 불평등에 직면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 자료는 우리의 첫 번째 코호트에서 나온 결과와 일치하는데, 정책에서 상정해놓은 고등교육으로의 선형적 경로를 가는 사람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비(非)도시 출신 청년들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상 수준인 대도시 출신의 청년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일부 농촌 참여자들도 고등교육 공부를 잠시 연기했다가 해당지역이나 지역 센터에서 약 1년 정도 일하면서 충분한 돈을 모아 도시 중심으로 이주할 비용을 벌고 전문대학 교육과정에 진학한다는 점이다. 코호트 2를 통한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21%가 의무교육을 마친 첫 해에 학업을 연기했고, 2/3 이상이 다음 해에 전일제 교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꽤 많은 ‘연기자(deferrals)’ 들은 ‘과도기 해(Gap year)’ 를 거치게 되었다. 호주의 청년들이 일과 여가 경험을 목적으로 해외로 떠나기 위해 또는 나중에 학위를 시작하고자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 아니면 청년 보조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과도기 해’ 를 보내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주요 대도시의 청년들보다 지방·농촌의 청년들일수록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의 학업을 연기할 가능성이 더 많았다. Polesel (2009) 따르면 일례로 빅토리아 주에서 지방 학생일수록 여러 가지 비용문제(새로운 지역으로의 이사 및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유예할 가능성이 대도시 학생들보다 2.5배 더 많다. 빅토리아 주에서의 이러한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유예했던 이들의 10명 중 7명은 대학에 입학했고, 10명 중 1명은 중등교육을 떠난 지 1년 후 다른 형태의 심화·정규교육을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의 농촌지역 출신 청

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화교육 없이 곧장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더 많다. 또한 그들의 일자리를 그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나 경력을 획득하는데 있어 첫 단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농촌 청년에게 성인이행과 관련한 옵션과 결정은 도시 청년의 경우와 매우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과 불평등은 농촌 청년이 직면한 상대적인 불리함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및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들의 성인이행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 지역에 남아기로 결정했던 이러한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부모·조부모 세대와는 또 다른 노동시장의 구조 하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몇 십 년 동안 농지사용의 급격한 변화와 농지의 감소를 겪었다. 다음 절에서는 농촌의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친 극적인 변화들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 2) 농촌지역의 변화

호주 전역과 전 세계의 농촌 지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Alston, 2002; Carr & Kefalas, 2009; Cuervo, 2009; Falk, 2001; Kenway et al., 2006; Kenyon et al., 2001; Pincott, 2004). 지난 20년 동안 호주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농업 정책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는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Pritchard, 2000). 무역 자유화는 관세철폐 또는 감소 및 농산물 쿼터, 국가 마케팅 기구의 해체 및 산업규제 제도의 단순화 등이 포함되었다 (Brett, 2007).

호주 농촌지역의 쇠퇴는 특징적인 면이 있다. 예컨대 도시보다 실업 수준이 더 높다거나 가구소득 수준이 더 낮고, 대체 수단도 없이 공공·민간 서비스가 철회되었고, 청년층 인구가 감소했으며, 지역 중심·수도 및 해변도시로 인구가 이동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모두 상호연계되어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 많은 난제가 비단 농촌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거대도시들이 호황을 누린 것도 아니었다. 지난 10년 동안 호주 대부분의 지역들이 긍정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런 탄탄한 성장이 몇몇 해안 지역, 광산타운과 수도 지역, 그리고 도시 외곽지역에 나타나는 동안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업지역은 ‘경제규모의 축소’를 겪었다. <표 IV-12>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표 IV- 12> 2006-2007 호주의 산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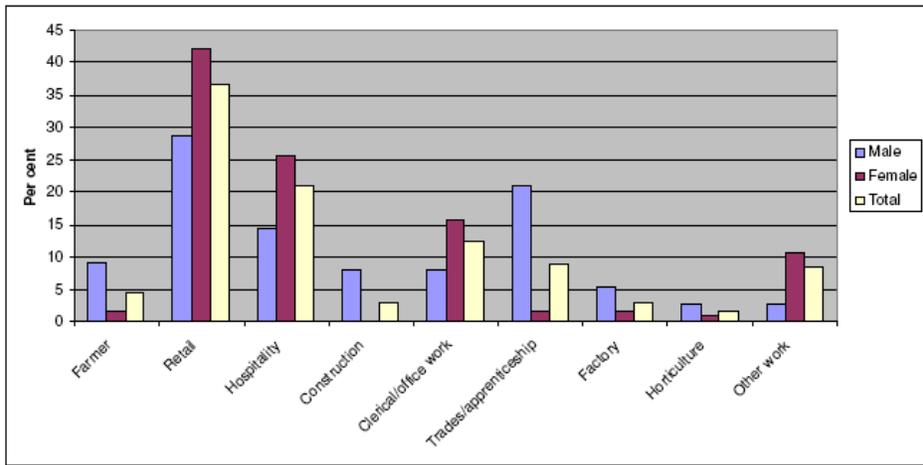
	서비스	제조업	광업	농업	Total
GDP 기여					
산업 공유	77.1	12.1	8.3	2.5	100.0
연간 성장	4.2	2.2	7.6	-22.4	3.3
투자					
산업 공유	59.3	12.4	22.8	5.6	100.0
연간 성장	12.4	-12.8	22.0	-16.7	8.3
수출					
산업 공유	22.7	41.9	30.9	4.5	100.0
연간 성장	10.5	13.7	8.8	-9.1	10.2
고용					
산업 공유	85.0	10.4	1.3	3.3	100.0
연간 성장	3.3	2.3	0.9	0.2	3.0

출처: DIISR 2007

아울러 국내 총생산 (GDP)의 산업별 비율의 측면에서 한 때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던 농업부문은 20세기 중반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다. 20세기 초반 GDP의 농업 부문 몫은 20%~30% 였으나 현재에는 2.5%에 불과하다 (ABS, 2004; DIISR, 2007). 호주 경제에서의 중요성 측면에서 농업 부문은 기타 3개의 모든 산업부문 가운데 그 비중이 가장 적고, GDP 기여도, 투자 및 수출수익 면에서 연간 성장이 마이너스를, 고용 면에서는 0.2%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수치는 농촌지역에서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서

비스, 광업 부문의 성장과는 분명한 대조를 나타낸다.

코호트 2의 농촌 참여자의 라이프 패턴 자료는 농촌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대부분 서비스 부문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소매 및 서비스업 그리고 행정직은 의무교육을 마친 첫 해에 농촌 지역에 남아있던 청년들이 주로 고용된 업종이다.



주: 무역 및 도제제도에는 배관, 전기, 기계 등이 포함된다. 다른 근로에는 스포츠 트레이너, 방위, 보육, 육아, 세탁 및 시설관리 등이 포함된다.

[그림 IV-7] 2007년 19-20세 시 농촌 지역에 사는 코호트 2 참여자의 주요 고용 부문

그러므로 농장일이나 임업 같은 특히 젊은 남성의 영역이었던 전통적인 고용은 서비스 부문 일자리로 대체되었다. 또한 농촌 노동시장의 변화 외에도 농촌 출신 참여자들은 취업이나 일자리의 질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어조로 진술했다.

### 3) 농촌 지역에서의 경제활동

고등교육 기회와 취업 기회의 확보 가능성 뿐 아니라 정서적 요인 (가족,

사회적 관계 및 낭만적 관계)과 청년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 남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Cuervo & Wyn, 2009; RRSDC, 2006). 아울러 두 개의 사회화기관인 가족과 학교가 그들의 지역사회를 떠나게 또는 남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참여자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즉 부모와 교사는 청년들의 학교졸업 직후의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가정과 학교가 청년들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다른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현상이다 (Alloway et al., 2004; Cuervo, 2009 참조).

그러나 자연재해(예. 가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농·임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감소 역시 농촌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에 영향을 준다. [그림 IV-7]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비정규직, 임시직 및 단순기술직과 함께 서비스 산업은 호주의 많은 농촌 지역의 주 일자리가 되었다. Alston 및 Kent (2006)의 언급처럼 자신의 지역사회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던 청년들, 특히 일찍이 학업을 그만둔 경우일수록 심각한 실업과 하향취업을 경험했다. 청년 실업은 25세 이상 성인의 실업(3.6%) 보다 4배 (15-19세 14.3%), 또는 2배 (20-24세의 경우 6.7%) 더 높다. (Mission Australia, 2006). 대도시가 아닌 빅토리아 주의 경우 2005-06년도의 실업률은 15-19세의 경우 18%, 20-24세의 경우 10%인 반면 25-34세의 경우 5%였다 (RRSDC, 2006: 324). 농촌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자리는 대체로 비정규직, 시간제 또는 도제훈련의 일부다. 그것은 대개 몇 안 되는 식료품점, 소매점 및 병원에서 일하기 또는 수확기간에 농장에서 일하기 정도였다<sup>15)</sup>. 그러므로 농촌 지역에 머무는 이들에게 있어 학교에서 취업으로의 전통적 경로는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이거나 충분하지 않은 미래의 연속인 것이다. 반대로 주요 대도시 출신의 참여자는 비록 비정규직이거나 불안정하다고 느낄지언정 농촌 출신의 참여

---

15)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많은 청년들은 복지급여 대상에서 거부된다. 청년수당과 관련한 ‘자산조사’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는 청년들도 있는데 이는 상당한 곤란을 야기해 생계에 위협을 준다 (Alston & Kent, 2006: 18). 15-20세 청년이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부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청년 수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청년들은 수당 대상이 되려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자들보다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또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그만둘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 청년 노동시장의 급진적 변화가 청년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그들로 하여금 ‘변화 속에서의 압박’과 ‘변화해야 하는 압박’을 느끼게 했다는 사실이다 (Kenway et al., 2006: 4). 일례로 Kenway 및 학자들은 이렇게 급변하는 압박 속에서 농촌 각 지역은 ‘경제적 기반, 지속 가능한 삶, 공간, 그리고 그것이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야만 했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들은 농촌 노동시장의 ‘여성화(feminisation)’에 주목해 왔다 (Kenway et al., 2006; Little & Morris, 2005 참조). 즉 이전 세대보다 취업에 뛰어드는 젊은 여성이 많아지고 1,2차 부문에 속하는 육체 노동과 야외 일자리에서 농촌 지역의 주요 고용부문이 (소매업 및接客업과 함께) 서비스 부문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청년들, 특히 남성 (농촌이라는 공간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공간’으로 상징되어왔다)의 역할과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농촌 청년의 전일제 노동시장의 붕괴, 농촌 일자리 특성의 변화, 그리고 청년들의 농촌 지역 잔류 및 독립적 생활 영위를 가능하게 했던 학업에서 취업이라는 전통적 이행방식이 붕괴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빅토리아 주에 사는 코호트 2 참여자 중 한 명인 타마라는 실업의 고통을 겪었다. 그녀는 살고있던 마을과 인근 지역에서 취업센터, 인터넷 사이트를 보며 이력서를 내는 등의 구직 활동을 하면서 10개월을 보냈다. 그녀는 ‘지방 도시에 일자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나단 또한 뉴 사우스 웨일 주의 한 지방 도시에 살고 있다. 그는 중등교육을 마치면서 일자리를 얻었는데 지인을 통해 얻은 시간제 일자리였다. 소매점 일이었는데 재정적 어려움으로 가게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일주일에 4시간정도 일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 마치고 나서는 주 20시간으로 늘어나 괜찮아졌어요. 보수 면에선 괜찮았지만, 가게가 문을 닫은 후엔 몇 달 동안 일거리가 없어서 저축했던 것을 조금씩 까먹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쪼들리게 살았어

요. 일자리 찾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력서를 냈으니까요. 지금은 과체중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뚱뚱하니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던데 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 저의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이죠. 저도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나단은 지인을 통해 대학가의 술집에서 주방보조이자 요리사 견습생 일 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비록 주방보조지만 언젠가 요리사나 중요한 자리로 옮길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 조나단의 이야기는 대도시 이외 지역의 청년들이 처한 또 다른 중대한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다. 우리의 양적 데이터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 남기로 결정했던 참여자 가운데 5명 중 적어도 1명은 그가 학교를 마친 첫 해에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는다. 면접을 통한 데이터에 따르면 고용은 신문광고, 인터넷 검색이나 공개된 공간의 지역 광고같은 공식적 루트를 통하기 보다는 대개 청년의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인맥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나단처럼 로저 또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개인적 자원을 활용해야만 했다. 로저는 빅토리아 주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농촌이 주는 여유로운 생활방식을 즐겼고 일주일에 2~3번 근처 마을로 가려면 1시간은 넘게 이동해야 했지만 다른 많은 젊은 남자들처럼 호주식 풋볼 경기를 즐겼다. 학교를 마친 후 로저는 스포츠 클럽에 수습사원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지난 5년 동안 풋볼 경기를 했다 (현재 그는 주니어 팀의 코치를 맡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의 예전의 선생님을 통해 얻은 일자리였다). 로저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을 했고, 이 지역에서 일을 찾는 방식은 대체로 자신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동 비용을 줄이고 자동차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로저는 부모님 집을 떠나 근처 마을에서 몇몇 지인과 공동 숙소를 얻었다. 몇 달 후 그는 나가야 했고 한 달 동안 그의 여동생과 함께 지냈다. 현재 그는 풋볼 코치 숙소에 머물고 있다. 그는 부모님 집을 떠나 살고 있기에 ‘이주 지원금’이라는 복지

보조를 받는데, 그는 이것을 생활비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견습생으로 일하는 많은 농촌 청년들처럼 그는 ‘많지 않은 돈에 기대어 근근히 먹고 사는 일, 집을 떠나 생활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 같다’고 말한다. 바에서 일한 지 몇 달 후 로저는 일주일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었고 심지어 주말 심야에도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바에서 주는 급여가 넉넉하지 않다며 ‘그럭저럭 살만한 기본급 수준’이라고 말한다. 로저는 어쩔 수 없이 부업을 찾아야 한다. 한 친구를 통해 간신히 공장의 일자리를 하나 찾았다. ‘친구 하나가 공구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내가 일을 쉬는 날에 그 곳에 가서 일을 좀 하곤 해요.’

그는 그의 많은 친구들이 실업 상태거나 임시직 또는 수습직만을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로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그의 인맥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또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다. 주된 이유는 그가 바(Bar) 근무를 그만두고 주 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곳을 원하기 때문이다. 현재 그는 주변을 탐색하거나 신문을 보고 있지만 또 다른 일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안다.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습직 같은 건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습 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구미가 당기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더욱이 다른 많은 농촌참여자들처럼 일자리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로저는 영구직이나 보수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찾지 못으면 장소를 옮겨 퀸즈랜드나 아델라이드(Adelaide 도시)로 옮길 생각도 하고 있다.

다른 참여자들 또한 수습직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레드의 경우 ‘현재의 수습직 임금으로는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견습생 복지급여는 꽤나 도움이 되었다.’ 프레드는 그의 직업인 자동차 정비를 계속하기 위해 멜버른으로 떠났다. 여자친구가 현재 고향에서 일하면서 멜버른에서 공부하기 위한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떠나는 것은 프레드에게 매우 힘든 결정이었다. 매튜의 경우 특히 모든 사람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수습직이라도 취업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수습직 1년 차에 많은 돈을 벌기는 힘들지만 매년 급여가 나아진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는 주당 약 38시간을, 초과근무로 약 15시간을 일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힘들 때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다. 공부를 마친 후 타스마니아를 떠나고 싶지만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적당한 임금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농촌 지역의 많은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꾸릴 수 없거나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농촌 지역에서 발생한 전일제 청년노동시장의 붕괴로 인해 청년들은 어떻게든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낮은 급여의 수습과정을 밟을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농촌 지역의 고용주들에 따르면 전통산업의 붕괴로 인한 농촌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은 견습생 자리마저 감소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한다 (Kenway et al. 2006). 여기에는 농촌 지역이 남성적 공간이라는 기존의 시각이 약화된 것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위의 이야기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자원에 기대어야 하는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청년의 학교졸업 후 상황에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농업 부문에서의 전일제 형태의, 장기적이고, 전통적인 고용이다. 이는 안정을 위한 수단이자 인생에서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농장의 감소,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상, 가뭄 같은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 그 기반이 약화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농촌 학생의 학교졸업 이후의 경로에는 다른 집단보다도 더 큰 불안요인과 불확실성이 뒤따랐는데, 이는 농촌 및 벽지 지역에서의 노동시장 불확실성과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일과 생활방식에서의 훨씬 제한적인 선택’ 때문이다 (Kilpatrick et al. 2003: 84).

#### 4) 농촌지역에서의 심화교육의 중요성

코호트 2의 자료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 중 상당한 비율은 중등학교를 떠난 후에도 심화교육과정을 계속 밟았다. TAFE(전문기술학교) 과정은 농촌 지역의 청년 및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청년이 고등교육으로 선호하는 선택인데 이 경우 성별의 차이는 없다. 2007년, 본 프로젝트 참여자의 약 15%가 TAFE에 등록한 데 비해, 전국적으로 이 수치는 약

27%였다 (NCVER, 2007). <표 IV-13>은 2007년과 2008년에 학업을 지속했던 이들이 선호한 기관을 나타낸다.

<표 IV-13> 2007-2008년 성별 사회경제적지위별  
지역별 선호하는 교육기관

(단위:%)

		2007		2008	
		대학	TAFE	대학	TAFE
성별	남	77	15	84	13
	여	78	15	83	11
사회경제적지위	높음	70	20	76	17
	낮음	88	6	93	6
지역	주요 대도시	83	12	85	11
	주요 대도시 외	73	17	83	12

위의 표에 나타난 수치는 전반적으로 대학 기관에 입학한 청년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데, 중등교육을 마친 후 1~2년 간의 TAFE 입학 비율은 소폭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위에도 언급되었듯이 대학입학의 증가는 TAFE 과정을 중단했던 참여자보다는 첫 해에 학업을 연기하고 난 후 대학진학을 위해 도심지로 이주했던 상당수의 청년들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첫 해에 연기했던 이들 가운데 74%는 대학에 입학했고 12%는 TAFE에 입학했다.

TAFE 과정은 특히 지역학교에서 기계, 자동차 또는 미용치료 같은 직업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없는 농촌 지역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 문제는 교과과정이 근본적으로 다양하지 못한 농촌의 학생들이 직면한 불리함을 보여준다. 피터의 진술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그는 학교에서의 직업에 관한 상담이 유용하며 그의 선생님께서도 그의 꿈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는 그에게 해당 과정을 제공할 어떠한 자동차 관련 수업이나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11학년을 마친 후 자동차

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학교를 떠나 ‘곧장’ TAFE 코스를 밟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라이프 패턴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의 결과 (Alston & Kesnt, 2006; Australian Government, 2008; RRSDC, 2006)는 농촌 청년이 직면한 또 다른 심각한 불리함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바로 농촌 청년들이 TAFE에 입학해 해당 지역사회에 남아 있으려고 할 때 부딪히는 구조적 장벽이다. 그것은 기름값, 대중교통 수단의 부족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라이프 패턴의 코호트 2에 속한 참여자인 존의 경우 ‘농촌에 살면서 학교를 마친 후 학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왜냐하면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빅토리아 주의 북서쪽에 위치한 농촌 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곳은 그가 관심 있어 하는 TAFE 과정을 제공하는 지역 센터에서 한 시간 반 거리에 있다. TAFE에 다니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4번이 지역센터로 통학해야 했다. 처음에는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 부모님 집에서 나가지 않았지만 통학 때문에 그의 생활이 너무 큰 타격을 입었다. 다른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사는 곳과 공부하는 지역 센터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해체되며, 기름 값이 너무 드는 것이었다. 고등교육에 미치는 이들 장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존의 이야기는 청년들의 이동성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호주 안에서의 이동은 비단 농촌에서 주요 대도시뿐 아니라 농촌 마을에서 도시로 가버린 인구를 흡수하는 “스폰지” 지역 센터로도 일어난다 (Kenyon et al., 2001; RRSDC, 2006). “스폰지” 지역 센터 및 도심으로의 이동에 원인이 되는 결정적 요인은 심화교육 및 취업 기회를 포함한 농촌에서의 공공·민간서비스의 부재다. 농촌 지역에서의 서비스 부재는 기회 상실과 삶의 질 하락을 의미하며, 특히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예컨대 대중교통 수단의 부족은 농촌 청년의 웰빙에 ‘상당한 장애물’이며 빅토리아 주의 농촌에서 살고 일하고자 하는 청년의 의욕을 꺾는다 (RRSDC, 2006: 136).

## 5) 농촌의 청년 인재 유출

많은 연구에 따르면 심화교육과 고등교육의 부족, 고용기회 부족은 농촌 청년이 대도시와 지역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다 (Alloway et al., 2004; Cuervo, 2009; Eacott & Sonn, 2006; RRSDC, 2006). 위의 언급처럼 농촌 청년들의 사정은 사회, 지역 및 일터의 전통적 기반이 약화되거나 제도적 변화 과정에 의해 좌우되었다. 여기에는 1,2차 산업 (예. 농업, 임업)에 기초한 경제구조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전통적 농촌 정체성이 해체된 것도 포함되며 이는 농촌 청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약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농촌 청년의 전출에 관계된 주요 요인은 고등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불확실한 노동시장에의 접근을 위해 더 높은 학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무감은 농촌 청년들이 이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양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이런 이주 양상은 비단 청년들 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교사 그리고 해당 사회의 구성원의 바람이 되기도 한다. 많은 농촌 청년들에게 있어 자신의 지역사회를 떠나는 것은 성인기 이행의 ‘자연스러운 담론’이 되었다 (see Alloway et al., 2004; Cuervo, 2009)<sup>16</sup>). 농촌 마을의 제한된 기회구조는 지역사회 밖에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극복된다. 교육은 청년들의 기회를 넓히고 농촌 마을에서 주어졌던 한정된 기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마을을 벗어나는 승차권’ (Alloway et al., 2004: 123)이 된다.

대도시로의 이동을 결정함에 있어 또다른 주관적 요인도 있다. 예컨대 농촌 청년들이 도심으로 이주하려는 데 있어 다양한 사람과 라이프스타일이 있는 ‘화려한’ 옵션으로, 농촌 마을을 ‘쿨하지 않고’ 기회가 부족한 곳으로

---

16) 이 ‘새 시대’ 담론은 물론 보편적인 것이 아니며 많은 부모나 교사들은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10학년이나 11학년 (그들의 부모가 했던 것처럼) 이상의 심화교육 자격은 필요 없다는 부모님 세대의 의견을 수용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노동시장의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담론에 영향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Alloway et al. 2004).

인식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이유다 (Kenyon et al., 2001). 또한 ‘실패자’나 뒤쳐진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청년들의 대도시 이동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Geldens, 2007: 80).

라이프 패턴 프로그램 데이터는 이러한 농촌 청년이 고향을 떠나는 전국적인 트렌드를 잘 보여준다. 예컨대 1990년대 초, 코호트 1의 참여자 중 적어도 1/3은 심화 및 고등교육을 계속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대도시로 이동했다. 두 번째 코호트 또한 학교를 떠난 첫 해 지리적 이동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농촌과 농장에 사는 청년들이 도시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5 -2006년 코호트 2가 시작할 즈음에 참여자의 약 40%가 대도시 중심부에 거주해 매우 고른 지리적 분포를 보였는데 2008년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대도시 중심에 살고 있었다. ‘시골읍’ 또는 ‘시내가 아닌 시골’ (주로 농장)에 사는 이들의 비율은 2005-2006년부터 2008년 (중등학교 마지막 해)까지 크게 감소했다. 농촌-도시 이동 패턴은 농촌 청년들이 미래의 학업, 취업 기회 및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을 때 그들의 지역사회를 떠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다. <표 IV-14>는 코호트 2의 이주 양상을 나타낸다.

<표 IV-14> 2005, 2007-2008년 코호트 2 표본의 거주지역 (n=942)

(표단위: %)

	2005	2007*	2008*
주요 대도시	39	44	57
지역 도시	29	32	29
시내 읍/농촌	32	18	13

\* 주: 2007 - 2008년 일부 학생들은 조사 당시 해외에서 갭 이어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라이프 패턴 면접 자료에 따르면 일부 청년들에게 있어 농촌이나 지방을 벗어나는 이주는 새로운 선택으로, 특히 교육이라는 옵션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 나타나는 선택이었다.

## 6) 농촌 청년들의 고등교육 비용부담

호주에서는 대도시 이외 지역 출신의 10,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고등교육 기관에 다니기 위해 매년 집을 떠나 이주한다 (Godden, 2007). 농촌과 벽지에 사는 중등학교 학생들은 총 인구의 약 1/3을 차지한다. 그러나 대학생 중 농촌 출신은 17%에 불과하다(Alston & Kent, 2006: 21). 더구나 지난 20년 동안 대학교육을 받는 청년들의 수는 증가한 반면, 농촌 출신 청년들의 대학 진학 비율은 감소했다.

연구에 따르면 대도시 중심으로의 이주를 포함해 대학 입학에 농촌 학생과 그 가족이 치르는 경제적 비용은 농촌 청년의 심화교육 및 고등교육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Cuervo, 2009; Godden, 2007; James, 2002). Godden(2007)은 대도시 지역 출신이 아닌 청년들의 경우 대도시의 고등교육 기관 입학에 드는 연간 생활비 (이사 비용 및 초기 비용 포함)가 \$18,000~ 26,00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또 일부 농촌 청년들은 청년 수당의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부모의 자산과 소득 (많은 농촌의 부모가 자산은 풍부하나 소득은 형편 없다)을 통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자산 조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면접했던 청년들 중 몇몇은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거론했다. 청년 수당(youth allowance)<sup>17)</sup>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대학에서 실력을 쌓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 청년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의 경우 일부는 부모의 조달로 충당되었던 이사, 임대 및 생활에 관련된 비용 때문에 학교에 입학하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대부분은 대학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동안 해외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지만 재정적 한계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

---

17) 15-20세의 청년은 청년 수당의 자격이 된다. 청년 수당을 원하는 청년들은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수입에 대한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농촌지역 출신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 문제는 고등교육의 비용과 청년수당제도에 대해 정부가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각했다. 그들은 호주에서 대학 입학 을 위해 집을 떠나 사는데 드는 비용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언급한 것처럼 참여자의 상당 비율이 농촌이나 지방의 집에서 지역 중심이나 대도시 중심에 있는 대학으로 이주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회적 인맥을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는 지원 확보의 측면에서 대도시와 농촌 청년 사이에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떨어지는 청년과 배경이 좋은 청년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불평등 양상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이슈화되었다

일부 참여자는 부모의 지원을 이용해 대학 근처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덕분에 독립적 생활로의 전환이 더욱 수월했다. 참여자들은 새로운 사회적 인맥을 만들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학 기숙사에서는 자신에 대한 단속과 음식 및 안정된 숙소 마련에 관계된 지원을 제공한다. 대개 1,2년 동안 캠퍼스 숙소에서 지내면서 자립하고 사회적 인맥을 구축한 후 방을 빌려 나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 참여자는 이런 패턴을 설명한다.

줄리아: 인터내셔널 하우스에 머물고 있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좋아요. 아마 올해 지내고 캠퍼스를 나갈 것 같아요. 사람도 좀 만나고 싶고 많은 내 친구들이 내년 에 오기 때문이죠. 그 친구들은 여행하고 일하느라 1년을 보냈어요. 여긴 참 흥미로운 것이 내가 살던 곳의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고 늘 그대로인데 여기에는 머리 색깔도 희한한 사람들도 만나고 재미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에요.

애나: 처음에는 캠퍼스에서 한 1, 2년 머물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곳이 정말 좋아졌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얻는 도움과 전체적인 분위기뿐 아니라 캠퍼스에 있을 때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정말 재미있어요.

라이프패턴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결과 (Cuervo, 2009 참조)를 통해 공부하기 위해 이동하게 될 주요 대도시 지역을 선정하거나 기댈 가족이나 사회적 인맥을 구축하는 것 사이의 상관관계가 밝혀졌다. 즉 농촌의 청년들은 순조로운 이행을 도울 수 있는 지지 기반이 충분하다면 다른 곳보다 그 지역을 고려할 가능성이 더 높다. 예컨대 멜린다의 친척과 이전의 멜버른 방문은 그녀가 빅토리아 주 북서쪽의 농장에서 멜버른으로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렌트를 했거나 혼자 살았다면 아마 분명히 내 자신이 외톨이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었. 분명 대학에서 산다는 게 좋은 것이 그런 사회적 요인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어디를 가도 사람이 있으면 외로워질 틈이 없죠. 나도 멜버른에 가족이 있으니깐 가끔 내려가 머물기도 하는데 그래서 멜버른은 어쩐지 고향같은 느낌이 드네요.

조지아 또한 친척들과 부모님 지원의 덕을 보았다.

기숙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대학적응이 훨씬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서 나와 사는 것도 그런 것과 비슷하니까. 그러나 청구서와 임대료를 제가 다 낸 적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나나와 함께 살고 있어 그녀가 조금 내고 내가 조금 내고 하니까. 그리고 엄마와 아빠도 내고 있어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나나 모두 올해 초 그 집을 샀고 그래서 나나와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대학생인 농촌 출신의 면담 참가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새로운 보금자리에 친척이 없거나 부모의 지원이 없는 경우에 더욱 그러했다. 때문에 살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책임들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 이동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대도시 출신의 청년 또한 이런 문제에 부딪힌

다. 다음 절에서는 모든 참여자들이 당면하는 서로 다른 삶의 영역이 교차하는 부분이 논의된다. 이들 영역은 청년들의 학업과 일, 가족과 사회적 관계 사이에서의 균형 유지 방법 그리고 건강과 웰빙의 유지 방법과 관계가 있다.

## 7) 요약

많은 농촌 청년들과 부모들은 마을을 떠나는 것만이 고등교육과 심화교육을 받고 고용 기회를 보다 넓힐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라고 생각한다 (Alloway et al., 2004; Cuervo, 2009; Eacott & Sonn, 2006). 청년이 농촌 노동시장에 의존하며 그 지역 사회에서 미래를 계획하려고 한다면 그의 삶의 지속 가능성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농촌 지역에 그나마 있는 일자리는 대체로 임시직이거나 시간제 근로다. 몇 안 되는 식료품점에서 일하거나 추수기 동안에 일손을 돕는 정도다. 불확실한 고용과 실업은 농촌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적 축소 및 인구 감소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농촌 지역에 남아 있는 이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에 더 큰 부담을 준다. 이러한 고용 기회의 부족 그리고 심화교육 기회의 부족은 농촌 사회를 떠나는 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 전일제 노동시장의 붕괴가 호주의 이전 세대들에게 흔했던 학업에서 취업이라는 전통적인 이행패턴을 해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의 속성이 변하고 있으며 농촌 청년들, 특히 남자 농촌 청년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농촌 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는 지역사회의 구조에 영향을 미쳤고 청년들의 전통적 생계 형태를 무너뜨렸다. 농촌 지역에 머무는 청년들의 경우 고용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주로 그들의 개인적 자원에만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는 도제제도의 견습생 자리인 경우도 있어서 급료가 낮아 독립적 생계를 영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더욱이 심화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촌과 지방 출신의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에 도움이 될만한 학력을

취득하는 데 있어 경제적 장벽과 맞부딪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장벽과 기타 비구조적 장애물 때문에 많은 농촌 청년들이 살던 지역사회를 떠나야 했다. 이런 이주는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성인기로 이행하는 농촌 청년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있다.

## 6. 성인기 이행의 교차점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가 기여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시간 경과에 따른 그리고 다양한 생활 영역에 걸친 호주 청년들의 생활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기 이행에 대한 기존연구는 대체로 정해진 한때의 스냅샷 같은 한 순간의 접근방식에 기초해 삶의 일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다. HILDA와 같은 종단연구 데이터는 사전에 결정된 연구 영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19년 동안 코호트 1을 그리고 5년 동안 코호트 2를 연구해 온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는 시간 경과에 따라 범위의 폭과 깊이가 더해져서 넓은 범위의 생활 영역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청년집단이 처한 성인이행 패턴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전통적인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교차점(intersection)에 초점을 둔다. 앞서 언급했듯이 두 코호트의 이행 패턴은 성인기로 이행하는 원활한 선형적 경험이라기보다는 그들 삶을 이루는 다양한 영역들을 상호 연결하는 부분으로 설명 가능한 비선형적 패턴이다. 이 절에서는 학업과 취업이 청년들의 가정 생활과 개인적 관계 그리고 그들의 웰빙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본다.

지난 20년에 걸쳐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공통적인 문제를 밝히기 위해 두 코호트의 궤도를 분석함으로써 호주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관계된 기회와 당면과제를 고찰한다. 우리의 분석에서는 마치 다른 세대들과 굉장히 다른 것처럼 X세대와 Y세대를 묘사하는 대중매체의 스테레오 타입(stereo type)을 경계한다. 오히려 우리의 데이터에 따르면, 두 코호트는

생활면에서 비슷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중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예컨대 ‘많은 돈’을 벌거나 ‘영향력 있는 지위를 얻는 것’ 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wyer et al., 2005). 더욱이 그들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자기 소유의 집을 장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해 삶의 균형을 찾는 것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

### 1) 일(work)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1990년대 호주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그들은 잠재적으로 긴장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정 학력을 취득하면 직업 안정성이라는 목표, 일과 개인적 관계에서의 개인적 성취 그리고 가정 생활의 향유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근로와 관련해 1970년대 이후 세대는 ‘직업의 정의에 대한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했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부모님들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주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Dwyer et al., 2003: 18).

코호트 1의 근로 경험은 그들에게 ‘평생 하나의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과거의 일이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옵션을 열어두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다. 즉, 직업을 부모세대에서는 평생동안 갖는 영구적인 일로 보던 데에서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헌신도 필요로 하며 어느 정도 개인적 성취도 제공하는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변하고 있었다 (Dwyer et al. 2003). 흥미롭게도 코호트 2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일과 직업에 대한 개념화에 동의했다. 코호트 2는 코호트 1보다도 ‘평생 한 가지 직업만 갖는 것은 옛날 일’이라는 사실에 더 강하게 동의할 가능성이 높았고, ‘평생 직업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데에는 동의할 가능성이 낮았다. 더욱이 코호트 2는 노동 시장에서는 유동적 자세와 융통성을 필요로 하며 영원한 학습자의 자세가 되어야 하며 성인기로의 이행에 있어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재미있는 것은 두 세대 모두 학업, 취업과 기타 생활 영역 사이의 관계가 그들의 예상보다 더욱 복잡했음을 강조했다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직업과 일 사이의 험거운 연결고리, 특히 전일제 일과 경력 간의 연관성이 약해졌다는 사실은 코호트1이 20대를 거치는 내내 그리고 30대에 이르러서까지 명확해졌다. 이들 참여자가 30대 초반에 했던 다음의 인터뷰들은 1970년대 이후 세대의 일과 생활에 대한 개념화를 특징적으로 설명한다.

프레드: 직업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말해주잖아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면이든 직업적인 면이든.

샬리: 내 커리어는 내가 매일 하는 일의 ‘마인드셋(mindset)’이죠. 내가 배운 것에 관한 것이자, 내가 걷고 있는 길이요, 배움의 큰 부분, 그리고 내가 맺어온 관계니까요. 나는 뭔가가 일어나길 기다리지 않고 내가 삶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20대엔 탐색을 했지만 지금은 나 자신에 대해 훨씬 많이 알게 되었고 자신감도 더 커졌어.

조지: 각각의 일은 다른 스킬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재다능해지고 싶어요. 그럼 내 한계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도전해 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또한 교육을 받는 기간의 연장, 교육에 드는 비용, 구직의 어려움과 고용의 불확실성 등은 많은 청년들로 하여금 삶이 균형적이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직장에서 성공을 달성하려는 그들의 전략은 개인적 삶을 즐기는 것과는 상충되었다. Andres와 Wyn (2010: 159)에 따르면 융통성을 갖고 그들의 옵션을 열어두는 것은 그들의 교육 및 직업과 관련해 유용한 접근법이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데 있어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 2) 희망과 현실 사이의 격차

라이프 패턴 프로그램의 데이터는 두 코호트의 청년들이 성취하고 싶었던 것과 실제 현실 사이에 갭(Gap)이 발생함을 확인시켜준다. 이 절에서는 청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사생활의 영역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상세히 기록한다. 학업과 일이 청년들의 다른 생활 영역에 미쳤던 영향 때문에 이러한 격차에 주목하기로 한다.

코호트 1의 참여자가 20대와 30대일 때, 그들은 직업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 사이에서 삶의 균형을 찾고자 분투했다. 학교를 졸업한 직후, 코호트 2 또한 그들의 생활을 이루는 다양한 차원들에서 균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코호트 1의 경우, 그들의 희망과 현실 사이의 격차는 면접 당시 그리고 두 코호트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조사를 할 때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희망과 현실 사이의 이러한 격차,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30대에 접어들어서도 계속되었다. 일례로 2002년과 2009년 코호트 1의 참여자에게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소비했는지 응답하고, 원래 시간을 소비하고 싶었던 영역과 비교하도록 하였다. <표 IV-15>는 그들의 응답을 나타낸다.

<표 IV-15> 성별·연령별 실제 시간사용과 희망하는 시간사용 비교

(단위: %)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활동					
		일과 근무		인간관계		가정생활	
		실제	희망	실제	희망	실제	희망
남	2002	55	41	20	49	30	53
	2009	63	21	8	37	49	70
여	2002	50	36	32	56	51	68
	2009	34	10	23	45	72	80

위의 표는 1970년대 이후 세대가 30대를 거쳐 3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가정생활 및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시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청년들이 그들의 시간을 소비했던 일과 시간을 소비하고 싶어했던 일 사이에는 불균형이 존재해 남녀 모두 가족과 인간관계에는 더 많은 시간을, 일에는 시간을 덜 소비하고 싶어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근로 및 직업에 쓴 시간은 2002년보다 2009년에 더욱 길어졌고 남녀 모두 그들의 인간관계에는 시간을 덜 소비했다.

참여자에게 무엇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는지를 물었을 때 그들은 거의 한결같이 일에 쏟는 노력과 시간이 생활의 다른 영역을 압도했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의 말처럼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이 그들에게 어려움으로 언급되고 있다.

로버트: 30대에 기반을 잡으려고 하다보면 일과 삶 사이에서 늘 갈등을 겪죠!

앤서니: 요즘엔 시간이 정말 없어요!! 종일 일하면서 업무 관리하고, 그리고 두 아이가 딸린 가정까지 있으니.. 정말 둘 다 챙기기 힘들어요.

그에 반해 여성은 일과 직업에는 시간을 덜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이 시간을 소비했던 방식과 소비하고 싶어하는 방식 사이의 균형은 더 나아졌다. 그렇다고 해도 여성들은 그들의 바람보다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응답했다. <표 IV-15>는 일에 소비했던 시간과 가족과 인간관계에 소비했던 시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나타낸다. 많은 여성이 일에 소비하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균형을 맞추려고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일하는 시간과 그들이 이상적으로 바라는 시간쓰기 사이의 “격차”를 경험한다. 덧붙여,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어떤 사람들에게겐 가족에 대한 책임 또한 스트레스였을 수 있다.

카리나: 집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요(육아, 요리, 세탁). 직장을 다닌다는 것 말고는 1950년대 주부와 내가 하는 일이 똑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헬렌: 집에 아이 셋에 장시간 일하는 남편이 있다는 건 내 개인적 포부나 건강, 커리어에는 시간을 쓸 수 없는, 그야말로 엄마가 되느라 눈코 뜰 새 없다는 뜻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개 여성들은 가사 책임 때문에 생활의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남녀 참여자 모두 가족은 그들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고 특히 20대와 30대 초반에 고등교육 학력을 취득해 안정적 일자리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은 청년들이 가족을 꾸리고자 하는 계획에 방해가 되었다. 이제 코호트 1에 관계된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짚어본다.

### 3) 결혼과 출산(parenthood)의 연기

1990년대 사회경제적 정책 및 노동시장 탈규제화는 청년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고, 청년들은 성인기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과거 성인기에 대한 정의는 직업, 결혼 및 부모됨과 같은 어떤 전통적 과업을 달성했는지에 맞춰져 있었다.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와 비교할 때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청년들은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20대 후반까지 기다려야 했다. 예컨대 부모 세대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로 대중화된),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1세였고 남성은 24세인 반면 1970년대 이후 세대의 경우 (코호트 1), 여성은 27세, 남성은 29세였다 (ABS, 2009). 이러한 세대 간 차이는 보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가능성과 우선순위의 등장 때문이다. 즉 젊은 세대는 고등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처하며 결혼하기 전 파트너와 관계맺기 같은 비전통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ABS, 2009;

Andres & Wyn, 2010; Wyn et al., 2008)<sup>18)</sup>. 이러한 삶의 영역에서 발생한 세대적 차이는 과거와의 분명한 단절을 드러낸다.

흥미롭게도 그들이 고등교육에 진학한 시점부터 가정을 꾸리는 것은 그들의 중요한 목표였다. 1996년, 22세가 되었을 때 코호트 1의 참여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지 물었다. 거의 절반 (44%)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불행할 것’ 이라고 답했다. 1/3의 여성 (33%)은 그들이 5년 내에 결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 말했고 23%는 ‘결혼 할 것 같다’ 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코호트 1의 여성 가운데 56%가 늦어도 28세가 되기 전에는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4년이 지나 26세가 되었을 때 코호트 1의 29%만이 결혼에 골인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에도 코호트 1의 28%는 여전히 미혼 상태였다. 자녀를 출산하여 부모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희망과 현실 사이의 격차도 그만큼 확연했다. 30세가 되었을 때 코호트 1 참여자의 22%만이 부모가 되었다.

직업에 대해서 여유로움이 생기고 나서야 1970년대 이후 세대의 대다수는, 전통적 의미의 가족을 형성하게 되었다. <표 IV- 16> 은 그들이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와 비교해 20대 후반이었을 당시의 ‘가족관계’ 를 나타낸다.

---

18) 그 시간을 지내는 동안 가정 생활은 참여자의 높은 우선순위가 되었는데, 부모님 세대에 있어 의미와 비교해 그 의미의 다양성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55%) 은 확대가족을 포함했던 방식에서 가족을 정의했다. 즉 부모와 다른 친척을 포함한다. 약 1/4의 경우 가족에는 친구와 타인뿐 아니라 확대된 모든 가족 구성원이 포함된 반면 20%는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전통적 핵가족의 측면에서 가족을 정의했다.

<표 IV- 16> 2002년 28세 및 2009년 35세일 때  
성별에 따른 코호트 2의 가족관계상태

(단위: %)

	2002년 (28세)			2009년 (35세)		
	남	여	총	남	여	총
싱글	37	29	31	13	20	18
결혼	34	34	34	68	34	35
사실혼	25	27	26	N/A	N/A	N/A
동거관계	N/A	N/A	N/A	9	12	11
동거하지 않고, 사귀	N/A	N/A	N/A	9	4	6
이혼	0	0	0	1	1	1
자녀 양육	8	15	13	63	64	63

한편 20대 초반일 때의 코호트 2는 코호트 1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 2008년 20세일 때 코호트 2 참여자의 7%만이 그들의 파트너와 동거한 반면, 63%는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살았다 (2010년 22세일 때 코호트 2 조사에 대한 예비 분석에 따르면 거의 60%가 그들의 부모님 집에서 살았고 14%는 그들의 파트너와 동거했으며 6%는 사실혼 관계에 그리고 2%는 결혼했거나 부모가 된 상태였다).

#### 4) 삶의 균형 유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음부터 코호트 1은 후기 산업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의 옵션을 열어두어야 하고 융통성있고 유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코호트 2는 학업과 취업에 대해 이러한 자세를 취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코호트의 청년들은 그들의 웰빙을 가능케 할 활동들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삶에서 조정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우리 참여자들의 가장 중요한 우려 가운데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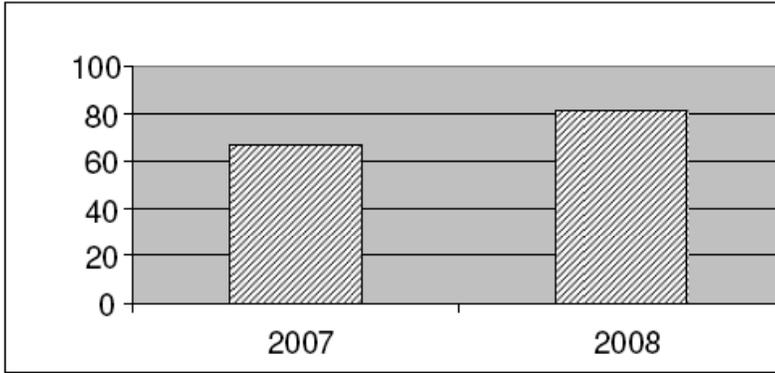
는 개인적, 사회적 관계와 일과 학업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겪는 어려움이었다. 이는 그들의 고용 상태의 불규칙성을 포함한 학업과 일의 과부하와 관계된다. 예컨대 그들이 학교를 떠난 후 지난 10년을 되돌아볼 때 코호트 1의 참여자 일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피터: 우리 세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건 내 친구의 인생모토와도 비슷하죠. 그래서 나도 지금 다른 일을 찾고 있어요.

셀라: 요즘에는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너무 바쁘고 지쳐서 여유를 갖고 폭넓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패트리샤: 공부하기 위해 그리고 지금껏 성취하지 못한 경력을 쌓기 위해 인간관계를 희생했죠.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성공적인 커리어보다는 행복한 가족과의 삶, 결혼과 아이들에게요. 대부분의 내 친구들은 결혼해서 만날 사람도 없고, 애인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 모임에서 배제되는 느낌이 들어요.

삶을 이루는 다양한 영역들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어려움은 가장 젊은 코호트에게 심각한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중등교육을 마친 후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부터 이러한 고민이 시작된다. 예컨대 코호트 2 참여자의 적어도 절반이 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이미 일자리가 있었고 10명에 약 9명은 고등교육에 진학한 첫 해에 일을 했다. 또한 2년 차에는 적어도 80%가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그림 IV-8]은 연구 참여자 중 고등교육 첫해에 학업과 일을 병행한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 IV- 8] 2007, 2008년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코호트 2 참여자, (%)

비록 대부분 불확실하고 임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일자리이지만 일자리의 확보 가능성 측면에서 코호트 2의 참여자는 10년만에 찾아온 국가의 경제 성장 덕을 보았다(OECD 2009). 그럼에도 그들 중 상당한 비율, 적어도 25%는 ‘적절한 일자리(그들의 학업이나 가족과 가사일에 맞는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우리는 청년들의 생활에 있어 그들의 상이한 우선순위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확보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차이점을 발견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의 청년들은 더 나은 배경 출신보다 괜찮은 일자리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경우 이러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남성에 비해 2배정도 더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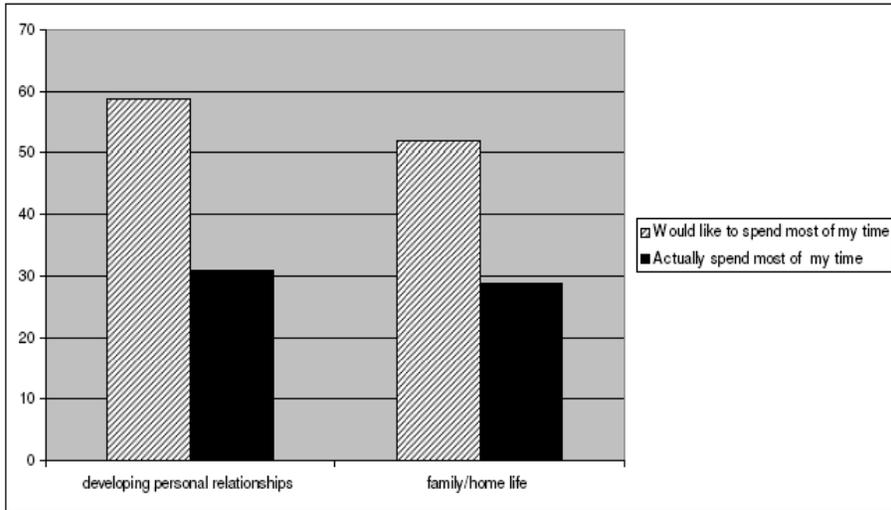
게다가 비정기적이고 불확실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불규칙한 교대 근무의 필요성 때문에 더욱 부담이 심해지곤 한다. 일을 하는 사람들 중 70%는 주말 근무였고 절반 이상은 저녁 교대 및 휴일 근무였다. 이러한 수치는 다음 표에 제시된다.

<표 IV-17> 2007년 교육 기관에 따른 코호트 2 참여자의 근무상태

	대학생	TAFE 학생	비 학생	전체
심야 또는 저녁 교대	64%	57%	43%	54%
주말 근무	83%	74%	66%	70%
공휴일 근무	67%	60%	51%	55%

위의 수치는 심화교육 및 고등교육에 참가하는 것이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청년들에게 이러한 일자리가 만연하다는 것은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든가 인간관계에 시간을 보내는 등 생활의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 구조적인 장벽이 있음을 암시한다.

코호트 2 또한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림 IV- 9]는 대학 2년차인 청년의 52%가 가정과 집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했지만 29%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59%가 인간 관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31%에 그쳤다.



[그림 IV-9] 2008년 20세 기준, 활동 별 시간할애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비교(%)

코호트 1과 마찬가지로 코호트 2의 성인기로의 이행은 공부, 일,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 그리고 웰빙이라는 책임 전반에 걸쳐 생활의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의 연속이다. 청년들은 인간 관계나 가정 생활을 만들어 가는 등의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어 했다. 고등교육이나 심층교육 기관에 입학하기 위해 집을 떠나 나와 살며 각기 다른 부문에 시간관리를 하는 것은 청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요 원인인데, 특히 가족의 지원이 부족한 경우 더욱 심각했다. 청년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모니카: 전에는 경험한 적 없는 치열한 경쟁사회에 놓인 것 같아요. 임대료나 식비 등 생활비를 벌려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없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뒤처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로저: 동아리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과 학업과 일에서 요구하는 바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죠.

제임스: 평소 몸으로 움직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주당 2번 스포츠를 즐기려고 해요. 충분치는 않지만 너무 자주 운동하는 것도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요.

부모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은 두 코호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세기 초반에 두 세대 모두 그들의 인생에 있어 부모를 가장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으며 그들이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받은 지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호주의 젊은 세대에게 관계가 갖는 중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흥미롭게도 인간관계는 학업과 일 같은 문제보다 가치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세대 간 갈등 (부모는 자녀의 고등교육 시절 동안 자녀를 뒷받침해야 하는 부담을 느낀다)의 측면에서 가족 관계를 개념화하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대로 두 세대 모두에 해당하는 우리의 자료는

성인기 이행에 있어 그들의 가능성을 지지하기도 하고 가로막기도 하는 물질적 자원과 비물질적 자원의 원천으로 가족과 친구는 중요한 요인임을 반영한다. 그들의 삶에서 관계가 갖는 중요성은 ‘가족 관계, ‘우정’ 및 ‘독립’ 과 같은 청년이 가치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매우 유사한 응답을 확인한 국가적 차원의 청년 조사에서도 입증된다. Wyn (2007: 39)의 설명처럼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사회구조의 탈전통화는 개개인에게 있어 장기간의 의미 있는 개인적 관계 및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 5) 건강과 웰빙의 중요성

앞에서 코호트 1이 과거 10년 동안의 그들의 생애를 돌아보며 그들의 건강과 몸 관리에 소홀한 데 실망한 것을 언급한 바 있다. 건강 및 신체단련은 호주의 청년들에 있어 일관되게 주요한 걱정이자 불만거리로 등장했다. 이 건강과 신체단련은 일과 직업보다도 불만의 원인일 가능성이 2배 더 높다. 30대 중반에 건강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악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삶의 균형이라는 복잡한 문제는 그들의 심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표 IV-18>은 지난 10년 동안 그들이 심신 건강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여준다.

<표 IV-18> 2002-2009년 성별에 따른 코호트 1의 건강상태 비교 (단위:%)

	남		여	
	2002 (28세)	2009(25세)	2002(28세)	2009(35세)
신체 건강				
매우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음	10	20	20	31
중간	30	25	27	17
매우 건강/건강	60	55	53	52
정신건강				
매우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음	10	21	18	26
중간	24	29	24	19
매우 건강/건강	66	50	58	55

<표 IV-18>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녀 모두에 있어 심신 건강 수준이 심각하게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남성의 1/15 그리고 여성의 1/3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매우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게다가 남성의 1/15, 여성의 1/4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매우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즉, 현재 모든 참여자 중 절반만이 심신이 건강하다고 또는 매우 건강하다고 느낀다. 이러한 건강 저하는 생활의 책임들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촌 마을에 사는 레이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이를 가진 후 좋아하는 스포츠 활동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정신적으로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매우 많은 상황에 있고 때로 머리를 식히기 어렵고 잠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자스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곤하고 멍한 느낌이에요. 과로 때문이죠. 9일 연속으로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걸 할 힘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데보라의 진술이다.

모든 시간을 부모로서의 책임에 매달리니까 내 자신의 관심사나 건강/신체단련은 뒤로 밀리죠.

요컨대 코호트 1에게 다양한 우선순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건강과 웰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장 젊은 세대 역시 건강과 웰빙이 그들 삶에 중요한 문제임을 나타냈다. 상이한 책임을 조정하려는 노력은 이미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다수의 참여자가 건강하다고 주장했지만, 22세일 때 상당 수의 응

답자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고(12%)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15%) 것 같다고 진술했다. 참여자들은 고등교육 학력을 획득하고 경력 쌓기의 압박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예컨대 제레미는 운동할 시간도 없는 ‘많은 공부와 일의 압박’ 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신적으로 언제나 스트레스 상태라고 느낀다. 게다가 이 여성 참여자는 그녀 세대가 느끼는 압박감을 설명했다.

벨린다: 2009년은 너무 우울했죠. 대학 과정을 밟는 게 더 이상 즐겁지도 않고 힘들기만 해요. 휴학하는 동안에는 심신의 건강이 꽤 좋아졌어요. 학생에게 공부, 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쉽게 균형을 잃고 일과 공부에만 매달리게 되요.

이 절에서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두 세대가 그들의 웰빙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가 드러난다.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더구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일, 공부, 사회적 관계를 모두 관리해야 하는 청년들은 이제 막 인생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데 심신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Andres 와 Wyn (2010: 192)에 따르면 ‘건강과 웰빙 정책은 특히 교육과 노동시장 정책에 주어지는 관심에 비교해 관심이 낮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들의 경험이 정책 결정자와 사회 전반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볼 수 있다.

## 6) 요약

희망과 현실 간의 격차와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은 정책 영역들에 걸친 교차점들 그리고 청년들의 생활상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교육 및 고용 정책의 비용이 어떤 식으로 청년들의 사적인 삶에 부담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한 영역에서의 정책은 의

도하지 않은 결과를 통해 또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코호트 1의 경우, 그것은 낮은 결혼률과 출산율의 형태로 나타났고 그들이 20대가 되고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그들의 심신의 건강에 대한 우려의 형태로 나타났다. 코호트 2도 유사한 양상을 따르는 것으로 보여 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성인기 이행을 다루는 연구는 단순히 교육과 고용보다는 광범위한 범위의 영역을 포함해야 하며, 사회 경제 정책의 여파(의도하건 아니건)에 대해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

## 7. 소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호주의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주요 주제를 다시 짚어보고 향후 연구와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호주의 성인기 이행을 다룬 이 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관점을 제시한다. 이 역사적 시기는 대중 중등교육에서 대중 고등교육의 확대라는 전환을 포함한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의 본질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던 요인들 중 하나다. 실제로 호주 성인기 이행의 이야기는 실제로 산업경제에서 후기산업경제로, 농촌의 번영과 1차 산업에의 의존에서 도시에 기초한 경제체제와 서비스 부문에의 의존이라는 변모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다. 사회의 다양한 요인들이 변하면서 청년들이 직면하는 가능성과 입지도 변했다.

이 보고서는 광범위한 변화의 양상을 확인하고 사회뿐 아니라 개개인과 청년 및 청년의 정체성의 본질에 관계된 함의를 논의한다. 예컨대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함의 중 하나는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생계유지, 독립적 생활 및 장기적 파트너쉽 구축의 측면에서의 확실성은 1980년대가 되면서 가변성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결혼은 연기하고 더 오랫동안 교육을 받는 추세를 낳았다. 1990년대에는 청년들이 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형식의 고등학력을 성취하며 17세부터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표준이 되었다. 평균 결혼 연령은

1976년 남자 24세, 여자 21세에서 2001년 남성 29세, 여성 27세로 상승하였다 (ABS, 2005). 청년들은 부모님과의 동거 기간이 더 늘어나는 추세였고 또한 다른 청년들과 집단 숙소에서 동거하는 추세도 발견되었다. 특히 주도와 주요 대도시 지역처럼 주택비가 높은 곳일수록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란 점차 어려워졌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은 개인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생활의 원칙’에 적응하고 그들 부모 세대와는 매우 다른 생활패턴을 헤쳐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사회 이론학자 Beck과 Beck-Gernsheim (2002)의 이론적 통찰을 활용해 후기 근대성의 시기를 ‘성찰하는 개인화된 정체성’의 시기로 규명했다.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해 개개인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그들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감수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것이 Beck의 용어로 말한 ‘위험 사회’의 의미다 (1992). 이것은 1980년대 호주에서 성인기 이행 양상의 ‘문제’가 등장했을 당시를 반영하고 있다. 그때까지 청년들의 궤도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에 대한 개념은 관심 밖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자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은 정책의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런 정책적 은유와 접근법에 깔린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오랜 기간에 걸쳐 술한 삶의 영역들을 가로지르는 청년들의 궤도, 희망, 성취에 담긴 구체적인 양상을 탐구함으로써 성인기 이행에 대한 핵심적인 생각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젊은이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양질의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호주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심층사례 분석에서 발견된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평등의 양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일부는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일시적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오래된 불평등의 양상은 놀라게도 지속적이다. 다른 연구자들 (예. Lamb & Mason, 2008) 및 라이프 패턴 연구 (Wyn, 2009a)에 따르면 원주민 청년, 농촌

출신의 청년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떨어지는 청년들은 교육의 지원을 가장 받지 못하는 집단이다. 교육에서부터 출발한 이러한 불평등한 양상의 고착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둘째, 성인기이행의 양상은 복잡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청년의 궤도는 그 복잡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집단마다 교육, 취업, 가족, 관계, 건강 및 웰빙과 여가 등의 다양한 삶의 영역을 헤쳐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에서 선형적 경로(pathways) 가정하면 이러한 다양성을 놓칠 가능성이 발생한다. 단순하고 선형적 은유를 채택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진짜 위험은 성인기 이행을 설명하려고 할 때 어느 한 성인기 이행 방식이 규범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성인기 이행 방식으로 간주되는 궤도에서 멀수록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더 제한된다. 정책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성에 무디기 때문이다.

셋째, 성인기 이행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단연구를 통해 그들의 사회 역사적 맥락 내에서 특정한 삶의 방식의 선택이 갖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노동시장과 삶이 갖는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성인기 이행 시점이 연령, 성별 그리고 사는 지역에 따라 일정하게 발생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긍정적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은 보다 평등한 성인기 이행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청년들의 집단마다 결과가 매우 달랐던 주요 성인기 이행 측면은 다음과 같다.

a. 중등교육으로 부터의 이행: 중등교육으로 부터의 이행은 매우 중요하고, 정책적 개입이 많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부분이다. 호주의 청년들은 17-24세 사이에 ‘배우지 않으면 벌어야(learn or earn)’ 한다는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COAG, 2009). 그러나 청년들을 제 시간에 맞춰서 대학에 진학하도록 권장하고 타이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분석 결과 30대 중반 시점에서 살펴보면,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청년, 특히 청년 남성이 취업, 건강, 웰빙의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청년들이 중등학교를 떠난 후 곧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로 결정할 합당한 이유는 많다. 다만 이 선택이 지금처럼 그들의 다른 진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좋은 정책은 그들에게 적당한 시기에 고등교육의 형태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을 더 받도록 유인책을 제공한다면 그 교육을 통해 그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며 이는 그들이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에 진학 시기를 놓치고 나면 그러 기회를 다시 만드기가 쉽지 않다. 고등교육의 기회를 열어두면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집단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b. 직업세계로의 이행: 교육정책에서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지만, 직장에서의 평등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라이프 패턴 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의 궤도는 그들이 일터에 들어설 때 달라지기 시작했다. 젊은 여성은 실령 최고의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직업적 성취에서 동년배의 남자들보다 뒤쳐지는 경향이 있었다. Andres와 Wyn (2010)은 직장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하며, 모든 근로자가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과거에는 노동시장관련 정책이 성인기 이행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보았지만, 이제는 성인기 이행의 양상(nature)과 질(quality)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c. 부모로의 이행: 자녀가 생기면 남자와 여자 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Esping-Andersen은 이를 성역할에서의 ‘완성되지 않은 혁명(unfinished revolution)’ 이라고 부른다. 그의 주장처럼 부모가 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호주의 청년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가 되는 시기를 늦추려고 하며, 많은 사람들, 특히 교육을 많은 받은 사람들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한다. 2000년대 초에 ‘베이비 보너스’ 라는 정책이 출산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호주에 시행되었다. 그런데 정책을 시행할 때에 현재의 사회적 조건이 특정 집단에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이프 패턴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르면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이 시간제 근로를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일과 가정생활의 책임과 즐거움을 자유롭게 누리려면 직장 문화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2000년대 후반, 전통적인 성별 패턴으로 회귀했다는 점은 직장문화가 실제로 변화하는 성별 기대에 발맞추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 V. 요약, 결론 및 정책제언

### 1.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국외의 성인기 이행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양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대 사회의 불안정성이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방식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최근 성인기로의 이행 지체와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정규교육단계에서의 집중적인 투자를 거쳐 안정적인 일자리를 획득하여, 결혼 및 출산,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이르는 단선적인 경로는 최근 다양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과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지체, 노동시장의 불안정에 따른 청년 노동력의 유희화, 개인주의화에도 불구하고 부모에의 경제적 종속 지속, 결혼의 지연과 저출산 등이 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실증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에 대해 주요한 생애 사건별 기술적인 통계를 살펴보고, 이행경로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60년대 초반 코호트에 비해 최근의 젊은 코호트로 올수록 대학진학률이 현격하게 증가하고, 혼인 및 출산의 시기가 지연되며, 첫 일자리 취업시기가 지체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전통적으로 성인의 역할로 여겨져

왔던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건계열분석(event sequence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생애사건의 배열, 즉 생애사건순서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였다.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생애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이 변화해 온 것이 뚜렷한데 비하여, 생애사건순서는 코호트 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는 6가지 상태(재학, 군복무, 취업, 혼인, 취업+혼인, NEET) 간에 변동의 유형을 포착하고자 하였으나,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여 지배적인 유형을 파악할 수 없었다. 성인기 이행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성인기 이행 양상의 다양화는 그 방식과 속도에 있어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는 70년대와 60년대 코호트 모두 재학-취업-혼인의 생애사건순서가 계속 지배적인 유형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학에서 곧장 혼인상태로 전환하는 경우도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남녀 간 성인기 이행양상의 다양화 정도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성인기 이행에 있어 우리 사회가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하는 사항에 차이가 있으며, 성인기 이행 경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별 간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층의 고용 위험에 주안을 두어 동태적인 관점에서 학교-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청년층 고용률은 2009년 40.5%를 기록하여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의 고용률은 가파르게 하락하였는데, OECD 회원국 가운데 청년층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의 하락폭도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청년층 고용률 하락을 경험한 OECD 회원국들은 주로 고학력화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늦어진 데 주된 원인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청년층 노동시장 여건의 악화에 따라 학교-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둘째, 청년 취업애로층은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거나 유희화되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해야 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 실업

률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감소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포기한 취업애로층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비재학 취업애로층은 2009년에 17.2%에 이르며, 2000년대 중후반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주로 취업준비 비경황의 비중이 높으며,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는 주로 실업자와 유휴 비경황 상태에 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 간 차이에 주목할 필요를 제기한다.

셋째, OECD(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학교 졸업 이후 첫 직장까지 이행 기간은 OECD 국가에 비해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청년층의 고용률은 크게 낮으며, 저임금 고용 비중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저임금 고용 발생비는 지난 10년간 OECD 평균이 하락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변함 없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이 길다고 해서 첫 일자리의 질이나 매칭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후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후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일자리의 질, 직장경험횟수, 비정규직 경력 비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과 출산 이행에서 남녀의 노동시장이력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생존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기회의 확대와 근대적 가치관의 내면화는 남녀의 초혼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남녀 모두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을 지연하거나 단념할 가능성이 높았고, 1970년대 이후 출생자도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비해 결혼을 지연하거나 단념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남녀의 노동시장참여 상태와 이력은 초혼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특히 코호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최근의 사회경제적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불안정화가 초혼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연령과 코호트 등의 인구학적 변수와 교육 수준은 출산 이행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혼 이행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학이상의 고학력자는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연령이 경과할수록 출산할 가능성이 훨씬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도 마찬가지였다. 즉 고학력자는 출산을 미루는 경향은 있어도 저학력자에 비해 나이가 들어도 출산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넷째, 노동시장참여 상태와 이력은 출산 이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코호트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최근의 저출산 현상이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출산 결정 시기의 취업 상태의 효과를 보면, 출산 1년 전에 취업상태에 있던 여성과 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던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을 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반면 현재 취업상태와 정규직 근무가 남성의 출산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장기무직은 남녀 모두의 출산 가능성을 낮추었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약하지만 정규직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출산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러한 효과는 남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생계부양자인 남성 소득원의 안정성이 여성 소득원의 안정성보다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코호트에 따른 차이도 드러났는데, 남녀 모두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출산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최근에 더 커졌다. 여성의 장기무직 상태는 최근 코호트에서 출산 가능성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규직근속 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출산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규직 커리어를 쌓고 있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결혼 가능성이 낮았지만, 정규직 커리어를 쌓고 있는 여성이 일단 결혼을 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과 출산 행위에 있어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분가 패턴과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적인 분석을 통해서 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우리나라 분가의 패턴은 결혼 전에는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은 남유럽형이나 유교문화권에 가깝지만, 결혼 후에는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형태로 변화하여 결혼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사는 비율이 높은 남유럽형과의 동질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분가율은 전반적으로 1990년대 전반 이후부터 감소해 왔다. 주로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결혼 분가가 줄어들어 발생한 현상이다. 우리나라 분가의 패턴은 교육을 마친 후 취업과 결혼까지 마쳐야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가 그렇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나이가 증가할수록 부모와 따로 사는 비율이 증가했으나, 그 비중이 빠르게 늘지는 않았다. 교육은 분가의 시점을 다소 늦추는 이상의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셋째, 취업 후 분가가 아직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취업이 분가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 자체가 분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남성의 경우 취업을 해야 결혼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분가를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로로 분가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모형설정이나 집단에 따라 다소간 효과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임금근로자일 경우 일자리의 질(고용형태)도 중요한 고려요인이었다.

넷째, 부모의 영향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학력은 분가에 영향이 없었지만, 부모의 자산과 현재 근로소득은 자녀의 분가와 대체로 유의한 통계적 관계를 가졌다.

호주의 성인기 이행 양상에 대한 심층적 사례분석은 우리나라 성인기 이행 양상에 대한 이해와 향후 성인기 이행 연구가 다루어야 할 측면들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호주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사례분석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사회경제적 맥락이 변화함에 따라 코호트별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성인됨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베이비붐 세대, 70년대에 태어난 세대, 그리고 매스컴에서 화려한 모습으로만 비춰지지만 실상은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20대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독립적인 성인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호주 청년들이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겪어온 여러 가지 난제들은 최근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청년문제를 논의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국 청년세대들도 극심한 취업난과 주거문제, 결혼지연과 저

출산 등 성인됨의 지표로 여겨지는 과정을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성인기 이행 양상에 대해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호주에서 2차 대전이 끝난 후, 국가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전 국민의 교육수준이 꾸준히 향상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높은 학력을 얻는 것은 개인에게는 괜찮은 직업(decent job)과 윤택한 삶을 보장하는 열쇠였고, 국가적으로는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여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경제성장기에 청년기를 보낸 베이비붐 세대는 높은 학력을 취득할수록 안정되고 넉넉한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의무교육만 마치더라도 다소 열악하지만 취업과 이후의 성인이행의 경로를 밟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당시 세대에게 교육 후 취업, 그리고 결혼과 출산의 과정은 비교적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의 사회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대는 호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에 큰 변화를 야기하였다. 즉 다른 서구 국가들처럼 호주사회 역시 산업경제체제에서 후기 산업경제로의 변화를 겪었는데, 농업과 제조업이 주를 이루었던 경제구조가 대도시에 기초한 서비스 부문 경제구조로 변화한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히 산업구조를 재편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의 불안정과 경쟁의 심화를 부추겨 1970년대 이후의 청년들은 이전 세대보다 높은 학력과 자격(qualification)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 생활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특히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마칠 때까지 드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은 학업을 포기하고 더욱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사회계층의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진학을 잠시 유예하고 일을 하다가 다시 학업을 시작하는 등 이전보다 복잡한 진로를 밟는 청년들도 늘어났다. 이렇게 성인기 이행과정이 이전 세대처럼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기존의 청년정책틀을 고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따라서 향후 정책이 보다 유연하게 청년의 다양

한 삶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학력신장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은 결과적으로 청년 세대가 독립된 생활을 한다거나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일을 계속 늦추게 만들었다. 이는 호주의 만혼과 저출산 추세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호주에서의 평균 결혼 연령은 1976년 남자 24세, 여자 21세에서 2001년까지 남성 29세, 여성 27세로 각각 5~6년씩 늦어졌다 (ABS 2005). 대신 청년들은 부모님과 동거 기간이 더 늘어났거나 다른 친구들과 공동으로 사는 기간이 길어졌다. 특히 주도와 주요 대도시처럼 주거비용이 높을수록 젊은이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졌다. 이러한 트렌드는 최근 한국의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도 매우 비슷하다.

호주의 사례분석에서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사회구조 변화 뿐 아니라 학력신장과 청년노동시장 이면에 놓인 성별 간 차이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성(性)별 불평등 역시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양상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의 학력성취 지표를 보면 대학 진학률의 경우 남녀 모두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통계청 2009, 여학생 82.4% 남학생 81.6%), 주요 국가고시 합격률도 몇 년 전부터 남녀 격차가 줄어들어 이제는 성비가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살아남기란 결코 남성과 동등하지 않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이수한 여성의 경우, 동일 조건의 남성보다 취업률·임금수준이 낮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더 빨리 노동시장에서 퇴장한다. 이는 한국에서 여성의 근로여건이 여전히 평등하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09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전년도보다 낮은 1.15이며, 모(母)의 평균출산연령은 31세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과 출산 지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통계청 2010). 이미 국내외 많은 연구를 통해 가임기 여성의 일자리 안정성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감안할 때,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양상고찰과 호주의 사례분석을 통해 현대사회가

총체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위험한 사회” (Beck, 1992)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불안정성이 증가하면 개인들이 희망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를 느끼게 되고, 결혼과 출산 같은 중요한 결정을 행복한 일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risky) 것으로 느끼게 한다. 또한 이러한 불안정성은 사회계층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안정한 노동시장 시스템은 취약계층의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게 만든다.

## 2) 결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은 불과 몇십년 전과 비교해 보아도 크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와 노동시장의 재구조화 과정을 겪으면서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성인기 이행 과업, 즉, 결혼, 출산, 분가 등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성인기 이행의 전반적 양상이 변화됨에 따라 사람들의 관련 규범에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과거에는 성인이라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점차 강해지는 현상은 성인기 이행에 관한 규범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실제로 비혼, 만혼, 무자녀 커플 등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규범의 변화가 확산되면 이는 다시 성인기 이행 양상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새로운 양상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은 지금도 변화 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다양해진 성인기 이해 방식은 그 사회가 청년들이 성인으로서 사회에 진입하는 데 있어 획일적인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진로의 다양성이 청년 개인에게는 혼란과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수가 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그 실패는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많다(Settersten, 2005). 또한 사회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선의 출산과 효율적인 노동력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개인화되고 예측이 어려운 성인기 이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계획이 필요한 정책 측면에서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회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바람직한 성인기 이행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할 경우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성인기 이행양상의 다양화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상황에 적합한 성인기 이행모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11년에 수행될 2차년도 연구에서는 성인기 이행에 대한 우리나라 청년들의 인식과 가치관, 그리고 준비도를 고찰함으로써 향후의 우리사회의 성인기 이행방식을 예측하고 정책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청년세대를 코호트별로 나누어 그룹별 좌담회(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오늘날의 한국 청년들이 “성인됨(being an adult)”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교육, 취업, 결혼, 출산, 주거마련계획 등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식과 성인기 이행 준비도를 파악할 계획이다.

## 2. 정책제언

성인기 이행은 어느 한 시점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전의 경험과 준비상황에 따라 이행 방식의 결정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정책에서 우리 사회의 성인기 이행 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서가는 세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여도 사회구조적인 장벽으로 인해 독립적인 성인으로 제대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목격하게 된다면 뒤를 잇는 세대들이 “20대여, 토폴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우석훈, 2007)”는 조언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의 보다 나은 미래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라나는 세대들이 어른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이를 위해 성실히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노력을 하면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들이 보장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만 젊은 세대들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그토록 필요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면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이 절에서 논의하는 청년고용정책, 일가정양립정책, 주거지원정책 등은 이미 노동부나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의 부처에서 주요 정책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원활한 성인기 이행 지원이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그 필요가 다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안정된 고용과 주거에 대한 지원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은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1) 청년고용정책

청년의 고용 불안정은 다른 성인기 과업 수행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안정한 취업 경험의 지속이 이후의 직업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청년 실업 문제를 개인의 과도한 희망임금으로 단순화할 수 없으며, 경력개발을 동반하지 않은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청년 실업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사후적인 단기 실업대책을 넘어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예방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창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실적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인과 구직의 불일치(mismatch)가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교육과 노동시장간 괴리에 따른 제도적인 장애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교원임용 및 평가제도 개선, 특성화 학과 선정·운영, 현장실습 학점제 실시 등 산학협력에 필요한 요인들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취업역량 인증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취업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매년 20만 명을 상회하는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지 못한 전문대 교육에 대해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직업훈련, 직장체험 등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심층상담에 기초하여 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지원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

## 2) 일가정 양립정책

여성의 현재 노동시장참여 상태가 결혼과 출산 이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실증 분석결과에서 확인되듯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초혼과 출산을 연기시키는 결과를 낳는데, 이러한 현상은 보다 젊은 코호트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현재 취업해 있다는 사실은 초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에 서 지속적으로 일해 온 이력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혼인·출산과 일자리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과 사회환경이 미비한데, 이것이 청년층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형편이다. 일과 가족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 중심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사회구성 원리를 일과 가족이라는 두가지 생애목표를 중요한 구성원리로 수용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홍승아 외, 2008).

## 3) 청년주거지원 정책

청년 노동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데 비해 주거비는 증가세에 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특히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고등교육기관과 양질의 직장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인 경우 주거비는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다. 젊은 세대가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주거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용은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이나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의식주 영역에서의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사회적 시민권을 확보해 주는 정책적 시도가 요구된다(김란우, 2010). 또한 주거불안정은 결혼과 출산의 연기나 기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 대한 주거대책은 사회유지와 발전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다(이대원, 2010).

## 참 고 문 헌

- 강무섭(1990). 한국의 고등교육정책연구. 교학사.
- 강순원(1987). 1970년대 상대적 과잉교육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이화여자대학대학원 박사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주요업무 추진방향.
- 교육과학기술부(각년도). 「교육통계연보」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 자료집.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9).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 자료집.
- 교육인적자원부(2001).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01-'05).
- 교육인적자원부(2005).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06-'10).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7).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 교육출판기획실편(1989). 분단시대의 학교교육. 도서출판 푸른나무.
- 권혜자·김두순·이주현(2008). 청년층 고용문제와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 김란우(2010). 자가거주율 분석을 통한 주거안정성 변화 연구. 서울도시연구, 11(1), 43-59.
- 김성식(2007). 경제사회 불평등과 교육격차. 한국교육개발원.
- 김안국(2003).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분석, 노동경제논집, 26(1), 23-52.
- 김영철·김미숙·전은희·박종현·손정숙(2007). 대한민국 교육정책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철·이병식(2002). 교육규제 개혁의 국제동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김주섭(2005).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 592), 1-29.
- 김홍균·김지혜(2008). 과잉 교육의 투자수익률 추정. 재정학연구, 1(4), 45-68.
- 남영우(2010). 공공임대주택의 빛과 그늘. 주거 신분사회. 창비.
- 노동부(200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노동부(각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
- 박경숙(2007). 인구학방법론강의록. 서울대학교 인구연구 강의록.
- 박성준(2008). 고학력 청년 취업난: 공급측면에서 접근, 경제학 공동국제학술대회.
- 박수미(2005). 가족내 젠더구조와 저출산 -생애주기별 접근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총서.
- 박수미·정진주·박선영 (2005). 젠더문제와 여성의 노동참여: 노동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총서.
- 박희석(2010). 서울시 아파트가격의 합리적 버블 추정. 서울도시연구, 10(3), 71-82.

- 배은경(2009).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 - 여성의 생애전망과 젠더/계급의 교차. 페미니즘연구, 9(2), 39-82.
- 손낙구(2008). 부동산 계급사회. 후마니타스.
- 손순중(1994). 한국 고등교육 정원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역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 송광영(1988). 대학정원정책의 평가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 신선미·정경아·구정화 (2009). 여대생의 직업세계 인식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야마다 마사히로 (2010). 우리가 알던 가족의 종말. 장화경 옮김. 그린비.
- 여유진·김수정·구인회·김계연(2007).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옥환(1986). 한국대학교육 확대의 사회학적 해석, 한국문화연구원논총, 50, 이화여자대학교.
- 우석훈 (2007). 88만원세대. 레디앙.
- 윤석천(2004). 경제위기 이후의 청년층 노동시장 변화와 직업선택.
- 윤정일 외(1995). 개정판: 한국의 교육정책. 교육과학사.
- 윤정일 외(2008). 전환기의 한국교육정책, 학지사.
- 은기수 (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구범과 순서구범. 한국인구학, 18(1).
- 은기수·박수미 (2002). 여성취업이행 경로의 생애과정 쉼스(sequence) 분석. 한국인구학, 25(2), 107-138.
- 이대원(2010). 청년층 주거문제 현황과 대책.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이병훈(2002). 구직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동경제논집, 25(1), 1-21.
- 이병희 (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1), 1-18.
- 이병희(2004).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변화, ‘고용 없는 성장기의 청년실업 해법 토론회’ 발표문, 동아시아연구소 주최.
- 이정미·최정윤·김기수·한유경·김병주 (2008). 대학 교육비와 수익률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영(1992). 대학입학결정의 사회적 요인분석, 서울대학교박사논문.
- 이혜영·김미란·한준(2006). 학교교육이 사회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임연기(1993). 대학정원정책의 영향분석. 교육행정학연구, 1(2), 202-229.
- 장경섭 (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 전병유 (2010), “청년 고용·실업 문제와 고용안전망”, 사회보장학회 정책토론회 발표문.

- 전병유·채창균·장지연·박성재 (2009).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전략. 노동부 정책연구과제.
- 정광희(2010). 대입제도 기능 관점에서 본 MB 정부의 대입정책 과제와 개선방향. 한국교육개발원.
- 조정아 (2000). 대졸여성의 노동경험과 직업의식 변화. 조순경 편.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지광수·수홍결·송송이(2009). 한국의 청년 실업에 관한 연구, 한국비즈니스리뷰, 2(3), 39-60.
- 채재은·이병식(2005). 한국 고등교육 규제실태 진단 및 개혁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채창균·박천수·이수영(2006). 대학생 능력평가제도 도입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 통계청, 각년도, 「인구동향조사」 .
- 통계청, 각년도, 「인구총조사」.
- 통계청, 각년도, 「장래인구추계」
- 한국교육10년사간행회(1990). 한국교육10년사, 품문사.
- 한국교육개발원편(2009). 대학선진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대통령혁신위원회 제2차대통령보고
- 한국문교부(1988). 문교40년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각년도). 여성통계연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지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0).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인력수급체제 개선 방안 연구.
- 한용석, 이주형 (2010). 주택가격의 순환변동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연구. 10(4), 229-243.
- 홍기훈(1995). 산업발전과 전문대학: 전문대학교육 실태보고서, 삼민사.
- Abrahamsson, K. (1994). Time policies and lifelong education. In T. Husen & T. Postheltwaite (ed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Oxford: Pergamon.
- Ainley, J. (1984). Learning and earning revisited. Hawthorn, Victoria: ACER.
- Aisenbrey, Silke and Anette Fasang. (2010). New life for old ideas: The "second wave"

- of sequence analysis bringing in the "course" back into the life course."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38(3): 420-462.
- Alloway, N., Gilbert, P., Gilbert, R., & Muspratt, S. (2004). Factors impacting on student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in regional Australia. Canberra: Commonwealth of Australia.
- Alston, M. & Kent, J. (2006). The impact of drought on secondary education access in Australia's rural and remote areas. Wagga Wagga: Centre for Rural Social Research, Charles Sturt University.
- Alston, M. (2002). Inland rural towns: are they sustainable? Outlook 2002 Conference. Canberra: Academy of the Social Sciences Session on Rural Communities.
- Andres, L. and Wyn, J. (2010). The making of a generation: The children of the '70s in adulthood. Toronto: Toronto University Press.
- Arnstein, A., Billari, F., and Piccarreta, R. (2007). Strings of adulthood; A Sequence analysis of young British women's work-family trajector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3, 369-388.
- Arnstein, A., Billari, F., Mazzuco, S. and Ongaro, F. (2002). "Leaving home: A comparative analysis of ECHP Dat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2(4): 259-275.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1964, 1987~1988, 2004~2010). Labour force. Cat. 6202.0. June. Canberra: ABS.
- Australian Government (2008). Review of Australian higher education. Canberra: Commonwealth of Australia.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IHW). (2007). Young Australians: Their health and wellbeing 2007. Canberra: AIHW.
- Australian National Opinion Polls (ANOP). (1988). A survey of community attitudes to Commonwealth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and programs. Canberra: AGPS.
- Beazley, K. (1980). The Commonwealth Ministry of Education: An experience in the Whitlam Government 1972-1975. In S. Murray-Smith (eds.). *Melbourne Studies in Education* 1980.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 Beck, U. & Beck-Gernsheim, E. (2002). *Individualization*. London: Sage.
-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 Bell, L. & Burtless, G. (2006). A cross-national survey of trends in the transition to

- economic independence. Network on Transitions to Adulthood Research Network.
- Bessant, J. & Cook, S. (1998). Young people and work: An overview. In J. Bessant & S. Cook (eds.). *Against the Odds: Young people and work*. Hobart: Australian Clearinghouse for Youth Studies.
- Bessant, J., Sercombe, H. & Watts, R. (1998). *Youth studies: An Australian perspectives*. South Melbourne: Longman.
- Billari, F., Philipov, D. and Baizan, P.(2001). "Leaving home in Europe: The experience of cohorts born around 1960."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7, 339-356.
- Braithwaite, J. (1988). Disadvantaged students' and their parents' perceptions of education and schooling in the post-compulsory years. *Curriculum Perspectives*, 8.
- Brett, J. (2007). The Country, the City and the State in the Australian Settlement.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1), 1-17.
- Brown, N. (1998). The path of adolescence and the problem of work in the 1950s. In J. Bessant & S. Cook (eds.). *Against the Odds: Young People and Work*. Hobart: Australian Clearinghouse for Youth Studies.
- Bryant, Brenda K. & Zvonkovic, Anisa M.(2006). Parenting in relation to child and adolescent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 149-175.
- Burdekin, B. (1989). *Our Homeless children: Report to the national inquiry into homeless children*. Canberra: AGPS.
- Campbell, I. & Brosnan, P. (1999). Labour market deregulation in Australia: The slow combustion approach to workplace chan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13, 353-394.
- Campbell, I. & Burgess, J. (2001). Casual employment in Australia and temporary employment in Europe: Developing a cross-national comparison.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5 (1), 171-184.
- Carmichael, L. (1992). *The Australian Vocational Certificate Training System*. Canberra: AGPS.
- Carr, P. & Kefalas, M. (2009). *Hollowing out the middle: The rural brain drain and what it means for America*. Boston: Beacon Press.
- Chang, Kyung-Sup, (2007), "The End of Developmental Citizenship? Restructuring and Social Displacement in Post-Crisis South Korea",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 Cohen, P. & Ainley, P. (2000). In the country of the blind?: Youth studies and cultural

- studies in Britain. *Journal of Youth Studies*, 3, 79-95.
- Commonwealth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 (CTEC). (1982). *Learning and earning: a study of education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Canberra: AGPS.
- Connell, W. F., Francis, E. & Skilbeck, E. (1957). *Growing up in an Australian city: A study of adolescents in Sydney*. Hawthorn: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 Connell, W. F., Stroobant, R., Sinclair, K., Connell, R.W. & Rogers, K. (1975). 12-20: *Studies of City Youth*. Sydney: Hicks Smith.
-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 (COAG). (2009). *National partnership on youth attainment and transitions*. Canberra: COAG.
- Cuervo, H. & Wyn, J. (2009). 'Opportunities for effective investment to increase youth population in regional Victoria', commissioned by the Office for Youth and the Department of Plann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Victorian government, Melbourne.
- Cuervo, H. (2009). *Social justice and rural education in Australia*. PhD Thesis. Melbourn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Australia, Melbourne.
- Cunningham, K. (1951). *The Adjustment of youth: A study of a social problem*.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 Danziger, S. & Rouse, C. E. (2007). *The price of independence: The economics of early adulthood*.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Davis, D. (1988). *School to work: the EHW factor*. Melbourne: Nelson.
- Dawkins, J. (1988). *Strengthening Australia's schools: A consideration of the focus and content of schooling*. Canberra: AGPS.
- Department of Education & Training (DET). (2003a). *Blueprint for government schools: Future directions for education in the Victorian government school system*. Melbourne: DET.
- Department of Education & Training (DET). (2003b). *Maintaining the advantage: Skilled Victorians*. Melbourne: DET.
- 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 (DETYA). (2000). *Learning for the knowledge society: An education and training action plan for the information economy*. Canberra: Commonwealth of Australia.
- 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DEET). (1993B). *National report on*

- Australia's higher education sector. Canberra: DEET, Higher Education Division.
- 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 National Board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1990). A fair chance for all: National and institutional planning for higher education. Canberra: DEET and the National Board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 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DEET). (1993A). NSW Year 10-12 students' attitudes to post-compulsory education and training. Canberra: AGPS.
- 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DEET). (1994). Young people's attitudes to post-compulsory education and training. Canberra: AGPS.
- Department of Innovation, Industry, Science and Research (DIISR). (2007). Key facts Australian industry 2006-07. Canberra: DIISR.
- Dwyer, P. & Wyn, J. (2001). Youth, education and risk: Facing the future. London: Routledge and Falmer.
- Dwyer, P. (1995). Post-compulsory education in Australia and the domination of truth. *Journal of Education Policy*, 10 (1), 95-105.
- Dwyer, P., Harwood, A. & Tyler, D. (1998). Life Patterns, choices, careers: 1991-1998. Melbourne: Youth Research Centre.
- Dwyer, P., Smith, G., Tyler, D. & Wyn, J. (2003). Life-Patterns, career outcomes and adult choices, Research Report 23. Melbourne: Youth Research Centre.
- Dwyer, P., Smith, G., Tyler, D. & Wyn, J. (2005). Immigrants in time: Life-Patterns 2004. Research Report 27. Melbourne: Youth Research Centre.
- Dwyer, P., Tyler, D. & Wyn, J. (2001). Journeying through the nineties: The Life-Patterns Project 1991-2001. Melbourne: Youth Research Centre.
- Dwyer, P., Wyn, J., Wilson, B. & Stewart, F. (1989a). Pathways, personal issues and public participation. Melbourne: Youth Research Centre.
- Dwyer, P., Wyn, J., Wilson, B. & Stewart, F. (1989b). Transients of citizens? The economic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Melbourne: The Youth Research Centre.
- Eacott, C. & Sonn, C. (2006). Beyond education and employment: Exploring youth experiences of their communities, place attachment and reasons for migration. *Rural Society*, 16(2), 199-214.
- Esping-Andersen, G.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Cambridge: Polity.
- Eun, Ki-Soo. (1994). Transition to adulthood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Pennsylvania.
- Falk, I. (2001). Challenges facing rural regional Australia in new times. In I. Falk (ed.), *Learning to manage change. Developing regional communities for a local-global millennium*. Adelaide: National Centre fo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 Finn, B. (1991). *Young people's participation in post-compulsory education and training*. Canberra: AGPS.
- Furlong, A. & Cartmel, F. (2007). *Young people and social change: New perspectives*.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 Furstenberg, F. F. (2008). The intersection of social class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J. T. Mortimer (Ed.), *Social class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1-10.
- Geldens, P. (2007). Out-migration: Young Victorians and the family farm. *Place and People*, 15(1), 80-87.
- Gillmore, Mary Rogers (2008). Marriage following adolescent parenthood: Relationship to adult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 1136-1144.
- Godden, N. (2007). *Youth allowance and regional young people: Access to tertiary education*. Wagga Wagga: Centre for Rural Social Research, Charles Sturt University.
- Gregory, R. (1995). Higher education expansion and economic change. Conference 'Efficiency and Equity in Education', Canberra, 6-7 September, National Board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 Guldi, M. Page, M. & Stevens, A. H. (2006).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on young adult children's success. *Network on Transitions to Adulthood Policy Brief*, Issue 29.
- Hartley, R. (1989). *What price independence? Report of a study on young people's incomes and living costs*. Melbourne: YACVIC.
- Haynes, B. (2002). *Australian education policy: An introduction to critical thinking for teachers and parents*. Katoomba, New South Wales: Social Science Press.
- Henry, M., Knight, J., Lingard, B. & Taylor, S. (1988). *Understanding schooling: an introductory sociology of Australian education*. Sydney: Routledge.
- Hoem, J. (2006). Anticipatory analysis and its alternatives in life-course research. *Demographic Research*, 15, 485-498.
- Houseknecht, Sharon. & Lewis, Susan.(2005). Explaining teen childbearing and

- cohabitation: Community embeddedness and primary ties. *Family Relation*, 54, 607-620.
- Iacovou, Maria. (2002). Regional Differences in Transition to Adulthood. *ANNALS*. 580, 40-69.
- IMD(2010).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James, R. (2002).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higher education participation: An analysis of school students'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Canberra: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 Training.
- Jamrozik, A. (1998). Transformation in the youth labour market: An empirical examination 1945-1996. In J. Bessant & S. Cook (eds.). *Against the odds: Young people and work*. Hobart: Australian Clearinghouse for Youth Studies.
- Jekielek, Susan. & Brown, Brett. (2005). *The transition to adulthood: Characteristics of young adults ages 18 to 24 in America*. Washington DC: Child Trends.
- Kelly, P. (2006). The entrepreneurial self and 'youth at-risk': Exploring the horizons of ident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Youth Studies*, 9 (1), 17-32.
- Kemeny, J. (2005). The really big trade off between home ownership and welfare: Castles' evaluation of the 1980 thesis, and a reformulation 25 Years on." *Housing, Theory & Society*. 22.
- Kenway, J., Kraack, A. & Hickey-Moody, A. (2006). *Masculinity beyond the metropolis*. London &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enyon, P., Sercombe, H., Black, A. & Lhuede, D. (2001). *Creating better educational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rural young people: a report to the National Youth Affairs Research Scheme*. Hobart: Australian Clearinghouse for Youth Studies.
- Kilpatrick, S., Abott-Chapman, J., Williamson, J. & Bound, H. (2003).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learning communities: implications for rural development. *Global Focus-Local Partnerships,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19th National Rural Education Conference, Society for the Provision of Rural Education in Australia*, Canberra.
- Kirby, P. (1985). *Report of Commonwealth Committee of Inquiry into Labour Market Programs*. Canberra: AGPS.
- Lamb, S. & Mason, K. (2008). *How Young People are Faring, 2008. Report for the Foundation for Young Australians*. Melbourne: FYA.

- Leccardi, C. & Ruspini, E. (2006). Introduction. In Leccardi, C. & Ruspini, E. (eds.). *A new youth? Young people, generations and family Life*. Ashgate: Aldershot.
- Levine, Judith. & emery, Clifton.(2007). The well-being of children born to teen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105-122.
- Lewis, P. & Mclean, B. (1998). *The youth labour market in Australia*. Murdoch, WA: Centre for Labour Market Research and Murdoch University.
- Lingard, B. & Porter, P. (1997). *Australian schooling: The state of national developments*. In B. Lingard & P. Porter (eds.). *A national approach to schooling in Australia? Essays on the developments of national policies in schools education*. Canberra: Australian College of Education.
- Little, J. & Morris, C. (2005). *Critical Studies in Rural Gender Issues*. Ashgate: Aldershot.
- Mankiew, G., Weil, D., (1989). The Baby boom, the baby bust, and the housing marke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19(2).
- Marginson, S. (1997). *Educating Australia: government, economy and citizen since 196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tin, B. (2009). Skill acquisition and use across the life course: Current trends, future prospects, *Australian Bulletin of Labour*, 35 (1)., 287-325.
- Mayer, E. (1992). *Putting general education to work: the key competencies report*. Canberra: AGPS.
- McLeod, J. & Yates, L. (2006). *Making modern lives: Subjectivity, schooling and social chang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Meier, A., Allen, G. (2008). Intimate relationship develop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Differences by social class. In J. T. Mortimer (Ed.), *Social class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ce Development*, pp. 25-39.
- Mission Australia (2006). *New blueprint to tackle causes of Australia's youth unemployment problem*. Mission Australia.
- Mission Australia (2007). *National Survey of Young Australians*. Sydney: Mission Australia Research and Social Policy.
- Morehead, A., Steele, M., Alexander, M., Stephen, K. & Duffin, L. (1997). *Changes at work: The 1995 Australian 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survey: A summary of the major findings*. Canberra: Australian Department of Workplace Relations and

Small Business.

- National Centre for Vocational Educational Research (NCVER). (2007). Australia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tatistics: Students and courses 2007. Adelaide: NCVER.
- OECD(2009).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02). Taking the measure of temporary employment, chapter 3 in: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09). Jobs for youth, Australia. Paris: OECD.
- Pincott, M. (2004).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Rural Society*, 14(3), 210-213.
- Pocock, B., Buchanan, J. & Campbell, I. (2004). Securing quality employment: Policy Options for Casual and Part-time Workers in Australia. Barton, ACT: Chiefly Research Centre.
- Polesel, J. (2009). Deferring a university offer in Regional Victoria. Centre for Post-Compulsor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University of Melbourne: Melbourne.
- Pritchard, B. (2000). Negotiating the Two-edged Sword of Agricultural Trade Liberalisation. In B. Pritchard & McManus, P. (eds.). *Land of Discontent: The Dynamics of Change in Rural and Regional Australia*. Sydne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Press.
- Pusey, M. (2003). The experience of middle Australia: The dark side of economic reform. Port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ndfuss, Ronald R. (1991) The young adult years: Diversity, structural change, and family, *Demography*, 28, 493-512.
- Rindfuss, Ronald R., Gary Swicegood, and Rachel A. Rosenfeld (1987), "Disorder in the life course: How common and does it matt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785-801.
- Rural and Regional Services and Development Committee (RRSDC). (2006). Inquiry into retaining young people in rural towns and communities. Melbourne: Parliament of Victoria.
- Seltzer, J. (2005). Explaining family change and variation: Challenges for family demograp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908-925

- Settersten, R. A.(2006). *Becoming adult: Meanings and markers for young Americans*. Network on Transitions to Adulthood Research Network.
- Settersten, R. A., Jr., Furstenberg, F. F., & Rumbaut, R. G. (Eds.). (2005).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een, V. (1988). *A fair chance in education: Education allowances for low-income families*. Melbourne: Brotherhood of St. Laurence.
- Smart, D. & Sanson, A. (2005). *What is life like for young Australians today and how well are they faring?* Paper presented at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Conference. Melbourne.
- Smith, H. (1988). *Traineeships: A case study in new curriculum design methodology*. In C. McBeath (ed.). *Case studies in TAFE curriculum*. Perth: West Australian Social Science Education Consortium,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 Smith, T. W. (2004). *Coming of age in twenty-first century America: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importance and timing of transitions to adulthood*. *Ageing International*, Vol. 29 No. 2, 136-148.
- Stokes, H. & Cuervo, H. (2009). *Challenging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education in school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earning*, 16 (27)., 215-226.
- Stokes, H. & Wyn, J. (2007). *Constructing identities and making careers: young people's perspectives on work and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5 (6)., 495-511.
- Swartz, T. T. (2008). *Family capital and the invisible transfer of privilege: International support and social class in early adulthood*. In J. T. Mortimer (Ed.), *Social class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11-24.
- Sweet, R. (1987). *The youth labour market: A twenty year prospective*. Canberra: Curriculum Development Centre.
- Taylor, S., Rizvi, F., Lingard, B. & Henry, M. (1997). *Educational Policy and the Politics of Chang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Te Riele, K. (2005). *Transition complexities in a knowledge/risk society*. In N. Bagnall (ed.). *Youth Transition in a Globalised Marketplace*. New York: Nova.
- Uecker, Jeremy. and Stokes, Charles. (2008). *Early Marriage in the U. 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70, 835-846.

- Welch, A. (2007). Making education policy. In R. Connell, C. Campbell, M. Vickers, A. Welch, D. Foley & N. Bagnall (eds.). *Education, change & society*. South Melbourne: Oxford University Press.
- White, R. & Wyn, J. (2008). *Youth & Society*. Melbourne: Oxford University Press.
- Wilson, B. & Wyn, J. (1987). *Shaping futures: Youth action for livelihood*. Sydney: Allen & Unwin.
- Wilson, B. (1989). *Early labour market experience of young people: An overview and proposals for future research*. Melbourne: National Youth Affairs Research Scheme.
- Wolbers, M. H. J. (2007). Patterns of Labour Market Entry: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school-to-work transitions in 11 European countries. *Acta Sociologica*, 50, No. 3, pp. 189-210.
- Wooden, M. & Warren, D. (2003). *The characteristics of casual and fixed-term employment: Evidence from the HILDA survey*. Working Paper No. 15/03. Melbourne: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 Wyn, J. & Lamb, S. (1996). Early school leaving in Australia: Issu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Journal of Education Policy*, 11 (2), 259-265.
- Wyn, J. & White, R. (1997). *Rethinking youth*. St. Leonards: Allen & Unwin.
- Wyn, J. & Woodman, D. (2006). Generation, youth and social change in Australia, *Journal of Youth Studies*, 9 (5), 495-514.
- Wyn, J. & Woodman, D. (2007). Researching youth in a time of change: A reply to Roberts, *Journal of Youth Studies*, 10 (3), 373-381.
- Wyn, J. (2004). Becoming Adult in the 2000s: new transitions and new careers, *Family Matters*, 68, 4-10.
- Wyn, J. (2007). Learning to 'become somebody well': Challenges for educational policy, *The Australian Educational Researcher*, 34, 35-52.
- Wyn, J. (2009a). *Touching the future: Building skills for life and work*. Camberwell, Victoria: Australian Council of Education Research.
- Wyn, J. (2009b). *Youth, health and welfare: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and wellbeing*. Melbourne: Oxford University Press.
- Wyn, J., Smith, G., Stokes, J., Tyler, D. & Woodman, D. (2008). *Generations and social change: Negotiating adulthood in the 21st Century*. Melbourne: Youth Research Centre.

- Xenos, P., Achmad, S., Lin, H. S., Luis, P. K., Podhisita, C., Raymundo, C. & Thapa, S.(2006). Delayed Asian transitions to adulthood: A perspective from national youth surveys. *Asian Population Studies*, 2(2), 149-185.
- Young, C. (1987). *Young people leaving home in Australia: The trend towards independence*. Australian Family Formation Project, monograph No. 9. Canberra: Department of Demography, ANU.
- 安達智子(2004), 大学生のキャリア選択: その心理的背景と支援, 日本労働研究雑誌 No. 533, 27-37.
- 石田浩(2005), 後期青年期と階層・労働市場, 教育社会学研究, 第79集.
- 岩上真珠(2003), ライフコースとジェンダーで読む家族, 有斐閣.
- 大石亜希子(2004), 若年就業と親との同別居 人口問題研究 60巻第2号.
- 大石美佳・松永しのぶ・伊藤嘉奈子・鈴木公基・前野澄(2007), 青年から大人への移行期の自立意識に関する研究: 大学生の自立意識の構造とその実態, 鎌倉女子大学学術研究年報 第7号 55-73.
- 荻谷剛彦・粒来香・長瀬正明・稲田雅也(1997), 進路未決定の構造: 高卒進路未決定者の析出メカニズムに関する実証的研究, 東京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第37巻.
- 荻谷剛彦 菅山眞次 石田浩(2000), 学校職安と労働市場, 東京大学出版会.
- 荻谷剛彦(2009) 学歴と階層 朝日新聞出版
- 玄田有史(2001), 仕事のなかの曖昧な不安, 中央公論新社.
- 玄田有史・曲沼美恵(2004), ニート, 幻冬舎.
- 小杉礼子編(2003), 自由の代償, 日本労働研究機構.
- 後藤道夫(2001), 収縮する日本型大衆社会, 旬報社.
- 小見山隆行(2007), 大学から職業への移行問題とキャリア教育の考察, 商学研究第47巻 3号, 53-79.
- 佐藤俊樹(2000), 不平等社会日本, 中公新書.
- 白井利明・安達智子・若松養亮・下村英雄・川崎友嗣(2009), 青年期と成人期にかけて社会への移行における社会的信頼の効果: シティズンシップの観点から, 発達教育学研究 20(3) 224-233.
- 田澤 実(2005), キャリア教育の導入と今後の進路選択研究の展望, 大学生を対象にした実証的研究のレビューに基づいて, 中央大学大学院論究(文学研究科編), 37, 189-201.

- 田中慶子(2006), 親との同居は生活満足度を高めるか：世代間の居住状態と未婚者の生活満足度, 季刊家計経済研究 Autumn, No. 72, 43-48.
- 太郎丸博編(2006), フリーターとニートの社会学, 世界思想社.
- 内閣府編(2003), 『平成15年度版 国民生活白書』.
- 内閣府編(2009), 『平成21年度版 国民生活白書』.
- 長峰伸治(2003), 親との葛藤からみたフリーター, 後藤宗理・大野木裕明編, 現代のエスプリ No. 427, 特集：フリーター, 至文堂.
- 福島大学(2007), 2006年度『大学卒業後のキャリア形成に関する調査』報告書.
- 堀有喜衣(2007), フリーターへの経路とフリーターからの離脱, 勁草書房.
- 本田由紀(2005), 若者と仕事：「学校経由の就職」を越えて, 東京大学出版会.
- 総務省庁(2009), 「労働力調査」
- 安福純子(2005), 大学生の進路問題と心理的意味, 大阪教育大学紀要(第IV部門), 53(2), 105-112.
- 文部科学省(2009), 「学校基本調査」
- 橋本俊昭(2004), 脱フリーター社会, 東洋経済新聞社.
- 宮本みち子(2004), ポスト青年期と親子戦略：大人になる意味と形の変容, 勁草書房.
- 宮本みち子(2005), 長期化する移行期の実態と移行政策 3-16, 社会政策学会編, 若者：長期化する移行期と社会政策, 法律文化社.
- 宮本みち子(2006), 比較文化研究：若者とジェンダー, 放送大学教育振興協会.
- 耳塚寛明(研究代表)(2000), 「高卒無業者の教育社会学的研究」, 科学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
- 山田昌弘(1999), パラサイト・シングルの時代, 筑摩書房.
- 山田昌弘(2010), なぜ若者は保守化するのか, 東洋経済新聞社.
- 労働政策・研究機構(1998), 「新規高卒労働市場の変化と職業への移行の支援」調査研究報告書 No. 114.
- 労働政策・研究機構(2000), 「フリーターの意識と実態：97人のヒアリング結果より」調査研究報告書 No. 136.
- 労働政策・研究機構(2001), 「大都市の若者の就業行動と意識：広がるフリーター経験と共感」調査研究報告書 No.146.
- 労働政策・研究機構(2007) 「大学生と就職：職業への移行支援と人材育成の視点から検討」労働政策研究報告書 No. 78.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 집 필 진 ◆

강영배 日本尚絅学院大学

김란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박수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경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가나다순

### ◆ 연구보조원 ◆

김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

##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 기관고유과제

- 10-R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 김지경·백혜정·임희진·이계오
-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조흥식
- 10-R02-1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 서정아·조흥식
- 10-R03 위기가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이춘화·윤옥경·진혜진·황의갑
- 10-R04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 / 임지연·송병국·이교봉·김영석
- 10-R05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III / 이종원·오승근·김은정
- 10-R06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유홍식
- 10-R07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 맹영미·길은배·전명기
- 10-R08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최창욱·민경석
- 10-R09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 관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송민경·박선영
- 10-R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총괄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현주·이명선·이은경·박경옥
-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 자료집 / 최인재·이기봉
- 10-R10-2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청송·김진호
-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 -한·미·일·중 4개국 비교- / 최인재·이기봉
-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집 -발달권·참여권- / 모상현·김영지
-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 모상현·김영지·김윤나·이중섭
- 10-R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I / 양계민·김승경
-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 문경숙·이현숙
- 10-R13-1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임재훈·최운정·안소연·윤소운
- 10-R14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단연구 I / 이해연·황진구·유성렬·이상균·정윤경
- 10-R15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I :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오해섭·김지연·정익중·정소연
- 10-R15-1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매뉴얼 / 김지연
- 10-R15-2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 김지연·정소연

##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박영균·이상훈·양숙미 (자체번호 10-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2**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연구 / 전영실·이승현·권수진·이현혜 (자체번호 10-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3**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은령·유영준·이명희·최복천 (자체번호 10-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조광수·박현준 (자체번호 10-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지적도구활용 영역 / 최동선·최수정·이건남 (자체번호 10-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0-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장근영·조광수 (자체번호 10-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학교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 권해수·김민성·강영신 (자체번호 10-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 임영식·조아미·정경은·정재천 (자체번호 10-R17-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 권일남·김태균·김정울·김지수·김영희 (자체번호 10-R17-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안선영·Hernan Cuervo·Johanna Wyn(자체번호 10-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 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 (자체번호 10-R18-1)

## ■ 수시과제

- 10-R1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 총괄보고서 / 김남수·이기봉·박일혁
- 10-R19-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김남수·이기봉·박일혁
- 10-R20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한상철·길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중·이명옥·이은경·최순중·김영지
- 10-R21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 황진구·김성경·남미애·정경은
- 10-R22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교사용) / 구본용·박제일·이은경·문경숙
-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 서정아·권해수

## ■ 용역과제

- 10-R24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이춘화·김정환·조운오
- 10-R25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양계민·김승경·조영희
- 10-R26 7~13세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성취포상제 운영모형 개발 / 백혜정·장근영
- 10-R26-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 : 패널조사계획 / 장근영·백혜정
- 10-R27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10-R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 양계민·김지경·김승경
- 10-R29 비행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시범사업 / 김지연(2011년 발간)
- 10-R30 졸업식 유형별 사례집 : 졸업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 맹영임
- 10-R31 보편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 김현철·최창욱·김지연·이춘화·오해섭
- 10-R32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 최창욱·김승경
- 10-R33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 윤철경·류방란·김선아
- 10-R34 2010년 청소년 백서 발간 / 김기현·김형주
- 10-R35 졸업식 및 입학식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위탁운영사업 / 성운숙·이창호
- 10-R36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최인재·김지경·임희진(2011년 발간)
- 10-R37 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 연구 / 문경숙·장근영
- 10-R38-1 외국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8-2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례집 / 김경준·모상현·서정아(2011년 발간)
- 10-R38-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사업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9-1 청소년 권리찾기로 청소년에게 행복을(청소년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39-2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청소년용 핸드북) / 김영지·이혜연
- 10-R39-3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40 2010 서울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평가 / 이기봉·김형주(2011년 발간)

##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0-s01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I 자료집 (1/26)
- 10-s02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3/9)
- 10-s03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 I 자료집 (3/19)
- 10-s04 제2차 연구성과 발표회 (4/15)
- 10-s0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5/6)

- 10-s06 제1차 청소년미래포럼 (6/21)
- 10-s07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6/29)
- 10-s0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현황과 개선과제·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6/29)
- 10-s09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Ⅱ 자료집 (7/2)
- 10-s10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활동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7/9)
- 10-s11 청소년멘토링 봉사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7/8)
- 10-s12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Ⅲ 자료집 (7/27)
- 10-s13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8/18)
- 10-s14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Ⅱ 자료집 (8/19)
- 10-s15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 (8/24, 25)
- 10-s16 국제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방안 (8/25)
- 10-s17 다문화관련 정책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8/26)
- 10-s18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평가 (8/27)
- 10-s19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자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9/10)
- 10-s21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9/29)
- 10-s22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9/30)
- 10-s23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9/28)
- 10-s24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가족지원 서비스 (10/13)
- 10-s25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안 (10/8)
- 10-s26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Ⅰ 콜로키움 자료집 (10/8)
- 10-s27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Ⅳ 자료집 (10/14)
- 10-s28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토론회 (10/16)
- 10-s29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10/19)
- 10-s30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10/26)
- 10-s3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8)
- 10-s3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참여권- (11/5)
- 10-s33 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11/5)
- 10-s3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안) 공청회 (11/8)
- 10-s35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사례 워크숍 (11/22, 23)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5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5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5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통권 제59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타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길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중·이명  
옥·이은경·최순종·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장근영·임영식·정경은·조아미·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 ■ 기타 발간물

NYPI YOUTH REPORT 7호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4월)

NYPI YOUTH REPORT 8호 :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6월)

NYPI YOUTH REPORT 9호 :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8월)

NYPI YOUTH REPORT 10호 :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역량강화(10월)

NYPI YOUTH REPORT 11호 : 멘토링과 청소년사회참여(11월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4-01  
연구보고 10-R18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총괄보고서**

인 쇄 2010년 12월 22일

발 행 2010년 12월 2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청송문화인쇄사 전화 02)2676-4573 대표 한상환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912-7(93330)

978-89-7816-911-0(세트)

